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2012. 12

홍승현 · 원중학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경제를 구성하는 많은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려는 청년층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층 실업이 44~46%대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이를 선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으나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극복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청년층에서 실업률은 낮으나 이와 함께 고용률도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다는 것은 구직을 단념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년층 고용을 둘러싼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과 관련한 특징의 하나로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시작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일하던가, 아예 일자리가 없어 실업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는 이후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노동시장이 호황인가 불황인가는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다. 개인이 통제하지 못한 요소로 인해 개인의 삶 및 국가경제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개인이 통제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한 차이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기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자신의 능력 혹은 의지와는 무관한 거시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다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에 비해 고용이나 임금 모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회피(hedge)가 불가능한 충격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개인에의 영향을 가능하면 최소화함으로써, 전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의지를 발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여러 경기부양책을 펴 왔고, 노동시장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다.

본 연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 지원정책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지는 의미이다. 청년층의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청년기의 실직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구직의 어려움이나 하향취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인 기대소득 수준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부 측면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에 있어 기대세수 감소뿐 아니라 실업의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는 부정적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특화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경험 자체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실업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개인 측면의 비용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도 실업의 해결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

을 볼 때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홍승현 박사와 원종학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청년 노동시장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준 한국노동연구원의 남재량 박사를 비롯한 보고회에서의 토론자, 익명의 논평자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수집, 기초데이터 및 선행연구의 정리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함께한 장광남 연구원, 김정현 전문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 편집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준 신수미 주임연구행정원, 윤혜순 주임연구행정원,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2. 12.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률의 급등은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층 실업률은 5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1년 4.2%에서 2011년에는 3.5%로 감소하였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10.2%에서 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하며 고용정책 역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고용상황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업률과 함께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은 낮으나 이와 동시에 고용률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구직활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바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설령 실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고용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부터 청년 고용을 둘러싼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청년층을 둘러싼 고용환경의 악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화함으로써 인적자

본을 축적하지 못해 인적자본 레벨이 장기적으로 저하하여, 장래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빈곤의 연쇄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청년기의 실업은 단순히 중장기적인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주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과급시키는 효과가 있다.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청년층의 실업을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청년실업이 지니는 의미도 달라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도 달라진다. 청년실업을 다루는 데 양자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청년시절에 실업을 경험하면, 그 사실이 낙인(stigma/scar)이 되어 그 뒤에서도 임금이나 고용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이러한 불이익은 경제 및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쩌다 보니 불황기에 졸업을 하는 '세대'에 속한 것이 본인의 그 뒤의 취업상태나 근로조건에 심각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는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개인적·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으나, 발생 원인의 규명보다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실업의 발생과 청년실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낙인효과(scar/stigma effect)의 존재이다. 낙인효과란 실업의 경험이 이후의 임금수준이나 고용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청년기 실업의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낙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낙인효과 존재 여부, 존재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 팽창기인 1995년, 극단적인 경기침체기인 1998년, 그리고 IMF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반영하여 이후 경기 팽창기인 2002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세 개의 코호트를 생성하여, 각 코호트의 임금과 고용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낙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1998년 코호트가 겪는 부정적 외부충격이 해소되기까지는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의 경우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03년의 5년의 기간 동안, 청년층의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는 다른 시기의 기간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기간에 청년층의 이직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임금방정식의 추정 결과 1998년 코호트의 초임은 오히려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더 일찍 감소 추세를 경험하면서 약 6년가량 빠른 시기에 극댓값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극댓값 수준도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시간당 임금수준과 취업여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코호트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1998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 모두에서 1995년 코호트에 비해 초기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수준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년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수에 있어서 감소분은 코호트에 해당하는 개인당 평균 65.4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사라져서, 약 3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기의 취업확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서,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의 평균값과 비교해 봤을 때 1998년 코호트의 취업확률은 첫해에는 37.8%, 둘째 해에는 25.2%까지 낮았다. 이러한 낮은 취업확률 혹은 높은 실업확률은 실업급여 등을 통한 재정지출에

도 영향을 미쳐, 실업자 개인에게 2년간 약 18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자신의 능력 혹은 의지와는 무관한 거시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다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에 비해 고용이나 임금 모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회피(hedge)가 불가능한 충격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개인에의 영향을 가능하면 최소화함으로써, 전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의지를 발현할 수 있다.

본고의 결과를 통해 특히 강조할 점은, 이러한 노동시장 지원정책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지는 의미이다. 청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청년기의 실직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구직의 어려움이나 하향 취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인 기대소득수준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부 측면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에 있어 기대세수 감소뿐 아니라 실업의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적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특화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경험 자체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실업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개인 측면의 비용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도 실업의 해결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 차

I. 도입	19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23
1. 청년실업 문제의 개요	23
2.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 현황	28
가.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	28
나. 우리나라의 NEET 문제	34
3. 청년실업의 원인	42
가. 노동공급 측면	42
나. 노동수요 측면	51
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	57
4. 경기변동과 청년 노동시장	59
5. 청년실업과 노동정책	63
가. 한국	63
나. 미국	66
다. 영국	68
라. 독일	70
마. 일본	71
바. 청년실업정책 평가	72
III. 청년실업의 재정적 부담	77
1. 청년실업의 낙인효과	77
가. 낙인효과	77
나. 낙인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79

2. 청년실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91
가. 정부 세입 측면	95
나. 정부지출 측면	110
IV. 실증분석	113
1. 전체 고용관련 지표의 비교	115
2. 전체 임금관련 지표의 비교	123
3. 경기침체의 고용 효과의 추정	131
가. 임금에의 효과 추정	134
나. 고용에의 효과 추정	136
4. 중장기적 재정 효과 분석	139
V. 결론	146
참고문헌	150
〈부록 1〉 주요국의 실업 관련 지표	155
〈부록 2〉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평가	170

표목차

〈표 II-1〉 전연령층 및 청년층 고용동향	25
〈표 II-2〉 각국의 조정실업률(Harmonised unemployment rates)	26
〈표 II-3〉 추가취업희망자 발표	28
〈표 II-4〉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28
〈표 II-5〉 실업률 국제비교	31
〈표 II-6〉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3
〈표 II-7〉 우리나라 니트(NEET)족의 범위	34
〈표 II-8〉 비구직 니트의 연령별 구성비율/연령별 인구 구성비율	35
〈표 II-9〉 근로형태별 청년 근로자의 비율	40
〈표 II-10〉 연령대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43
〈표 II-11〉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의 변화	52
〈표 II-12〉 주요 기업들의 채용추이	53
〈표 II-13〉 규모별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55
〈표 II-14〉 규모별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55
〈표 II-15〉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58
〈표 II-16〉 역대 청년실업대책	64
〈표 II-17〉 청년고용종합대책의 세부사업 현황	66
〈표 II-18〉 청년고용정책 분류	76
〈표 III-1〉 낙인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84
〈표 III-2〉 낙인효과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86
〈표 III-3〉 시기에 따른 낙인효과와 정부 재정예의 영향	92
〈표 III-4〉 연령대별 국세 총수입 비중	95
〈표 III-5〉 소득변동성에 따른 세금 구분	96

〈표 III-6〉 소득세 기본세율	97
〈표 III-7〉 연령별 과세표준금액	99
〈표 III-8〉 소득수준별 과세표준금액	100
〈표 III-9〉 연도별 표준보수월액 및 직장보험료율,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	102
〈표 III-10〉 2012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103
〈표 III-11〉 2012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	104
〈표 III-12〉 사회보험료율 종합	107
〈표 III-13〉 전체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107
〈표 III-14〉 소비관련 지출의 주요 품목별 평균 유효세율	109
〈표 III-15〉 부가가치세의 소비효율성 비교(2009)	110
〈표 III-16〉 연령대별 실업급여 수급 실적(2011)	112
〈표 IV-1〉 졸업 후 연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의 코호트별 변화	118
〈표 IV-2〉 졸업 후 연평균 실업률의 코호트별 변화	119
〈표 IV-3〉 평균 근속년수 추세(대졸 남성)	120
〈표 IV-4〉 남성 평균 근속년수 변화추세	123
〈표 IV-5〉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126
〈표 IV-6〉 대졸 청년 남성의 시간당 실질임금의 분포	128
〈표 IV-7〉 코호트별 관측치 수	132
〈표 IV-8〉 주요변수의 코호트별 기초통계량	132
〈표 IV-9〉 패널 Tobit 모형 추정 결과	135
〈표 IV-10〉 패널 Probit 모형 추정 결과	138
〈표 IV-11〉 재정수입 감소 추계(모형 1)	142
〈표 IV-12〉 재정수입 감소 추계(모형 4)	143

그림목차

[그림 II-1] 청년층 고용 지표의 추이	24
[그림 II-2] 성별 연령별 고용률 추이	29
[그림 II-3] 청년층과 전체의 실업률 추이와 경제성장률	30
[그림 II-4] 성별 청년실업률 추세 및 전체 실업률과의 비율 추세	30
[그림 II-5] 주요국 청년층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비율 추이	31
[그림 II-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3
[그림 II-7] 비구직 니트의 증가추세	36
[그림 II-8] 연령별 비구직 니트 현황	37
[그림 II-9] 성별 NEET족 비율	37
[그림 II-10] 학력별 비구직 니트족의 비율	38
[그림 II-11] 학력별 NEET족 비율	39
[그림 II-12] 청년층 실업률의 상대적 경기민감도 비교	41
[그림 II-13] 2008~2009년 사이 실업률의 OECD회원국 비가중평균의 변화	41
[그림 II-14] 상급학교 진학률	42
[그림 II-15]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44
[그림 II-16] 고등교육에 필요한 개인적 비용과 효과	45
[그림 II-17] 연령대별 입직률 변화	46
[그림 II-18] 연령대별 이직률 변화	47
[그림 II-19] 취업에 걸리는 시간과 평균 근속기간	48
[그림 II-20]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49
[그림 II-21] 졸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현재 대기업 취업자의	

입사경로	51
[그림 II-22] 산업별 고용 비중과 증가율의 변화	52
[그림 II-23]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	56
[그림 II-24]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56
[그림 II-25]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57
[그림 II-26] 실업률 증가의 청년층과 전체의 비교	60
[그림 II-27]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의 증가	60
[그림 II-28] 경기변동과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	61
[그림 II-29] 경기변동과 전체대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62
[그림 II-30]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65
[그림 II-31]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의 구조	70
[그림 III-1] 25~29세 청년층의 인구비중 변화	94
[그림 III-2] 과세표준 금액과 기본세율	98
[그림 III-3] 경제성장률, 실업률, 노동시장정책 지출/GDP 추이	111
[그림 IV-1]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113
[그림 IV-2] 코호트별 남성 대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코호트별 경황률 vs. 전체 경황률과의 비율)	116
[그림 IV-3] 코호트별 남성 대졸이상 실업률의 변화 (실업률 vs. 전체실업률과의 비율)	119
[그림 IV-4] 평균 근속년수의 추이	121
[그림 IV-5] 청년층의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	122
[그림 IV-6]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시간당임금상승률	123
[그림 IV-7] 코호트별 시간당 실질임금의 추세	125
[그림 IV-8] 연령에 따른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의 변화	126
[그림 IV-9] 1년차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의 분포	129
[그림 IV-10] 2년차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	130

[그림 IV-11] 5년차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	130
[그림 IV-12] 코호트별 졸업 후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	133
[그림 IV-13] 로그 시간당 평균임금의 추정치와 월평균 근로시간(모형 1)	141
[그림 IV-14] 로그 시간당 평균임금의 추정치와 월평균 근로시간(모형 4)	143
[그림 IV-15] 코호트별 실업률 추정치의 추이	145

I. 도입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Employment Outlook 2012에 의하면, 2001년 6.4%였던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이 2011년에는 8.2%로 1.8%p 증가하였으며,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12.4%에서 16.2%로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업률의 급등은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스의 경우 실업률이 2001년의 10.4%에서 2011년에는 17.9%로 상승하였으며, 스페인은 같은 기간 10.5%에서 21.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 현재 청년층 실업을 보면 그리스가 44.4%, 스페인은 46.4%로 대략 15~24세 청년의 2명 가운데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1년 4.2%에서 2011년에는 3.5%로 감소하였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10.2%에서 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노동시장은 훌륭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이는 상당부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rograms)에 대한 투자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지표로 파악한 우리나라의 실업 상황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하며 고용정책 역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고용상황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업률과 함께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은 낮으나 이와 동시에 고용률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

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OECD의 Employment Outlook 2012에 제시되어 있는 각국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63.9%로 OECD 평균인 64.8%보다 1%p 가깝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5~24세 연령층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OECD 평균이 39.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1%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16.8%p나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구직활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바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설령 실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고용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부터 청년 고용을 둘러싼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청년층을 둘러싼 고용환경의 악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학습능력이 높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워야 할 시기에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화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해 인적자본 레벨이 장기적으로 저하하여, 장래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빈곤의 연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청년 때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녀 교육에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저하될 것이며, 자녀들 역시 열악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청년기의 실업은 단순히 중장기적인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주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다. 개인적인 실업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의 악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일반적으로 실업의 증가는 사회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청년실업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청년실업 문제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청년실업 문제는 프리터(freeter)나 니트(NEET)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 내지는 때이른 노동시장 은퇴에 관한 문제와 실업을 하는 시기가 청년기라는 점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감소 및 낙인효과와 관련한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청년실업을 개인의 선택 혹은 불안정한 취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는 청년시기에 실업을 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을 다루는 데 양자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청년시절에 실업을 경험하면 그 뒤에서도 임금이나 고용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불이익은 경제 및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쩌다 보니 불황기에 졸업을 하는 '세대'에 속한 것이 본인의 그 뒤의 취업상태나 근로조건에 심각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는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된 측면인 경기순환의 노동시장에의 영향은 이러한 청년층의 특징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변동이 청년층의 고용시장에 외생적 충격을 통해 어떻게 중장기에 걸쳐 재정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주로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실업의 원인 분석 및 청년실업과 경제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경기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고용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청년실업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불가결한 분석임에

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세대별로 발생하는 고용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청년실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청년노동시장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실업의 특징 및 청년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청년실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실증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실업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제Ⅴ장은 전체 내용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 서술하고, 부록에서는 주요국의 실업 관련 지표와, 다양한 청년 노동시장 정책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기로 한다.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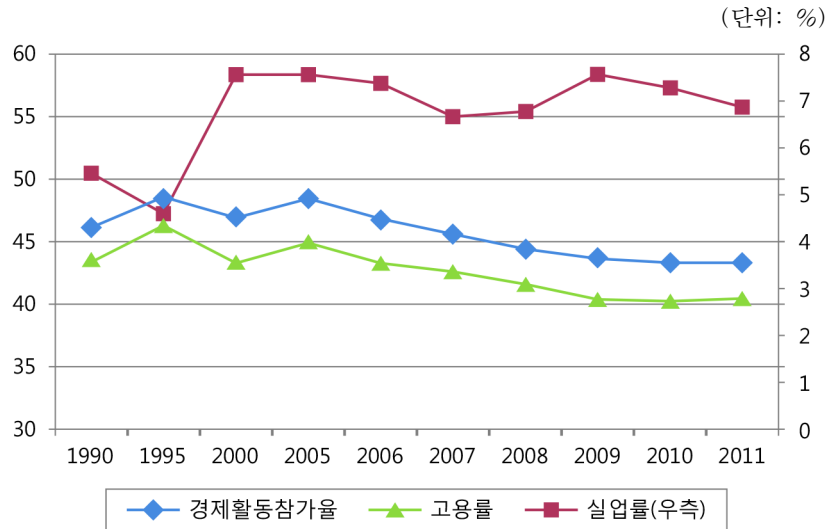
지난 10여 년간 청년층 고용 및 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절에서는 청년층 고용시장의 현황 및 청년실업의 문제점들을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년실업 문제가 경기순환적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실업 문제의 개요

청년실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 고용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이라는 연령층이 정확히 어떤 연령대를 나타내는지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비교에서 사용되는 청년(Youth)층은 15~24세의 연령층을 지칭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비율이 높고, 남성들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고려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15~29세를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청년실업률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ext{청년실업률(\%)} = \frac{\text{15 ~ 29세 실업자}}{\text{15 ~ 29세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그림 II-1] 청년층 고용 지표의 추이



[그림 II-1]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청년층의 고용과 관련된 지표-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청년층 고용지표들의 추이를 보면, 1997년 IMF 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의 큰 상승이 있었고, 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실업률이 약간 낮아지는 듯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높아졌다가 201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에 따라 변동을 하는 실업률과는 달리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감소는 최근 계속 지적되고 있는 청년층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문제 및 비노동력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¹⁾

1) 청년층의 NEET족화, 비노동력화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의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25

〈표 II-1〉 전연령층 및 청년층 고용동향

(단위: 천명, %)

연령 계층별	가상특성항목 분류 ¹⁾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5세이상인구	30,887	33,659	36,186	38,300	38,762	39,170	39,598	40,092	40,590	41,052
	경제활동인구	18,539	20,845	22,069	23,689	23,934	24,166	24,303	24,334	24,661	25,004
	취업자	18,085	20,414	21,156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실업자	454	430	913	833	783	733	725	829	832	759
	비경제활동인구	12,348	12,814	14,118	14,610	14,828	15,004	15,295	15,758	15,929	16,048
	경제활동참가율	60.0	61.9	61.0	61.9	61.7	61.7	61.4	60.7	60.8	60.9
	실업률	2.4	2.1	4.1	3.5	3.3	3.0	3.0	3.4	3.4	3.0
	고용률	58.6	60.6	58.5	59.7	59.7	59.8	59.5	58.6	58.7	59.1
청년층	15~29세 인구	11,531	11,734	11,243	9,920	9,843	9,855	9,822	9,780	9,705	9,589
	경제활동인구	5,312	5,705	5,281	4,815	4,614	4,506	4,381	4,281	4,222	4,164
	취업자	5,022	5,443	4,879	4,450	4,270	4,202	4,084	3,957	3,914	3,879
	실업자	290	263	402	366	344	304	297	324	308	285
	비경제활동인구	6,219	6,028	5,962	5,104	5,229	5,349	5,441	5,500	5,484	5,425
	경제활동참가율	46.1	48.6	47.0	48.5	46.9	45.7	44.6	43.8	43.5	43.4
	실업률	5.5	4.6	7.6	7.6	7.4	6.7	6.8	7.6	7.3	6.9
	고용률	43.6	46.4	43.4	44.9	43.4	42.6	41.6	40.5	40.3	40.5

주: 1) 구직기간 1주 기준 데이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고용은 다른 연령층의 고용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관련 지표를 전 연령층과 청년층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 〈표 II-1〉이다. 표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 연령층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것과, 실업률이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그리고 전 연령층의 고용률은 지난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약간 상승한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청년층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은 아니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II-2〉 각국의 조정실업률¹⁾(Harmonised unemployment rates)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본	2.1	3.1	4.7	4.4	4.1	3.9	4.0	5.1
미국	5.6	5.6	4.0	5.1	4.6	4.6	5.8	9.3
영국	6.9	8.5	5.4	4.8	5.4	5.3	5.6	7.6
프랑스	8.4	11.0	9.0	9.3	9.3	8.4	7.8	9.4
스페인	13.0	18.4	11.1	9.2	8.5	8.3	11.4	18.0

주: 1) ILO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것으로, 실업자는 생산연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지 않고 취업 가능한 상태로, 한편 구직활동(자영 개업을 위한 준비 등을 포함)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실업률은 군인을 제외한 노동력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 수의 비율로 산출된 비율. 본표의 데이터는 가능한 한 시계열로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ILO가이드라인과 정합되도록 OECD가 조정한 것. 조정실업률이란, Eurostat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맞추어, 2009년 1월 이후, OECD에 있어 지금까지의 표준화 실업률(Standardised unemployment rates)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것.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 "Labour Force Statistics(MEI)" 2010년 7월 현재

이상은 청년층의 고용관련 지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전 연령층과 비교를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지표, 특히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국의 실업률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표 II-2〉는 OECD 주요국의 조정실업률(Harmonized unemployment rates)을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높으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일본의 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실업률도 5.1%, 스페인의 경우 18%를 초과하는 등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0%에서 3.4%로 0.4%p 상승에 그치는 등 3%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등 실업률로 판단할 경우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차 경제가 회복되면서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실업률 지표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업률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고용관련 지표들 중 유독 실업률 지표가 체감경기와의 괴리문제로 지적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기현(2012)은 국민들이 실업자로 인식하는 그룹과 실제 국제적 기준에서 조사되는 실업자 그룹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로 집계되는 실업자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실업자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괴리가 불가피하다. 박기현(2012)은 이러한 인식의 괴리에 중심에 통계상에는 실업자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실업자라고 인식하는 '사실상 실업자'가 있음을 주목하고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경계에 있는 '불완전 취업자'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에 있는 '잠재적 실업자'가 공식지표와 체감지표의 괴리에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는 남재량(2011)에서 취업애로층(실업자에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자 및 쉬는 자를 포함)의 증가를 체감실업률과의 괴리 원인으로 지목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국들의 실업률 지표를 보면 대부분 ILO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방법으로, 각 나라의 특징에 맞게 일부 조정한 기준 실업률을 정의하고 있다.²⁾ 다만, 기준 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의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개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실업기간이나, 불완전취업자, 한계실업자, 실망실업자 등을 고려하는 U1~U6까지 6개의 실업률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캐나다도 이와 유사하게 R1~R8까지 8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실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실망실업자나 불완전취업자 과

2) 주요국의 실업률 정의 및 사용하는 정의에 따른 실업률에 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현행 실업률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매월 고용동향에 추가취업희망자와 구직단념자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전취업자와 실망실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3〉 추가취업희망자 발표

(단위: 천명)

	2011. 6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18시간 미만 취업자	1,024	1,112	1,093	1,089	1,081	1,081
· 추가취업 희망자	117	128	132	118	114	119
36시간 미만 취업자	3,179	3,346	3,332	3,367	3,290	3,196
· 추가취업 희망자	374	370	390	366	385	37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2012.6

〈표 II-4〉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단위: 전년동월 대비, 천명)

	2011. 6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구직단념자 ¹⁾	215	182	208	166	190	206
(증감)	3	-20	-12	-46	-66	-10

주: 1)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2012. 6

2.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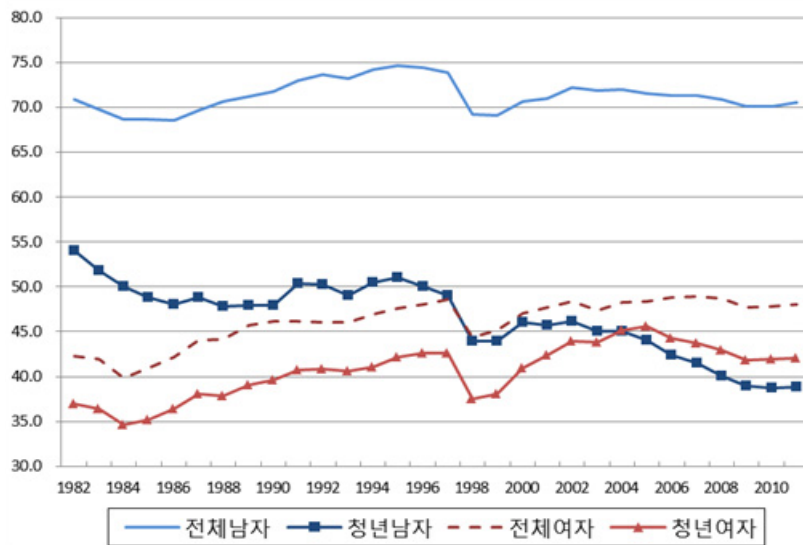
가.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보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다. 특히 청년 남성에게 있

어 고용률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2004년 이후에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청년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아져서 그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I-2]).

[그림 II-2] 성별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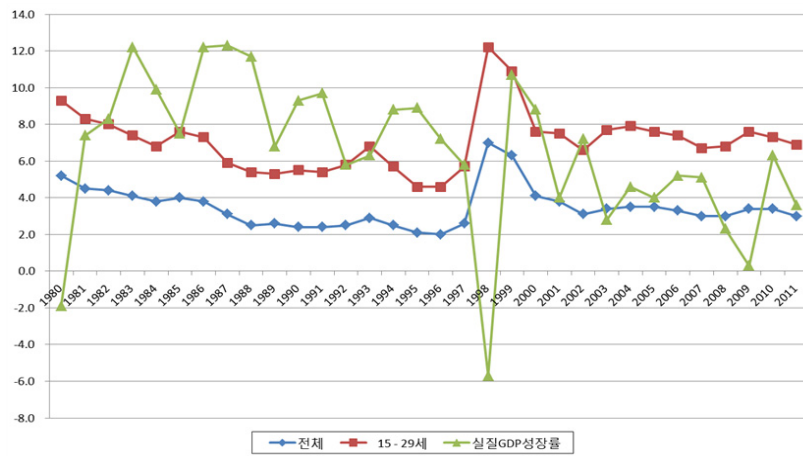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용률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남성의 경우 고용률이 IMF사태 이후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되어 7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층 남성의 경우는 IMF사태의 충격 이후 잠시 유지되던 고용률이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고용률의 증가가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여성은 고용률을 유지 혹은 소폭 상승하는 반면 청년 여성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여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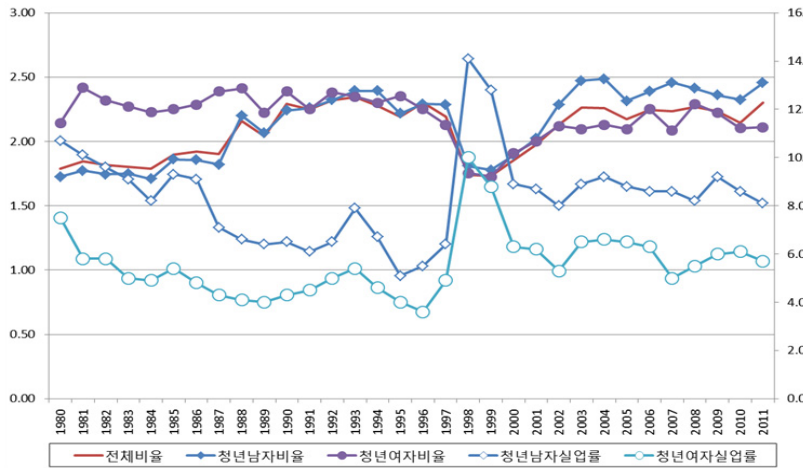
실업률의 경우 1980년대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IMF사태로 크게 높아졌다가 하락했는데, IMF사태 이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는 못하고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사태 직전에는 청년실업률이 4%대, 전체 실업률은 2%대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청년층 실업률의 경우 6~8% 정도 수준에서 전체 실업률의 경우 3~4%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림 II-3] 청년층과 전체의 실업률 추이와 경제성장률
(단위: %)



[그림 II-4] 성별 청년실업률 추세 및 전체 실업률과의 비율 추세
(단위: %)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31

OECD 평균으로 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보통 전체 실업률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IMF사태로 잠시 하락하고 그 이후 다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 남성들의 경우 IMF사태 이후 전체 남성에 비해 2.4배 정도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 여성의 경우는 IMF사태 이후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II-5〉 실업률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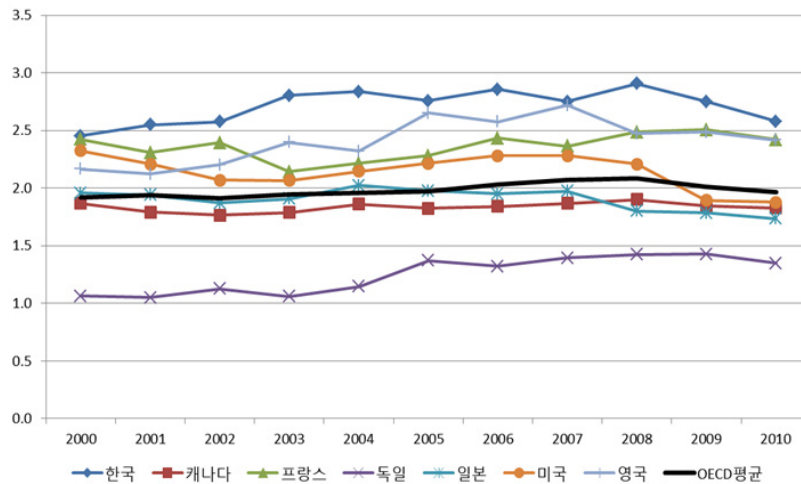
(단위: %)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OECD 평균
전체 실업률	3.8	8.1	9.3	7.2	5.3	9.8	7.9	8.5
청년실업률	9.8	14.8	22.5	9.7	9.2	18.4	19.1	16.7
청년/전체 비율	2.6	1.8	2.4	1.3	1.7	1.9	2.4	2.0

주: 전체 실업률은 15~64세 기준, 청년실업률은 15~24세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재인용, 필자 계산

[그림 II-5] 주요국 청년층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2000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청년층(15~24세)의 전체인구 대비 실업률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5]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변동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나라들이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모습은 서로 엇갈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 실업과 전체 실업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2.0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5년 이후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1.5배를 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계속하여 2.5배를 넘고 있으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0배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독일의 경우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안정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IMF사태 이후 잠시 하락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소폭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해서, 최근에는 IMF사태 당시 수준인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에 뚜렷한 하락세를, 그 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IMF사태 당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다시 2000년대 중반부터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II-6〉 및 [그림 II-6]).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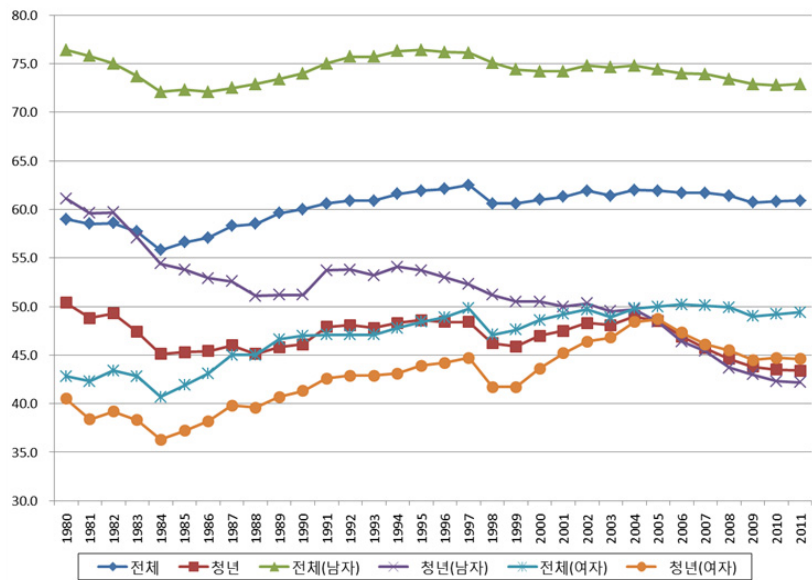
〈표 II-6〉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전체	청년	전체(남자)	청년(남자)	전체(여자)	청년(여자)
1980년대	58.07	46.43	73.38	54.36	43.78	38.9
1990년대	61.27	47.66	75.51	52.6	47.95	43.13
2000년대	61.48	46.59	73.98	46.87	49.6	46.36

[그림 II-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의 꾸준한 하락이 또한 특징적이다. 1980년도에는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은 61.1%, 여성은 40.5%이던 것이, 남성의 경우는 꾸준히 하락하고 여성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을 앞지르게 되었고, 2011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42.2%와 44.6%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우리나라의 NEET 문제

이러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 추세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는 또한 공식통계와 체감실업률 사이의 괴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크게 변동하지는 않는 데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청년층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표 II-7〉 우리나라 니트(NEET)족의 범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쉬었음	학생	기타
무급 가족 봉사자						육가, 가사,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등
한국형 NEET의 범위						

자료: 전경련(2009)

니트란 교육 중이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으며,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로, 1999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청년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한 개념이었다.³⁾ 니

3)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구속이 강한 정규직 사원은 희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단기적일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청년층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을 '프리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35

트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파악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므로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⁴⁾ 우리나라의 니트족 범위는 <표 II-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일부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와 근로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다.

니트족은 보통 구직 니트족(활발하게 직업을 구하는 니트족)과 비구직 니트족(여러 이유로 구직행위를 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구분되는데, 구직 니트족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반면, 비구직 니트족은 청년층의 비노동력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재량(2011a)에서 추정된 우리나라의 15~34세의 비구직 니트족 규모는 1997년에는 318만명에서 2010년에는 996만명으로 연평균 46%씩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8> 비구직 니트의 연령별 구성비율/연령별 인구 구성비율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19세	0.76	0.64	0.65	0.53	0.50	0.50	0.49	0.53
20~24세	1.97	1.97	2.02	1.98	1.84	1.77	1.79	1.88
25~29세	1.02	1.08	1.04	1.19	1.27	1.29	1.31	1.28
30~34세	0.42	0.46	0.48	0.48	0.56	0.59	0.57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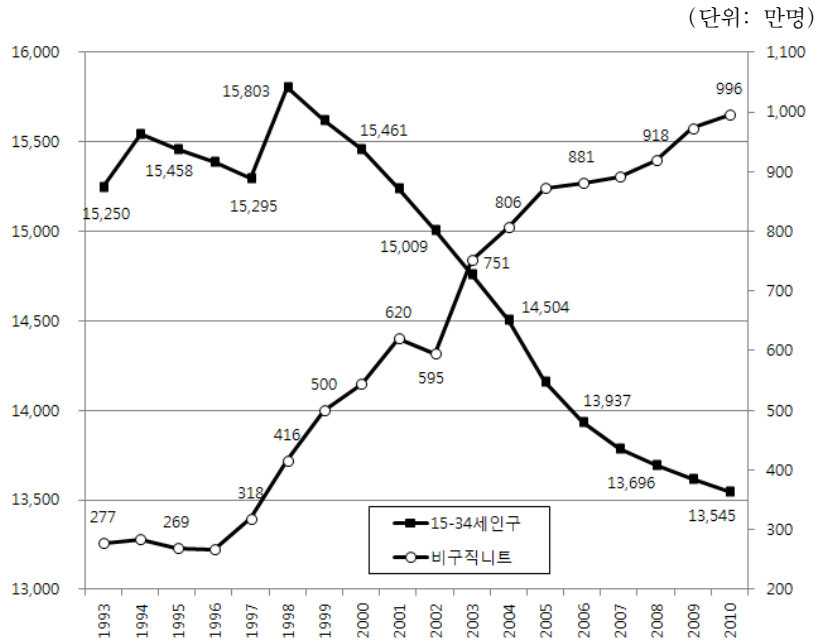
자료: 남재량(2011a), 필자 계산

터'(freeter: free+arbeiter)라 부르며 청년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NEET와 프리터의 차이점은 프리터의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취업을 하므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나 NEET의 경우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4) NEET에 대해 일본 내각부는 15~34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학이나 가사를 하지 않는 무업자 가운데 취업희망을 표명하였으나 구직활동은 하고 있지 않는 개인(비구직형), 또는 상기 무업자 가운데 취업희망을 표명하지 않는 개인(비희망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비구직 니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20~24세와 25~29세로, 특히 25~29세의 비중은 2004년 27.9%에서 2010년에는 35.5%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연령층의 인구비율인 27.5%(2010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8>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20~24세 그룹이지만, 25~29세 그룹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니트족의 전반적인 고령화추세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II-7] 비구직 니트의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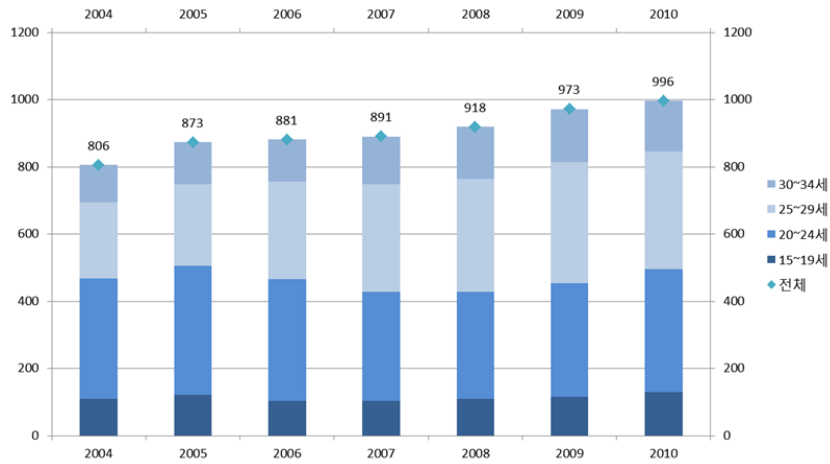


자료: 남재량(2012)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37

[그림 II-8] 연령별 비구직 니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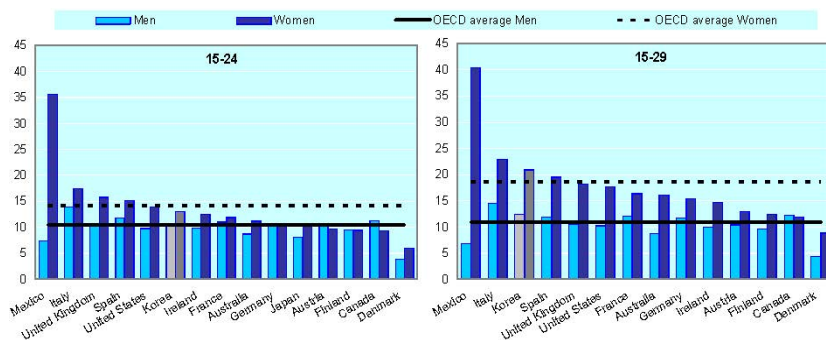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청년층의 니트축화 문제는 OECD의 보고서(2007)에서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년층 니트족과 다른 나라의 청년층 니트족을 비교하면,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15~24세 연령층보다는 15~29세 연령층에서, 특히 여성에서 니트족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9] 성별 NEET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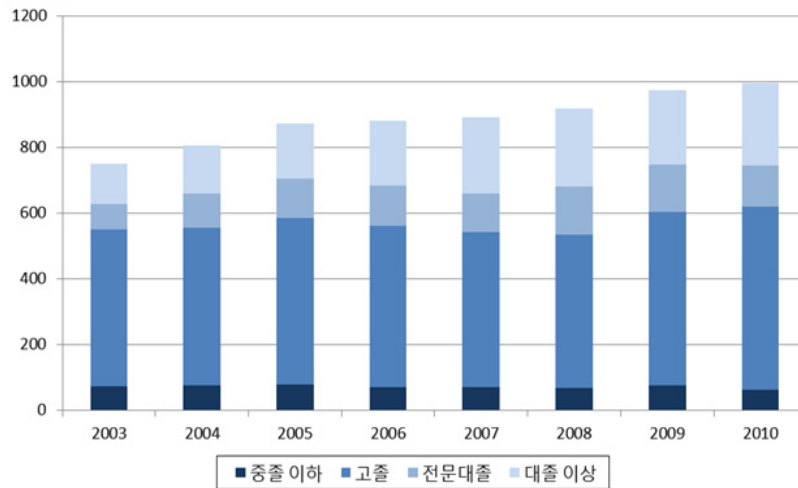


자료: OECD(2004)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5~24세는 OECD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이다가, 25~29세가 추가되면서 남녀 모두 OECD의 평균을 넘어서는 니트족 비율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 비율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II-10] 학력별 비구직 니트족의 비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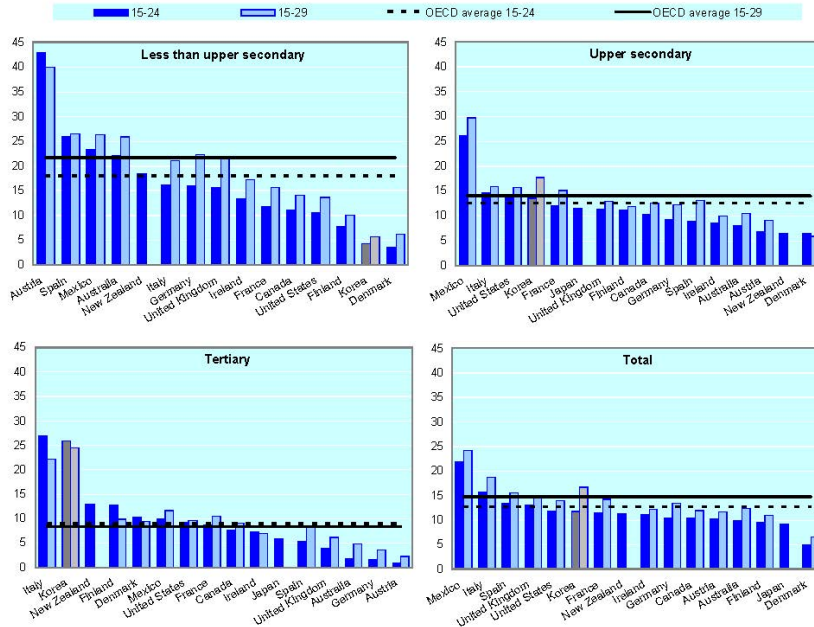


자료: 남재량, 2011a

학력 측면에서 볼 때, [그림 II-10]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비구직 니트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전체 비구직 니트의 37.8%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니트족 비율을 학력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니트족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1] 학력별 NEET족 비율



자료: OECD(2004)

청년층 고용상황의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의 질(quality)' 하락 경향이다. 이는 청년층 인구는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은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의 비정규직화 경향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청년층의 비정규직은 지난 10여 년간 약 60%가량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2001년 8월에는 22.8%이던 것이 2009년 8월에는 34%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의 대부분이 2001~2004년 사이에 이루어져서, 최근 들어 부각되는 문제로 보기는 힘들다.

〈표 II-9〉 근로형태별 청년 근로자의 비율

(단위: %)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정규직/전체근로자	55	55	48	43	44	45	45	47	45
비정규직/전체근로자	20	21	23	25	25	25	25	24	24
비정규직/임금근로자	27	27	33	37	37	36	36	3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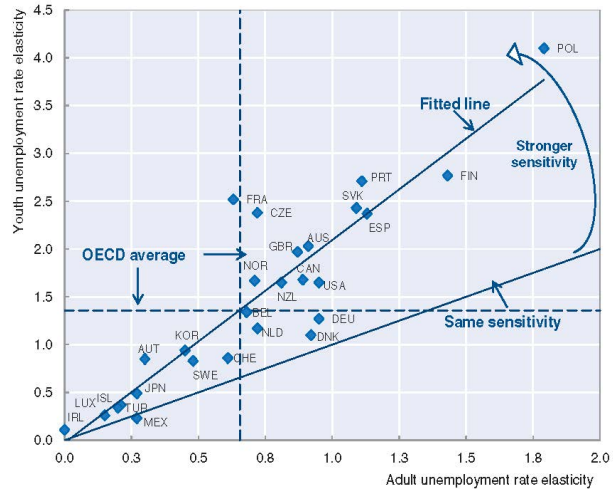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청년층의 고용은 경기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I-12]).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문제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세계경제는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고용상황에 있어서는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지표들이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시장의 충격은 청년층에 더 크게 작용하였는데, 2008~2009년 사이에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OECD 평균 8%p 이상 상승하였다([그림 II-13]).⁵⁾

5) 청년층의 실업률이 장년층에 비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년층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층의 경우 기업특수 숙련(firm specific skill)이 중·장년층에 비해 부족하므로 경기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경우 인적자본에 투자를 할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길어 인적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경기변동을 비롯한 상황의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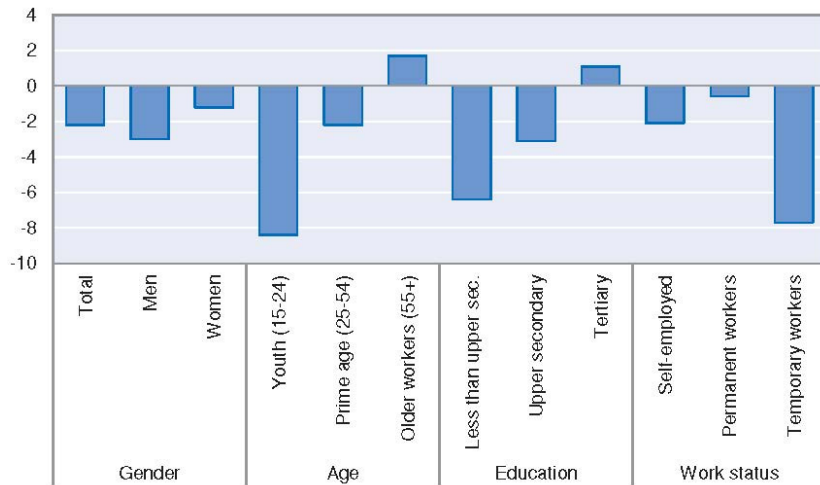
[그림 II-12] 청년층 실업률의 상대적 경기민감도 비교

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response to a 1% point deviation from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GDP, 1996-2007



자료: OECD(2010)

[그림 II-13] 2008~2009년 사이 실업률의 OECD회원국
비가중평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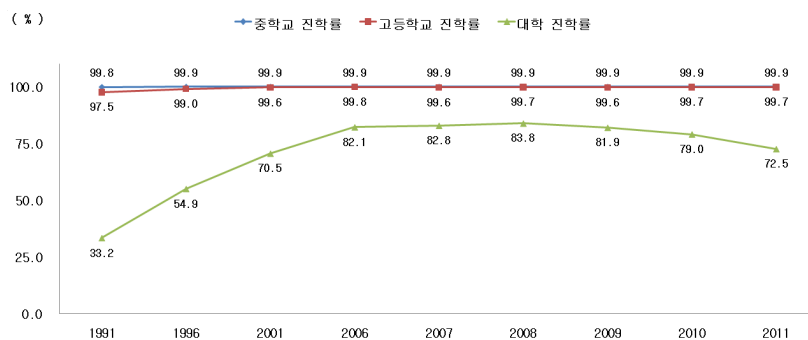
3. 청년실업의 원인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면 크게 노동공급 측면, 노동수요 측면,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구분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업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노동공급 측면

청년실업의 원인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들 수 있다. [그림 II-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1년 33.2%이던 대학진학률이 10년 후인 2001년 70.5%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5년 후인 2006년에는 82.1%로 80%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급격히 상승한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72.5%까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1990년 이후 급속히 높아진 대학진학률은 같은 시기 청년층에서 고학력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II-14] 상급학교 진학률



자료: 통계청(2012)

이러한 급격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타 OECD 국가들에서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12』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비율은 40%로 동 연령대의 캐나다(51%), 일본(45%), 미국(42%)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인 31%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학력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학력 계층이 젊은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학력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0>은 연령대별 고등교육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가별로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5~34세 그룹에서의 고등교육자 비율이 2010년 현재 65%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최근 약간 하향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자의 비율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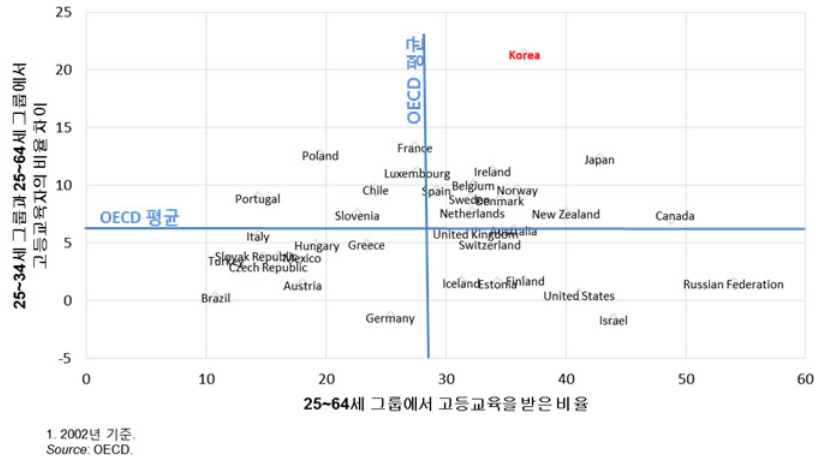
<표 II-10> 연령대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단위: %)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호주	38	44	44	35	30
캐나다	51	58	57	47	42
프랑스	29	43	34	22	18
독일	27	26	28	27	25
일본	45	57	50	46	29
한국	40	65	47	27	13
영국	38	46	41	35	30
미국	42	42	43	40	41
OECD 평균	31	38	33	2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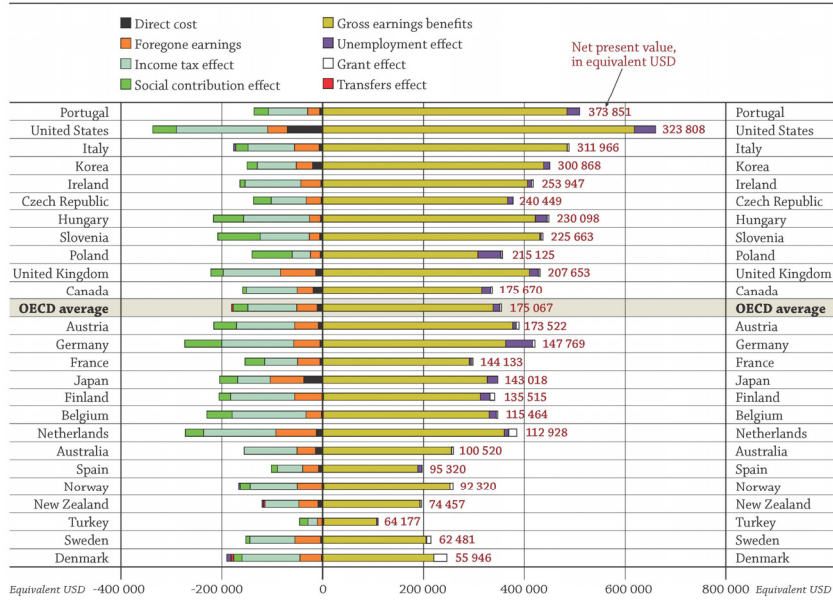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그림 II-15]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지난 20여 년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급속하게 늘어난 반면, 이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숫자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결국 고학력 청년층의 과잉공급에 따른 실업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청년실업자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2000년에 30%이던 것이 2011년에는 49.4%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학력 실업자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 고등교육에 따른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I-16] 고등교육에 필요한 개인적 비용과 효과



Notes: Data for Australia, Belgium and Turkey refer to 2005. Data for Italy,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and the United Kingdom refer to 2006. All other data refer to 2007.
 Countries are ranked in descending order of the private net present value.
 Source: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Indicator A9 (www.oecd.org/edu/eag2011).

주: 남성, 2007 USD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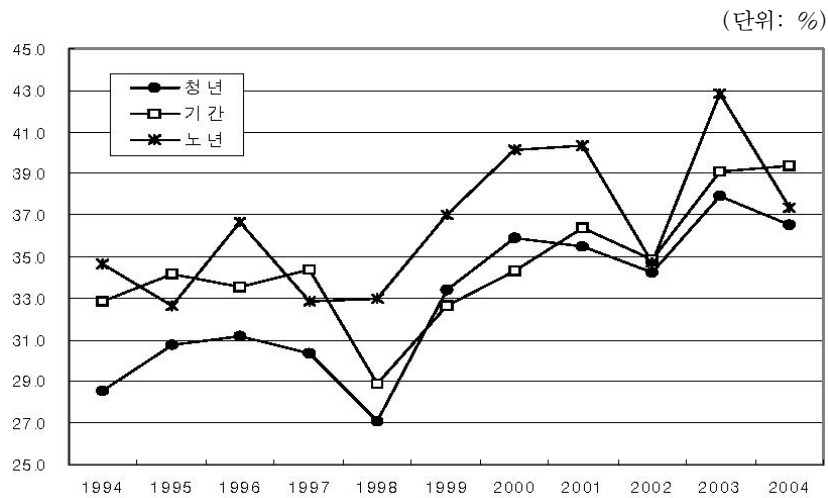
[그림 II-16]에 나타난 OECD(2012b) 자료를 보면 남성들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비용과 소득에의 중장기적 영향의 순 현재가치는 약 30만달러로 미국(32만 4천달러)과 포르투갈(37만 4천달러)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OECD 평균(17만 5천달러)에 비해 약 72%가량 높은 수준이다.⁶⁾

6) 2009년 이후 대학진학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대졸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학 졸업에 따른 금전적 기대치가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으며 정말 2009년 이후 대학졸업에 따른 금전적 기대치가 하락하였는지, 대학진학률의 감소가 금전적 기대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나, 이는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또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공급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이다. 남재량(2006)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을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의 저장(stock)변수가 아닌 이직(job separation)이나 입직(job finding)의 유량(flow)변수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입직의 어려움이 아닌 너무 빈번한 이직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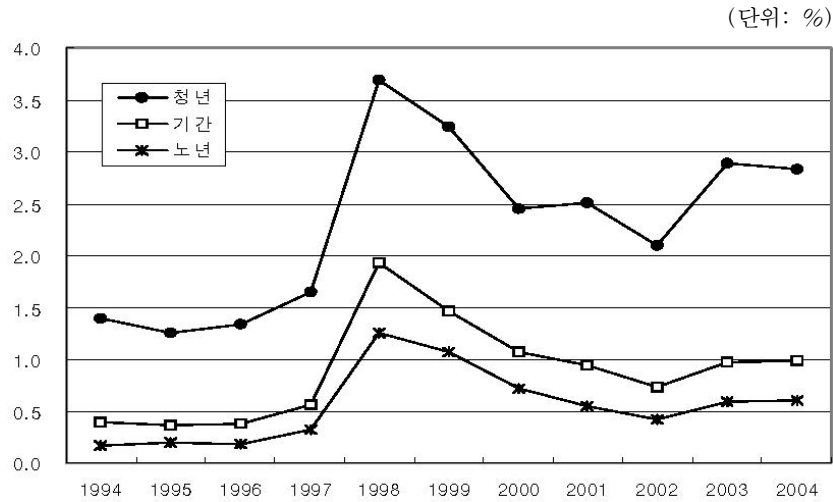
청년층을 15~29세, 기간노동력을 30~54세, 그리고 노년노동력을 55세 이상으로 구분할 때, [그림 II-17]에서 보는 것처럼 입직률(job finding rate)에 있어서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서, [그림 II-18]에 보이는 것처럼 이직률(job separation rate)에 있어서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IMF위기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II-17] 연령대별 입직률 변화



자료: 남재량(2006)

[그림 II-18] 연령대별 이직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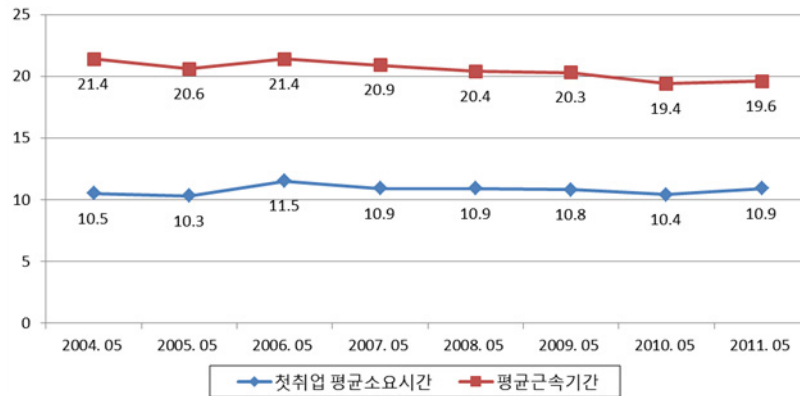


자료: 남재량(2006)

남재량(2006)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정보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있다. 뒤의 '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취업을 함에 따라 이직률이 높고, 결국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이직률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청년층 실업대책은 이렇게 높은 이직률을 낮추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입직을 촉진하는 정책에 비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 성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표 II-15〉), 청년층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그만둔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11개월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외부적 요인에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평균 근속기간은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지난 7년 동안 2달가량이 줄어들어 2011년에는 19.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9] 취업에 걸리는 시간과 평균 근속기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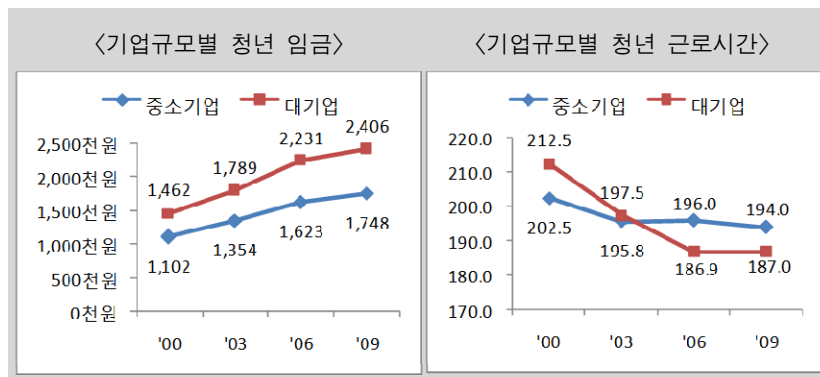
세 번째로 많이 지적되는 것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러 격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차이가 거론되고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조건에서부터,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능력개발의 기회,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가능성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그림 II-20]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대기업의 청년층의 평균임금이 2009년 기준 37.6%가 더 높고, 이러한 격차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평균근로시간이 2006년 이후에는 오히려 대기업 쪽이 약 3.6%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시간 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과, 일단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면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매우 어려우며⁷⁾ 박재민 외(2011)에서도 대졸자의 첫 직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

7) 원종학·김종면·김형준(2005)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기업 규모 간 이동 가능성이 제한되면 청년층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취업제공을 거부하고 실업상태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경력이 이후 낮은 노동시장 성과나 잦은 이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중소기업 경력에 따른 각인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II-20]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자료: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료(2010)

직업훈련 참여율의 경우도 2009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115.1%이고 중소기업은 27.2%에 불과⁸⁾하여 취업 후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장의 이동 가능성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한국고용정보원(2010)에 의하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첫 직장으로 잡을 경우, 계속 중소기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명성의 외부효과(reputational externalities)'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 간 이동에 대해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결과도 있는데, 채창균(2006)은 2001년 2월 4년제 대학의 졸업생 명단과 수능성적 및 고용보험자료를 결합한 25개 학교 5만 8,574명의 직업력자료를 구축하고 이들의 첫 직장과 3년여가 지난 시점의 현 직장/취업상태를 구분하여 이직 경로를 연구하였다. 이 자료에서 보면 [그림 II-21]에 보이는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것

8)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10.14

을 알 수 있다. 먼저 졸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4.9%로 그리 크지 않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35.9%(다른 대기업 경험자를 포함할 경우 48.5%)로 4가지 취업경로(미취업, 중소기업, 다른 대기업, 중소기업+대기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적어도 이 자료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취업경력이 낙인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채창균(2006)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상당한 비율의 졸업자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미취업으로 대기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졸업 후 1년 시점에서는 59.4%,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32.1%에 해당하는 졸업자가 미취업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과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실패한 청년들이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대기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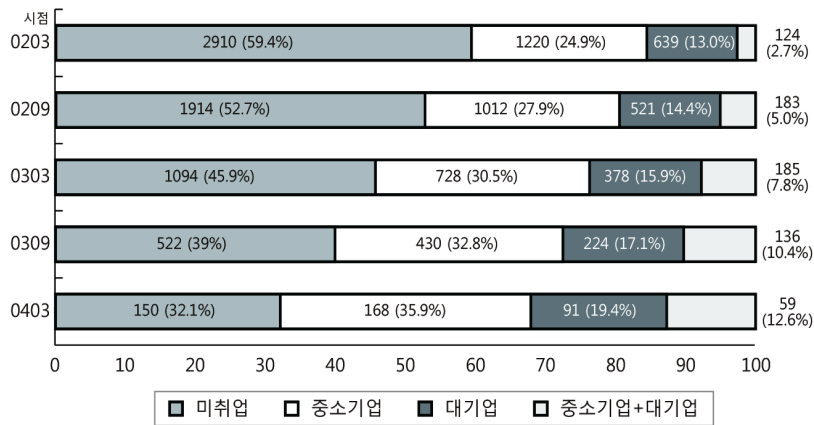
이러한 청년층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박성태(2005)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로 대학졸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소수 대졸자들만이 취업할 수 있었던 직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의식의 문제로, 편하고 쉬운 일을 추구하고 높은 기대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층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청년층의 눈높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동공급 측면에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이 시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대학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함에 따라 대졸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봉근(2004)에 의하면 최종 학교 전공과 현재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비율이 57.3%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업무 수행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51

에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대졸자들의 인적자원 문제는 '나. 노동수요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기업들이 점차 경력직 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형태를 변화시키는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21] 졸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현재 대기업 취업자의 입사경로



자료: 채창균(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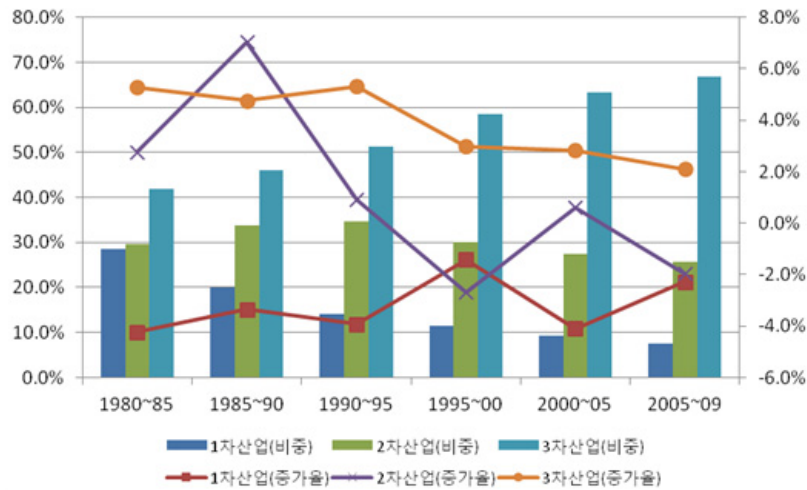
나. 노동수요 측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을 고용하는 수요 측면에서도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구성의 변화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198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고도성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탈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고용에서도 농업 및 제조

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등 산업별 비중이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림 II-22] 산업별 고용 비중과 증가율의 변화



자료: OECD STAN Database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능력의 저하를 가져왔는데, <표 II-11>은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의 지속적인 하락뿐 아니라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도 1970년대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1>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의 변화

(단위: %)

	1970년대	1980년대	1990~96	1997~99	2000~08
취업계수	116.5	66.6	41.6	33.6	26.9
고용탄성치	0.40	0.29	0.31	0.08	0.31

자료: 황수경 외(2009)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53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특히 경제의 고용창출능력과 연결되어 해석되는데, 지속적인 생산성의 향상과 보수적인 인력운용,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인력절감형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창출력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매년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7년에는 연평균 44.7만명이었던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인 2001~2008년에는 연평균 30.3만명으로 약 48%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창출의 감소와 관련하여 고학력 청년층이 취업하기 원하는 주요 기업(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이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성준(2005)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주요기업의 취업자수가 약 20% 이상(32.6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늘어나는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의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장봉근(2004)은 이러한 고학력 청년층이 희망하는 직업의 수 감소에 더하여 더욱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주요 기업들이 경력자 채용의 비중을 높이는 경향⁹⁾을 지적하고 있다.

〈표 II-12〉 주요 기업들의 채용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자 수	1,573	1,407	1,321	1,319	1,234	1,247
신규채용자 수	218	164	256	270	185	166
경력자채용 비중	40.7	54.9	73.3	78.1	78.7	81.8

자료: 장봉근(2004), 고용보험DB

9) 고용보험DB를 통해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등 청년층 비중이 2004년에는 61.5%에서 2009년에는 45.6%로 크게 감소했다(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이러한 추세는 IMF사태 이후에 두드러지게 늘어났는데,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위주의 신규채용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수급의 방향을 점차 전환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고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으로, 박성준(2005)은 현재 법제도상의 경직적인 고용관행에서는 기업들이 불확실한 신규인력의 채용보다는 자동화 등의 비인력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게 되어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기여도의 감소가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ell and Blanchflower(2010)도 비슷한 시각에서 영국의 청년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이 영국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발견한 것은, 사무자동화를 통해 많은 직업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라진 직업들이 대부분 중간소득계층을 차지하는 직업들이라는 사실과, 청년층이 대부분 소득계층의 하위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소득수준 상승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이다. 이러한 격차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대졸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표 II-13>과 <표 II-14>에서 보는 것처럼 급여와 근로시간 면에서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더 나은 고용조건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실업상태에서 대기하는 청년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55

〈표 II-13〉 규모별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단위: 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인미만	5~29인	30~299인		
전 체	10,198	7,341	10,710	12,390	16,739
정규직	11,152	8,263	11,157	12,968	17,225
비정규직	7,521	6,168	8,939	9,159	13,861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2010)

〈표 II-14〉 규모별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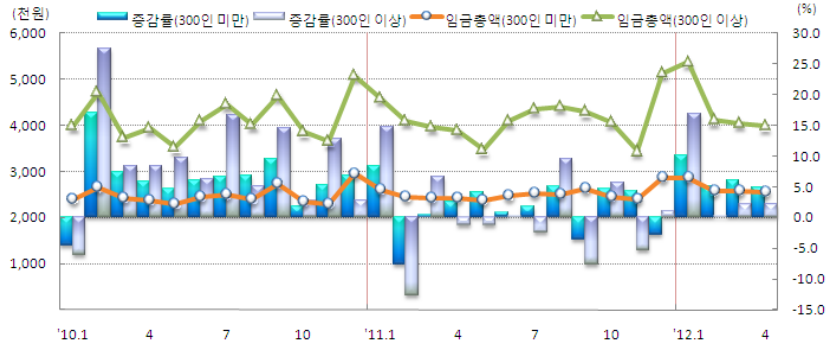
(단위: 시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인미만	5~29인	30~299인		
전 체	187.8	181.5	188.4	193.1	182.6
정규직	196.1	192.8	194.5	196.4	186.1
비정규직	164.4	160.2	165.4	174.7	162.1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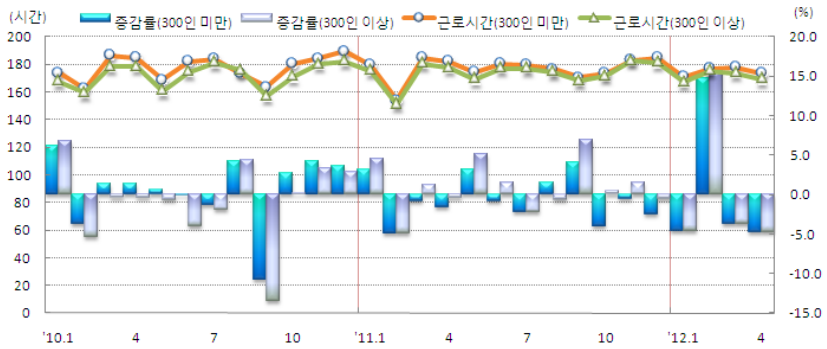
2012년 5월 기준인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II-23]과 [그림 II-24]의 경우를 보면 월평균 임금에 있어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약 56.3%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최근 그 차이가 더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체들에서 약 3%가량 평균 근로시간이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23]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2012. 5

[그림 II-24]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20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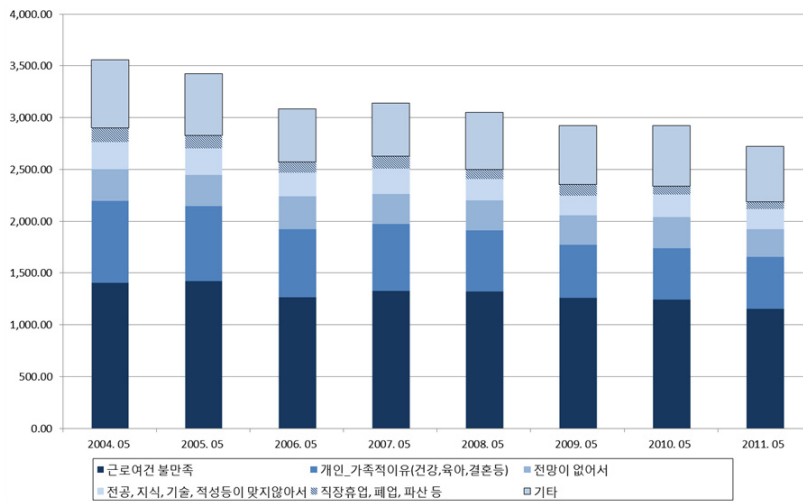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관련되어 청년층과 고령노동자들 간의 경쟁에 대한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채창균 외(2002)에서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들에서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확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 431개소(총 1,500개소 중) 중 1996년에서 2001년 사이에 뚜렷하게 중장년층의 고용은 증가하고 청년층의 고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

앞서 공급 측면 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층 고용시장에서는 입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이 청년층 실업률을 높이는 데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공통된 현상인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만 높은 이직률에 따라 생겨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높은 이직률이 일자리 매칭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청년층의 선호나 행태의 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II-25]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결과로 연도별로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원인들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25]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천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여기서는 이직 원인을 크게 6가지-근무여건 불만족, 개인·가족적

이유, 전망이 없어서, 전공·적성 등과 맞지 않아서, 직장휴업·폐업·파산, 기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2004년 이래 가장 큰 요인으로 잡히는 것은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전체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요인이 건강이나 육아, 결혼 등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 요인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5〉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천명)

시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근로여건 불만족	39.4	41.5	41.1	42.2	43.3	43.1	42.5	42.3
개인·가족적 이유 (건강, 육아, 결혼 등)	22.2	21.2	21.3	20.5	19.2	17.6	16.9	18.4
전망이 없어서	8.6	8.8	10.3	9.3	9.5	9.7	10.2	9.9
전공·적성등이 맞지 않아서	7.3	7.5	7.3	7.8	6.8	6.6	7.5	7.3
직장휴업·폐업·파산 등	3.9	3.7	3.4	3.8	3.0	3.6	2.8	2.5
기타	18.4	17.3	16.6	16.2	18.2	19.5	19.9	19.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공·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와 '전망이 없어서' 그리고 '근로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성(2009)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구직 포기자들의 포기원인을 살펴보고 구직포기의 이유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거나,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경우,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의 구직 포기는 일자리의 매칭(matching)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청년층 미취업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김형만 외(2003)에서는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2002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중 59.1%가 직장 경험이 있으나 이 중 78.9%가 자발적 이유(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전공과의 비합치 등)로 직장을 그만둔 것을 지적하며 정보의 불완전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법과 제도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이다. 남재량·박기성(2010)에서는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경기변동에 따른 기존의 정규직의 고용조정을 어렵게 하여, 청년 신규 고용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비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의 기회가 있을 시 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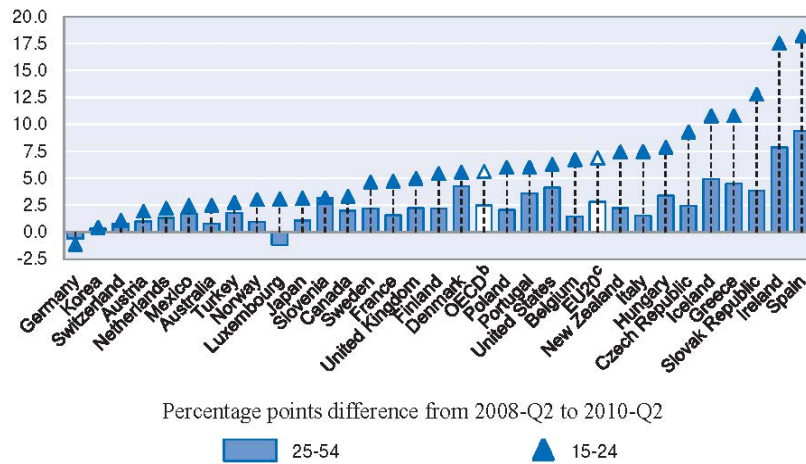
이와 비슷한 경향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고용보호조치들이 널리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기존 노동자들의 일시해고(layoff)가 어려워지자, 현재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신규고용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임금상승을 통해 전체 고용수준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청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는데, 높아진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국가들이 고정기간계약(fixed-term contract)를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고정기간계약의 확대는 청년층 고용을 일부 증가시키기는 하였지만,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Ryan, 2001).

4. 경기변동과 청년 노동시장

글로벌 금융위기는 노동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청년층의 피해가 장년층에 비해 훨씬 컸다. OECD(2010)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15~24세)의 경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평균 고용률이 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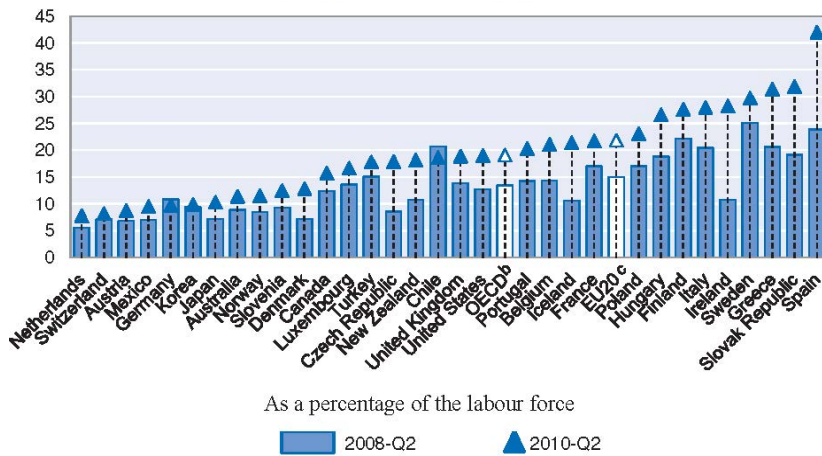
하락한 40%로 내려갔고, 동일기간 실업률은 4.5%p 증가한 18%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II-26] 실업률 증가의 청년층과 전체의 비교



자료: OECD(2010)

[그림 II-27]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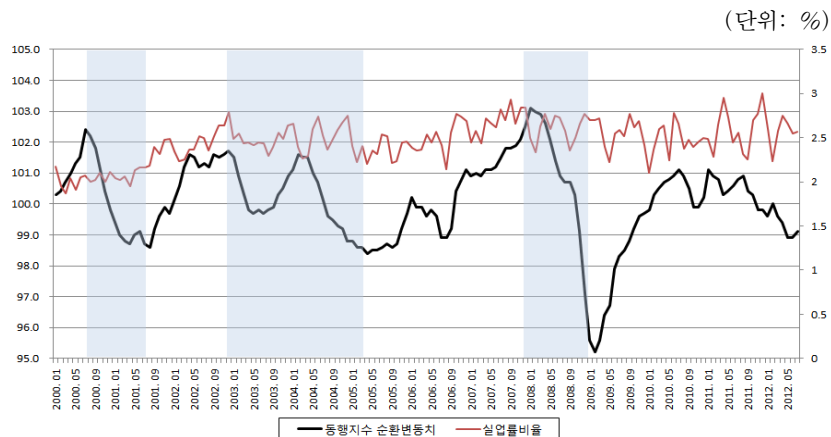
자료: OECD(2010)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61

[그림 II-27]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글로벌 위기기간 OECD 국가들의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은 꽤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처럼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한 국가가 있는 반면에 스페인처럼 17%p가 넘는 상승을 경험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실업률 증가가 가장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OECD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점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가 전체 노동자들의 실업률 증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청년층 고용이 많은 건설 등의 분야가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인 점이 지적되고 있다(OECD, 2010).

[그림 II-28]과 [그림 II-29]는 2000년 이후 전 연령층 대비 청년층의 실업률,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지표들과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의 동행지수변동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음영부분은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기수축기를 보여주고 있어, 한 음영의 끝에서 다음 음영의 끝까지가 경기순환의 한 사이클에 해당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가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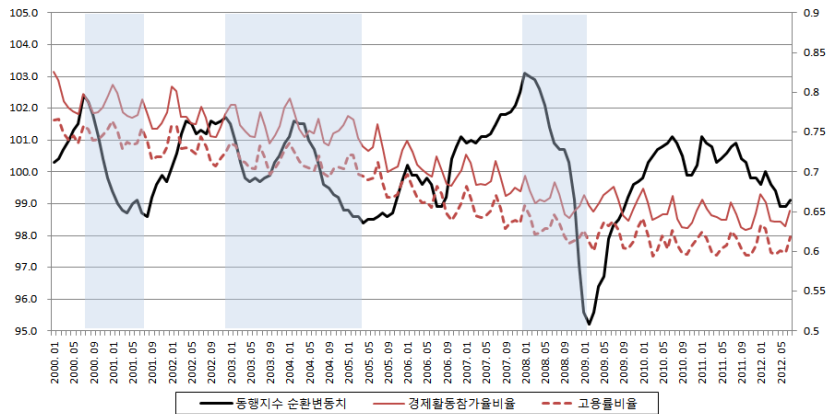
[그림 II-28] 경기변동과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



자료: 통계청

[그림 II -29] 경기변동과 전체대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00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변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에서 변동폭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어, OECD의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서원(2010)은 청년층의 고용이 특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들의 고용행태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가장 먼저 청년층의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고, 더 나아가 경기침체가 심해지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데, 장기계약 관계가 많은 중장년층에 비해 비교적 단기계약이 많은 청년층이 그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서원(2010)은 이렇게 경기침체가 아니더라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직원의 교육에 대한 비용을 줄일 인센티브가 높아져 채용을 하더라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층 노동

시장은 이러한 수요적 요인에 의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5. 청년실업과 노동정책

유레 없이 전 세계가 동시에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수년간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각국 정부의 최우선 정치 어젠다(agenda)로 부상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노동수급이나 시장구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전체 실업률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이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까닭에 경기변동에 취약한 편이다.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는 아직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숙련이나 기능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들에게 고용의 장을 제공해야 하므로 기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절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그동안 어떤 노동정책¹⁰⁾을 시행해왔는지 살펴보고 이들 정책이 청년실업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매칭이론에 따라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분류해 보고자 한다.

가. 한국

2003년 이후 정부는 총 9회(종합대책 5회+부문대책 4회)에 걸쳐 청년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간 실시된 정책들은 청년기의 실업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10)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청년실업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제공,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예산비중이 높고 빈번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정책을 하나 꼽으려면 노동수요 측면의 인턴제를 들 수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대응요법을 반복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아직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표 II-16〉 역대 청년실업대책

(단위: 억원, 명)

대책명	도입시기	예산	지원 인원	사업내용
청년실업 종합대책	2003.9	5,390	126,453	일자리 제공/현장연수/직업훈련/해외연수 취업지원/인프라 확충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5.1	7,885	252,716	단기 일자리 제공/청년층 직업훈련 강화/중소기업 유휴 일자리 충원/직장체험 활성화/해외취업인턴 활성화/청년취업인프라 확충/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8.8	-	-	-
청년고용 추가대책	2009.3	13,240	397,198	청년인턴 지원/교육훈련/단기 일자리 제공/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취약청년일자리 지원/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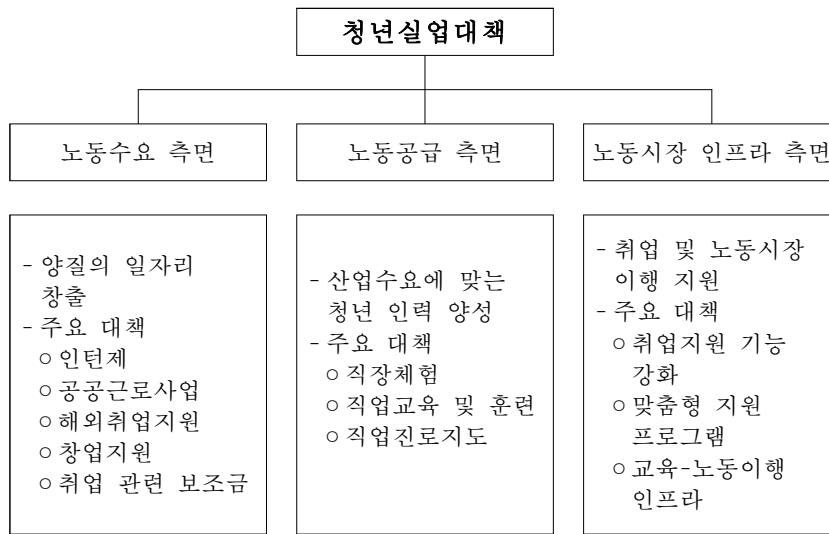
주: 1. 2007년 4월의 청년실업보완대책은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이 없어 제외. 2008년 8월의 청년고용촉진대책은 구체적인 사업목록이 제시되지 않음
2. 주요사업은 예산 순으로 제시. 세부예산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고려

그동안 시행되어온 청년실업대책을 노동수요 측면, 노동공급 측면, 그리고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그림 II-3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정부부처별 일자리창출사업의 중복 추진이,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대학의 공급자 중심 교육으로 인한 산업수요와의 괴리, 직업진로지도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 태도가, 그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65

리고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 형식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II-30]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자료: 송봉근(2009)

MB정부가 2010년 10월에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 정책들을 [그림 II-30]의 분류에 기초하여 장단기 대책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II-17>과 같다.

〈표 II-17〉 청년고용종합대책의 세부사업 현황

노동수요 측면	일자리 창출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일자리 제공 ○ 행정·공공기관·중소기업 인턴, 학습보조인턴교사 등 - 해외인턴·취업지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단시간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 ○ 중소기업 성장기반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육성 등 -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 - 청년창업 인프라 지원 ○ 창업보육센터 건립, 창업 특례보증, 학교기업 육성 등
노동공급 측면	교육 직업훈련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폴리텍대학 육성 - 취업애로 청년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 - 산학연계 강화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계약학과 등 -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프로그램 강화 - 초·중·등 진로교육 내실화 - 대학 취업을 공표 및 취업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간 통폐합 및 유사·중복학과 통합 -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기회 부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취업알선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 잡영 등 취업포털 구축, 운영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유도 ○ 정부시행사업의 민간위탁, 유료 직업소개사업 가격규제 완화

자료: 박강우·홍승제(2009), 국회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2010)를 참조하여 재작성

나. 미국

1966년에 도입된 직업훈련단(Job Corps)은 16~24세의 저소득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100여 개 이상의 직업관련 훈련을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67

국비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맞춰 중등교육과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정의 용돈도 지급받는다. 직업훈련단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착수보조금도 제공된다. 이는 고용부 주도의 여타 실업대책과는 달리 기업, 비영리단체에 의해 민간 주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기초교육 및 직업훈련 외에도 기숙사에 머물면서 건강관리, 상담,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종합적이면서도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유스빌드(Youth Build)는 취약청년층이 고등교육 과정을 수료하도록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의 직업훈련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16~24세의 중퇴자로서 저소득가구의 자녀나 기타 취약조건을 하나 이상 가진 자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50% 이상의 시간을 교육에, 최소 40%의 시간을 건설분야 취업이나 기술훈련, 구직활동 등 노동력투자 활동에 할애해야 하며 노동부는 프로그램 진행기간(평균 9개월) 동안 소정의 용돈 및 교통비를 참가자에게 지급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에 의해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아메리콥스(AmeriCorps)를 창설하였다. 아메리콥스를 통해 17세 이상의 청년들은 긴급구호 관련 훈련을 받은 후 본인이 희망하는 공익 분야에서 1~2년간 봉사를 하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청년들은 주로 빈민층을 위해 집을 짓거나 수리하고 공원을 청소하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일하는 동안 장학금, 일정 수준의 생활비, 건강보험 혜택, 직업훈련 기회 등을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치솟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오바마 정부와 의회는 2009년 2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청년층의 직업훈련 및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15억달러를 지원하였고, 비숙련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200~2,400달러의 세제지원(tax credit)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촉진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어 2009년 9월 미 하원은 커뮤니티 칼리지, 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100억달러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층 재정지원법(Student Aid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을 의결하였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경기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자나 노동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 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공공사업 실시 등 소극적인 고용정책만이 활용되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청년실업대책들 또한 이러한 범주 내에서 공통적으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영국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영국은 1973년 고용 및 훈련법(Employment and Training Act)을 제정하는 한편 1978년에는 청소년 고용기회 프로그램(Youth Opportunities Programme)이라는 긴급 대책을 도입하였다. 대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초에는 새로운 청소년 훈련제도(Youth Training Scheme)를 통해 청년실업률 급증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해소되지 않았다.

1997년 블레어 총리의 취임 후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다. 노동당 정부가 표방한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뉴딜(New Deal)은 근로를 조건으로 복지수급을 인정하는 신고용협정이다. 뉴딜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산하의 직업센터플러스(Jobcentre Plus)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II. 청년실업 문제와 경기변동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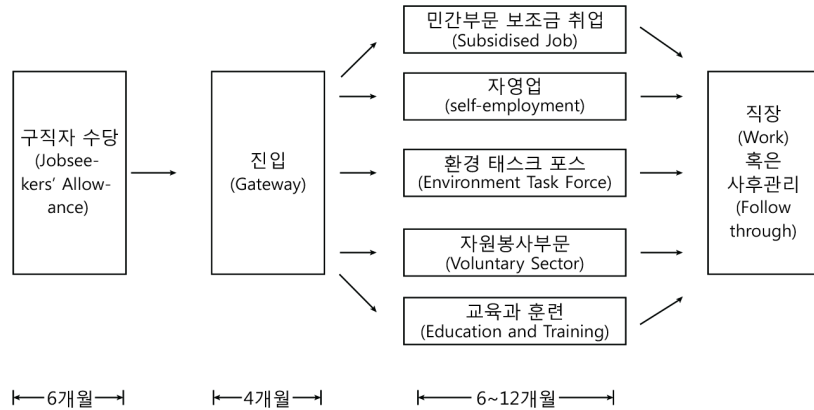
뉴딜의 목적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재정상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장기실업의 만성적인 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청년층이 최우선 정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99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은 6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미참가자와 탈락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청년층의 장기실업 탈출을 위해 민간기업 취업 시 임금보조,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딜에 참가하면 직업센터플러스 소속의 개인 상담사(personal advisers)가 지정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뉴딜은 [그림 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Gateway), 선택(Options), 사후관리(Follow through)의 3단계로 구성된다. 진입 단계는 최대 16주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매주 개인 상담사와 만나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진입 단계에서는 참가자에게 적합한 직업 탐색, 행동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 등의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구직자수당도 계속해서 지급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더라도 13주 이내에 다시 실업하는 경우 즉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진입 단계에서 취업에 실패하면 13주 이후부터는 선택 단계로 넘어가 참가자에게 필요한 훈련 또는 직업경험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하나의 옵션을 택하게 된다. 옵션의 종류는 보조금을 받는 직장으로의 취업, 전일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총 5가지다. 각 옵션은 보통 26주 동안 진행되며 이 과정에 참여한 청년 수급자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선택 단계의 종료 시점까지도 취업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 최대 23주간 보다 집중적인 심층면담과 추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구직자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II-31]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의 구조



자료: 장화익 외(2007)

뉴딜은 청년실업이 노동시장에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청년층의 기술 부족과 기대임금이 높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뉴딜은 장기실업에 빠진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구상되었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 제공되는 지원의 주 내용은 우선적으로 구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실업자가 구직 시 부딪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각 개인별 여건과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뉴딜은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독일

독일은 사내 훈련과 직업학교 교육을 결합한 이원적 직업교육체제 (Dual System)라는 독특한 전통을 통해 낮은 청년실업률과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4년의 초등교육을 마친 후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3가지의 각기 다른 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즉, 대학 입학에 위한 인문교육을 이수할 사람은 김나지움(Gymnasium)

에, 그리고 5년에서 6년간 지속되는 중등전기교육 수료 후 직업준비교육을 이수할 사람은 레알슐레(Realschule)나 주요 학교(Hauptschule)에 입학한다. 최근에는 진로가 너무 일찍 분화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회제한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대부분의 주에서는 5, 6학년은 진로 오리엔테이션 단계로 설정한 후 3개의 유형의 학교 사이에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교육경로(derzweite Bildungsweg)를 통해 중등단계에서 직업계통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1~2년제 직업전문학교인 전일제 전문직업학교(Berufliche Fachschule)나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를 통해 일반교육을 이수 후 전문대학(Fachhochschule)을 거쳐 정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다.

이원적 직업교육체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간 기업과 주정부 관할의 직업학교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둘째, 다양한 교육훈련 방식과 함께 국가, 기업, 노조가 공동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와 경제가 상호 연관을 맺게 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 중심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독일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부터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부문(외국인회사, 첨단기술분야, 신흥산업부문 등)에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1997년 10.2%이던 청년실업률이 2001년 8.4%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마. 일본

1991년 버블붕괴 후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본의 청년층 고용시장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졸업 직후 일괄 채용하여

사내교육을 거친 다음 종신고용으로 이어졌던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 형태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청년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특히 저임금의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Freeter)와 학교 및 노동시장에서 모두 이탈된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 and Training; NEET)로 대변되는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되었다.

일본의 청년실업대책은 조기취직, 직업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기업 중심의 현장체험과 교육기관을 통한 능력개발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된 이중체제(dual system)를 특징으로 한다. 이들 두 가지 과정 즉, 현장실습 및 전문교육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동시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35세 미만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월 4만엔을 보조하는 Youth Trial Employment를 2001년에 도입하는 한편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 기업의 직무훈련을 결합시켜 프리터와 청년실업자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Japanese Dual System, 1년 이상 니트로 지내고 있는 청년을 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Independent Camp for Youth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청년층의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 일자리의 직접적 제공보다는 프리터, 니트, 실업자 등으로 세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청년실업정책 평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유용한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Pissarides 등이 제시한 균형탐색이론에서 사용되는 매칭함수를

(matching function)를 사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¹¹⁾

매칭함수의 기본적인 가정은 구직자 수와 구인 수로 취업자 수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F(\alpha S, \beta V, e) \quad (1)$$

여기서 M은 취업자 수, S는 구직자 수, V는 구인 수, α , β 는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구직, 구인활동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따라서 αS 는 실효구직자수, βV 는 실효구인 수를 나타낸다. e는 매칭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구직자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구인 수가 증가하면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기업)가 만날 확률-즉 매칭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취업자 수는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구인 수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구직자가 증가하면 같은 논리에 따라 취업자 수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text{즉, } \frac{\partial M}{\partial S} > 0, \frac{\partial M}{\partial V} > 0, \frac{\partial M}{\partial e} > 0 \text{ 이다.}$$

매칭의 효율성 e는 노동시장의 인프라와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직업소개를 위한 직업소개소의 정비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구직 및 구인활동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α , β 는 구인과 구직활동의 질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기준 등을 나타낸다. 예컨대, 구직자가 이전보다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 α 가 상승하므로 구직자 수나 구인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증가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노동시장에 제시하는 구인의 질을 높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허용범위 내의 노동조건이 구인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11) 매칭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칭함수에 대한 방대한 서베이를 한 Petrongolo and Pissarides(2001)를 참조하기 바람. 아울러 본절에서 사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매칭함수의 형태는 太田(2011)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구직자는 현재 무업자 가운데 취업이 예상되는 일부이므로, 무업자 총수를 L , 무업자 가운데 구직을 하는 비율을 p 라고 하면 pL 은 구직자 수가 되며, $(1-p)L$ 은 구직할 의사가 없는 무업자 소위 니트 (NEET)가 된다. 구직자 수 S 에 pL 을 대입하면 식 (1)을 식 (2)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M = F(\alpha pL, \beta V, e) \quad (2)$$

정책당국이 취업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p 를 제고하는 정책, 구체적으로는 구직을 하지 않는 니트에 대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 됨을 식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매칭함수의 구직자에 관해 살펴보았으나, 식(1) 내지 식 (2)의 구인수 V 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구인은 노동에 대한 수요이며, 노동수요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에서 파생되는 파생수요 (derivative demand)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구인 수는 기업의 이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더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고용을 통해 이윤이 창출이윤이 고용의 증대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면 계속하여 고용을 하고자 할 것이므로, 구인 수는 식 (3)과 같이 고용비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V = G(\pi) = G(w, t, q, d, h) \quad (3)$$

여기서 π : 이윤, w : 임금비용, t : 훈련비용, q : 이직률, d : 채용한 노동자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h : 고용이나 임금조정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임금비용이나 훈련비용이 높다면 기업의 이윤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구인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직률 역시 구인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이직률이 높은 경우 추가적으로 구인 및 훈련비용이 필요하므로 이윤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채용한 노동자의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수록 이윤은 증대할 것이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될 때 임금 삭감이나 고용조정을 통해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기대이윤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인함수를 식 (3)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식 (2)에 대입하여 조정하면, 매칭함수 식 (2)는 식 (4)와 같이 쓸 수 있다.

$$M=H(\alpha, \beta, e, p, w, t, q, d, h) \quad (4)$$

식 (4)는 구직·구인활동의 효율성의 증대, 매칭 효율성의 증대, 무업자의 구직률 상승,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감소, 훈련비용의 감소, 이직률 저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 고용이나 임금조정외 향상 등이 취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하나의 정책이 위에서 제시한 파라미터를 하나만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논할 때는 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각국의 청년고용정책을 매칭함수에 따라 분류하면 <표 II-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²⁾ 각국의 정책을 요약하면, 청년고용대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직업훈련을 비롯한 교육훈련이며,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용보조금 역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낮은 우리나라, 독일, 일본의 경우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12) <표 II-18>에 제시한 내용은 앞 절의 각국의 정책을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각국의 정책에 공란이 있다고 해서 해당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을 줄여주기 위한 현장경험, 인턴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II-18〉 청년고용정책 분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구직·구인활동의 효율성 증대 (a, b)	· 직업진로지도 · 직장체험 · 해외인턴	· Job Corps · Youth Build · AmeriCorps	· New Deal		
매칭 효율성 증대(e)	· 취업지원기능 강화 · 워크넷, 잡영 등 취업포털 구축, 운영		· Job Plus Center		
무업자의 구직률 상승(p)	· 교육-노동이행 인프라 · 초중등 진로교육 내실화 · 취업애로 청년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			· Dual System (school to work)	· Japanese Dual System · Independent Camp for Youth
기업비용 감소(w)	· 취업관련 보조금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경기부양법 (ARRA)	· New Deal		· Youth Trial Employment
교육훈련(t)	· 교육훈련	· Job Corps · Youth Build · AmeriCorps	· New Deal	· Dual System	· Japanese Dual System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d)	· 인턴제			· Dual System	· Japanese Dual System
고용조정 유연성(h)	· 단시간근로제 도입				

Ⅲ. 청년실업의 재정적 부담

1. 청년실업의 낙인효과

가. 낙인효과

경기변동에 따라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청년층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청년층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상태의 변화를 완화시키는 기업특수숙련(firm specific skill)이나 선임권(seniority)이 중·장년층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불황으로 인해 기업이 고용조정을 해야만 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였을 경우 기업특수숙련의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보다 기업특수숙련의 정도가 낮은 청년층을 해고하는 것이 이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년층을 먼저 해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에 대한 선임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부터 실시하게 되므로 근속연수가 짧은 청년층의 고용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이 청년층 실업문제에, 특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실업의 낙인효과(stigma/scarring effect) 때문이다. 낙인효과란 실업을 경험할 경우, 실업기간 동안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기술과 숙련도가 떨어질 것이란 것과 실업을 경험하였다는 것 자체가 해당 인력의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인식 등에 의해 미래에도 실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취업 시 받게 되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말한다.

낙인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적자

본이론을 들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청년기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 등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므로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량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여 장래의 임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 이외에 신호(signaling)이론에 의하면 실업을 경험하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실업자에 대한 신호로 작용을 하므로 실업 경험은 이후의 임금이나 고용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탐색이론(search theory)은 청년 시절의 작은 탐색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은 자신에 더 적합한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임금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후의 임금이나 고용상태에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낙인효과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경기변동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변하여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적자본이론이나 신호이론에 의하면 그 효과가 장기에 걸칠 것이며, 탐색모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자본이론이나 신호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낙인효과는 장기에 걸쳐 존재하는가, 아니면 탐색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낙인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그치며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인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의 낙인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이 이루어졌다. 낙인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나. 절에 상세히 설명할 것인바, 수많은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청년시절의 실업이 이후의 고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금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이 대해서는 인적자본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당한 정도의 낙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시절의 실업에 대해 낙인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면 경기상황에 따라 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는 고용이나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어쩌다 보니 불황기에 졸업을 하는 '세대'에 속한 것이 본인의 그 뒤의 취업상태나 근로조건에 심각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는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낙인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이하에서는 낙인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분석에 사용한 자료, 분석 모형 및 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결과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였다.

1) 외국의 선행연구

Gregg(2001)에 의하면 영국에서 23세 이전 3개월의 실업 경험은 28세에서 33세 사이에 추가적인 2개월의 실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미래의 실업 가능성보다는 소득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Mroz and Savage(2006)에 따르면 미국에서 22세의 시기 중 6개월 실업 경험을 하는 것은 23세에 8%만큼 임금을 하락시키며 31세까지도 2~3%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Gregg and Tominey(2005)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2세 때 1년 실업 경험이 20년 후에 13~21%까지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Gartell(2009)이 스위스 대학 졸업생들의 임금을 추적해본 결과 대학졸업 후 곧바로 이어진 실업은 실질적이고 영구한 미래소득의 상실을 야기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ell and Blanchflower(2009)는 청년실업이 행복, 직업만족도, 건강에 대해 수십년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Bart and Matteo(2011)은 벨기에 청소년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되는

실업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급격히 감소시키지만 미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낙인효과는 실업기간 동안 인적자본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Arulampalam, Booth, and Taylor(2000)는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사용해서 남성의 실업 발생에 상태 의존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간 계량경제학적 문제가 되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이질성(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진정한 상태 의존성(genuine state dependence), 그리고 초기조건 문제(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모형화하여 실업의 낙인이론(scarring theory of unemployment)에 부합하는 상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낙인효과에 부응하는 상태 의존성은 25세 이상 성인남자의 경우가 그 이하의 청소년에서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의 낙인효과를 실증한 분석결과는 단기적으로 실업 발생을 감소시키는 정책, 예를 들면 청년인턴정책 등이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Omori(1997)는 미국 청년패널(NLSY) 1979~1987년 자료를 가지고 실업기간을 기준으로 비례적 하자드 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낙인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후 추정한 결과, 이전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미래의 기대 미취업기간이 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이러한 낙인효과가 과거 미취업 당시 그 지역의 실업률이 낮을수록, 즉 고용사정이 좋을 때일수록 더 커짐을 보이고 있어 미취업된 자가 적을 때일수록 미취업자는 더욱 낙인이 심하게 찍힌다는 이른바 낙인가설(stigma hypothesis)을 뒷받침하고 있다.

Vishwanath(1989)는 실업의 낙인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구직모형(optimal job search model)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계량분석적으로 낙인의 원인(특히 왜 기업주들은 실업기간이 긴 구직자일수록 생산성이 낮

다고 보는지)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낙인은 결국 구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실업자가 실업기간이 길수록 의중임금을 낮추게 되지만 시장의 제시임금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실업탈출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negative duration dependence). 시기나 대상 등이 다르긴 하지만,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실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이 낮다는 음(-)의 경과기간 의존성이나 낙인효과 존재는 Ellwood(1982), Corcoran(1982), Lynch(1989), Van den Berg and Van Ours(1999)에서도 공통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Narendranathan and Elias(1993)는 1981년 당시 영국의 23세 남자의 코호트(cohort), 그리고 McCulloch and Dex(1996)는 1991년 현재 16~55세 영국 남자의 코호트를 사용하여 실업 발생의 상태 의존성이 강하게 존재함을 실증하고 있다. Flaig et al.(1993)과 Muhleisen and Zimmermann(1994)은 각각 독일 사회경제 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의 첫 6회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84년 당시 25~51세, 19~59세 남자에게 실업 발생의 상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Heckman and Borjas(1980)는 미국 청년패널(NLSY) 1969~1971년 자료를 이용하여 122명의 고졸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태 의존성의 존재를 검증하고 있는데, 잠정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실업이 미래 실업의 원인이 된다는 상태 의존성의 증거는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결론은 Corcoran and Hill(198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1968~1977년 기간의 35~64세의 미국 남자 가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실업 발생에서 상태 의존성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Freeman and Wise(1982) 역시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실업 경험은 미래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었던 1990년대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은 이처럼 실업의 부정적인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하는 낙인효과를 경험했다. 당시 청년실업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일본 고용주들

이 불황기에 졸업하여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빠져 있던 청년들보다 회복기에 졸업한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경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도 하였는데, 실업기간이 반년 이내의 경우 남성은 약 80%, 여성은 약 80%가 정규직이 되었으나, 실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남성의 약 50%, 여성의 약 30%가 정규직이 되었다. 정규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이 담보상태에 머물러 점차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이다.

2) 우리나라

남기곤(2009)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미취업 결정요인과 전기의 미취업이 당기의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중 미취업 경험이 낙인으로 작용하여 그 후에도 미취업 상태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 3단계 최소자승법(3SLS) 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Ellwood(1982)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차분방정식(difference equation)을 통해 경력 의존성(experience dependence) 값만 추정하더라도 특히 남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미국에 비하여 미취업 경험의 낙인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순희·안준기(2010)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가지고 실업의 낙인효과를 진정한 상태 의존성(true state dependence)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증하였다.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 이질성과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과 차분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졸 청년층에 있어 남자와 여자 모두 개인적 이질성을 통제한 후 이전과 현재의 실업 간 구조적 관계가 나타나 실업의 낙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결론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턴십 등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균형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업의 예방과 초기의 실업 경험을 막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병희(2002)는 한국노동패널 부가자료(2000년)를 이용하여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수록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정한 경험의 누적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홍서연·안주엽(2002)은 한국노동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첫 일자리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미취업으로부터 탈출 확률이 낮아지는 음(-)의 경과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순희 외(2004)는 한국노동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진정한 상태 의존성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남과 여 모든 연령에서 이전 미취업과 이후 미취업 간의 구조적 관계, 즉 진정한 상태 의존성, 낙인효과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남기곤(2007)은 청년패널 3~6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의 미취업의 낙인효과를 실증하고 있는데, 미국과 비교하여 낙인효과가 더 강하며 특히 남성에서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다.

이근태·고가영(2012)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2008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의 실업 경험은 향후 취업이 되더라도 평균임금을 낮추는 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 2007년 대졸자 기준으로 볼 때 졸업 후 2008년까지 실업 상태였던 청년층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 비해 2010년 임금이 월평균 43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229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업을 경험함으로써 임금이 약 20%가량 낮아진 셈이다.

〈표 III-1〉 낙인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자료	분석 모형/방법	주요 연구결과
이병희(2002)	한국노동패널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2000)	- OLS 분석	-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의 누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홍서연·안주엽 (2002)	한국노동패널 1~3차 자료	- 헤저드 모형(hazard model)	- 첫 일자리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취업으로부터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부의 경과 의존성이 나타남
강순희·정윤형 (2004)	한국노동패널 1~3차 자료		- 남과 여 모든 연령에서 이전 미취업과 이후 미취업 간의 구조적 관계, 즉 진정한 상태 의존성, 낙인효과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 프로빗(probit) 분석의 한계 효과 - OLS 분석	- 진기에 미취업 상태였던 사람이 이번 기에도 미취업 상태에 놓일 확률은 남성의 경우 40% 진후, 여성의 경우 60% 진후 - 전기의 미취업 개월수가 1개월 증가할 경우 이번 기의 미취업 개월수는 남성의 경우 0.4개월, 여성의 경우 0.6개월 정도 더 길어짐
남기곤(2009)	청년패널조사 3~6차 자료	- 차분방정식(difference equation) 분석 ◦ IV: t-2기 미취업 개월수/t-1기 출발시점의 미취업 여부 ◦ 회귀분석: 2SLS/3SLS	- 한국에서는 미국에 비해 미취업 경험의 낙인효과가 보다 강하며, 특히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1〉의 계속

연구자	자료	분석 모형/방법	주요 연구결과
강순희·안준기 (2010)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1~2차 자료	-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 차분방정식 모형	- 전년도에 실업상태에 있었을 경우가 취업상태에 있었을 경우보다 미취업기간을 3~4개월 더 증가시킴 - 전년도 미취업 개월수가 1개월 증가할 경우 다음해 미취업기간 약 0.2개월 증가 - 2006년에는 남성에게 낙인효과의 강도가 더 크나 2007년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짐 - 미취업기간은 2006년에 2005년 대비 1개월 정도, 2007년에 2006년 대비 약 0.4개월 더 증가 - 이러한 낙인효과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 비슷
LG경제연구원 (2012)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2008)	- 2006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임금경로 분석	- 실업을 경험했던 청년층은 향후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취업 경험에 있는 청년층보다 20% 가량 낮은 임금을 받음 - 모든 연령층에서 낙인효과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지난해를 기준 청년층 69만 3천명이 잃은 소득 상실 규모는 2조 8천억원

〈표 III-2〉 낙인효과에 관한 국외 실험연구

연구자	자료	분석 모형/방법	주요 연구결과
Heckman and Borjas(1980)	미국 청년패널(NLSY) 1969~1971년 자료		- 122명의 고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정적이긴 하나 현재의 실업이 미래 실업의 원인이 된다는 상태 의존성의 증거가 미약하다고 주장
Becker and Hills(1980)	National Longitudinal Survey(NLS)의 청년층 코호트	- 회귀분석	- 평균적으로 학교를 마친 청년층의 경우 10대 실업은 8년 뒤 청년성인으로서 벌어들이는 임금에 거의 효과를 미치지 못함 - 최소한 흑인 청년층의 경우 보다 낮은 추후 임금률의 형태로 낙인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Ellwood(1982)	National Longitudinal Survey(NLS) 자료	- 회귀분석 - 차분방정식: IV, 3SLS, constrained 3SLS - 도구변수방정식(instrumental variable equations)	- 어느 한 해 실업 상태로 시간을 보낸 10대는 아마 그 해 내내 일했던 것보다는 다음 해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며 보낼 것이고, 근무경력 손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반영될 것임 - 초기 실업이 반복적인 실업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함
Corcoran(1982)			- 학교 졸업 후 오래 미취업 상태로 있을 경우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발견
Freeman and Wise(1982)			-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실업 경험은 미래의 취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 - 초기에 경험하는 미취업이 실업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취업에 따른 경력손상으로 미래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임

〈표 III-2〉의 계속

연구자	자료	분석 모형/방법	주요 연구결과
Becker and Hills(1983)	10대 남성 청년		- 직업교체의 순효과는 휴인이나 백인 모두에 긍정적으로 나타나 10대 청년층의 미취업으로 인한 낙인효과는 과장된 것이며, 단기 실업은 오히려 8~10년 뒤의 평균임금을 높이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음
Corcoran and Hill(1985)	1968~1977년 기간 중 35~64세의 미국 남자 가장		- 실업발생에서 상태 의존성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음
Vishwanath (1988)		- 최적 구직 모형 (optimal job search model)	-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수록 의존임금을 낮추게 되지만 시장의 제시임금분포가 변함에 따라 실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도 낮아짐
Lynch(1989)	National Longitudinal Survey(NLS) 자료	-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취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 집단의 재취업 확률 분석	- 청년 남녀 모두 재취업확률에서 강한 음(-)의 경과기간 의존성을 보임 -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조건과 인적자본 투자가 실업기간(또는 미취업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Beaudry and DiNardo(1991)	상시인구조사(CPS)/소득동향 패널연구(PSID)	- 회귀분석	- 이직비용이 매우 낮다면 암묵적 계약 모형은 현물시장 모형보다 임금결정에 있어서 더 나은 틀을 제공
Flaig et al. (1993)	독일 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의 첫 6회 조사 자료		- 1984년 당시 25~51세 남자에게 실업발생의 상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 발견
Narendranathan and Elias(1993)	1981년 당시 영국의 23세 남자 코호트		- 실업발생의 상태 의존성이 강하게 존재함을 실증

〈표 III-2〉의 계속

연구자	자료	분석 모형/방법	주요 연구결과
Muhleisen and Zimmermann (1994)	독일 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의 첫 6회 조사 자료		- 1984년 당시 19~59세 남자에게 실업발생의 상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를 발견
Bowius(1995)	미국 청년패널(NLSY) 자료	- Kaplan-Meier density estimation method - 비례적 위험 모형 (proportional hazard model)	- job match quality는 불경기 중 악영향을 받음 - 노동시장은 임금을 통해 불일치를 내재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초임과 재직기간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초임은 재직기간과 양(+)의 관계를 가짐
McCulloch and Dex(1996)	1991년 현재 16~55 세 영국 남자 코호트		- 실업발생의 상태 의존성이 강하게 존재함을 실증
Omori(1997)	미국 청년패널(NLSY) 1979~1987년 자료	- 비례적 위험 모형	-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후 추정된 결과 이전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미래의 기대 미취업기간이 길다는 결론을 도출 - 이러한 낙인효과는 과거 미취업 당시 그 지역의 실업률이 낮을수록, 즉 고용사정이 좋을 때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Van den Berg and Van Ours (1999)		- 비모수추정법	- 여성 청년층은 음(-)의 경과기간 의존성을 보이며, 남성 청년층은 실업 첫 해에는 경과기간 의존성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음(-)의 경과기간 의존성을 나타냄 - 여성 청년층은 실업유입 후 상대적으로 빨리 낙인효과 경험

〈표 III-2〉의 계속

연구자	자료	분석 모형/방법	주요 연구결과
Arulampalam, Booth, and Taylor(2000)	영국 가계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	- 동태적 패널 모형 (dynamic panel model)	- 실업의 낙인이론에 부합하는 상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 - 이러한 상태 의존성은 25세 이상 성인남자의 경우가 그 이하의 청소년에서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Arulampalam (2001)		- 임의효과 모형	- 25세 이하 청년층에 있어 미취업기간의 부정적 효과를 제시
Gregg(2001)			- 영국에서 23살 이전 3개월 실업 경험은 28~33세 사이에 추가적인 2개월의 실업 유발
Hamalainen (2003)			- 졸업 후 실업기간이 평균적으로 실업을 약 20%p 증가시킨다는 증거 제시
Gregg and Torniney(2005)			- 영국에서는 22살 때 1년 실업 경험이 20년 후에 13~21%까지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남
Mroz and Savage(2006)		- 시차 도구변수를 사용한 모형	- 미국에서 22세의 시기 중 6개월 실업 경험을 하는 것은 23세에 8%만큼 임금을 하락시키며 31세까지도 2~3% 낮은 임금을 받게 함
Oreopoulos et al.(2006)	대학등록 및 졸업조사(USIS)/임금·세금자료(TIFF)/고용주-고용인 매치 DB(LEAP) 연결	- 회귀분석(지역 모형 vs. 국가 모형) ◦ IV: 공식 재학기간(4년)을 고려한 예측 졸업년도의 실업률/거주지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 불황기에 졸업하는 것은 큰 초기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나 그 부정적인 효과는 졸업 후 8~10년에 걸쳐 서서히 사라짐 - 일시적인 실업을 충격은 고용 및 경제활동참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의 계속

연구자	자료	분석 모형/방법	주요 연구결과
Kahn(2009)	미국 청년패널(NLSY) 자료	- 회귀분석: OLS/IV	- 경제 불황기 신규 대졸자 코호트의 경우 국가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6% 이상의 초기소득 감소를 경험하며 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얻는 경향이 나타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매년 1/4기량씩 소멸하나 졸업 15년 후에도 약 2.5%의 손실 잔존 - 주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9%의 초기소득 감소(IV 추정만 유의)
Gartell(2009)			- 스위스 대학 졸업생들의 임금을 추적해본 결과 대학졸업 후 곧바로 이어진 실업은 실질적이고 영구한 미래소득의 상실을 야기함을 발견
Bell and Blanchflower (2009)			- 청년실업이 행복, 직업만족도, 건강에 대해 수십년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 제시
Bart and Matteo(2011)	벨기에 청소년 자료		- 지속되는 실업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미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낙인효과는 실업기간 동안 인적자본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

2. 청년실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청년실업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실업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상황이 재정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정부가 재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상황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청년실업과 정부의 재정상황 간에는 단기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 하강기에 학교에서 졸업하는 청년들은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업기회의 감소로 인해 부득불 하향취업을 선택하거나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 혹은 학업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는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직을 전전하다가 구직 단념자로의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경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향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기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 이직 및 전직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직장으로 옮겨감으로써 초기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초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이후 거시적인 경기상황이나 노동시장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이 초기임금의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지, 만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업이 지속되거나 특히 비경제활동인구화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나 재정의 측면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근로소득의 상실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적절한 부의 축적을 이루지 못한다. 재정적으로는 청년층 실업의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직업교육 등 노동시장정책의 추가적 재정지출뿐 아니라,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세수 및 사회보험기여분의 상실 등이 뒤따르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득의 하락에 따른 구매력의 감소로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하락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실업·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언급하고 있다(Godfrey et al., 2002). 실업은 단순히 금전적 소득의 감소를 넘어서서 개인 건강의 악화 및 사회관계의 악화, 주변 가족에의 금전적 영향, 사회적인 범죄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이러한 폭넓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인 사회보장지출, 실업급여 등의 지출 측면과 소위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것 중 2가지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향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경기 하락기에 대학을 졸업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층이 전체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낙인효과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의 영향을 <표 III-3>에 정리하였다. 생애주기를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은퇴 이후로 구분하여 개인의 노동시장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낙인효과와 정부 재정에의 영향을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3> 시기에 따른 낙인효과와 정부 재정에의 영향

시기	낙인효과	재정에의 효과	
		정부세입 측면	정부세출 측면
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수준의 기대 임금(expected income) • 기대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 • 잦은 실직/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수입 감소 • 사회보험기여분(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감소 •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 관련지출 (실업급여, 노동시장정책 등) 증가 •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장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수준에 있어 낙인효과 지속 • 질 낮은 고용 지속 • 비경제활동인구화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 고용정책관련 지출 증가
은퇴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부(富)의 수준 감소 • 연금소득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 등 노년층/저소득층 소득보조 지출의 증가

우선 청년기에 있어 효과를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낙인효과로 인해 하향취업 및 실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애기대소득(lifetime expected income) 수준의 하락이 발생한다. 당장의 소득 감소는 정부의 세입에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실업률의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낙인효과로 인한 실직 및 이직이 증가하여 실업급여의 지출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증가로 관련 사회복지지출도 증가하게 된다.

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 장년기에 들어서면, 청년기 노동시장 경험에 따른 낙인효과로 여전히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이 지속되고, 고용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완전한 회복은 힘든 것으로 보인다.¹³⁾ 이러한 고용에의 낙인효과로 인해 청년기보다는 정도는 덜하지만 재정에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그룹은 시간이 더 흘러 은퇴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누적된 음(-)의 소득효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富)를 축적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연금수령액도 낮아서 이에 따른 소비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수의 감소와 이들에 대한 소득보조를 위해 재정지출의 증가가 필요하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세입과 세출에의 영향은 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그룹에 한정된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의 관점이란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의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한 집단의 소득 감소로 인한 그 집단의 소비 감소가 반드시 경제 전체의 소비 수준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한 집단의 소득/소비 감소가 동 시점에서의 다른 집단의 소득/소비 증가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나 동일 집단이 다른 시점 간에 소비를 평탄화(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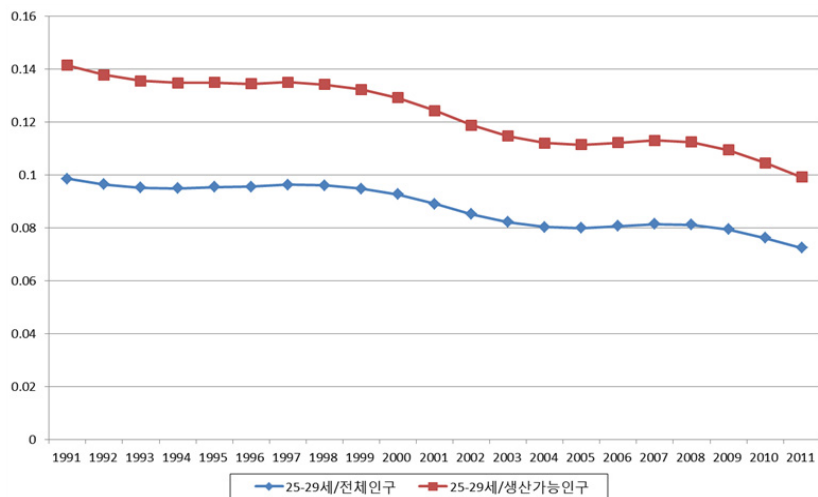
13)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기 실업의 낙인효과가 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장기적 효과를 보이고, 고용 여부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평균적인 근속년수가 시간이 지나도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개인들은 이직이나 전직을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smoothing)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소비의 평탄화는 소득의 감소가 일시적이고 전체 평생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기존의 연구결과는 임금의 낙인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영구적 소득 감소로 인해 시점 간 소비의 평탄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별 청년의 시점 간 소비 평탄화보다는 동 시점의 다른 집단의 소득/소비의 상대적 증가로 상쇄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사회에서 인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한 그룹에 한정된 외생적 충격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규모 측면에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 25~29세 청년층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7.2%, 생산가능 인구의 9.9%에 불과하고, 이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림 III-1] 25~29세 청년층의 인구비중 변화

(단위: %)



전체 소득이나 소비에 청년층 일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인구규모로 보았을 때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통계는 없

Ⅲ. 청년실업의 재정적 부담 95

고, 대신 소득세 자료에 나타난 총수입금액의 연령대별 비중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특정 연령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Ⅲ-4〉에서는 2011년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내용의 연령대별 비중을 구한 것이다. 신고건수에 있어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이나 금액 측면에서는 2.8%에 불과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특정 연도의 청년층 그룹이 소득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따라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으로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4〉 연령대별 국세 총수입 비중

(단위: 건, %, 백만원)

	총수입금액 (Total Revenue)			
	신고건수 ¹⁾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연령별 전체	3,785,248		752,289,450	
30세 미만	277,273	7.3	20,827,641	2.8
30세 이상	850,908	22.5	140,661,535	18.7
40세 이상	1,233,618	32.6	294,553,894	39.2
50세 이상	913,974	24.1	210,962,844	28.0
60세 이상	357,820	9.5	64,178,445	8.5
70세 이상	126,696	3.3	17,350,316	2.3
기타	24,959	0.7	3,754,775	0.5

주: 1) 종합소득세 신고건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가. 정부 세입 측면

청년기의 실업은 개인의 소득수준의 감소를 통해 정부의 여러 세입 항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조세제도에는 14가지의 국세와 16가

지의 지방세를 합한 30개의 조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개인의 소득수준 변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항목들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 당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뿐 아니라, 소득수준의 변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부(wealth) 수준이 변동하게 되어 나타나는 세수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세대와의 일반균형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 세대에의 소득변화가 전체 부(wealth)의 저장(stock)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전체 사회의 부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대한 세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II-5〉 소득변동성에 따른 세금 구분

	소득수준과 크게 관련	소득수준 변동 영향 미미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법인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교육세 등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본고에서는 소득의 변화와 관련된 세수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나 정부의 재정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금에 한정하여 세입 측면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소득의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wealth)의 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여타 세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소득이 부로 전환되는 중간과정에 여러 변동요인이 포함될 수 있어, 본고의 고려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우선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액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전체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

Ⅲ. 청년실업의 재정적 부담 97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표 Ⅲ-6>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결정하게 된다. 실제 결정세액은 이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되는데, 만일 이 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기타 소득과 통합하여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들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이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한 다음,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추가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확정된다.

<표 Ⅲ-6> 소득세 기본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1.2천만원 이하	6
1.2천만원 초과~4.6천만원 이하	15
4.6천만원 초과~8.8천만원 이하	24
8.8천만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

자료: 기획재정부, 『2011 간추린 개정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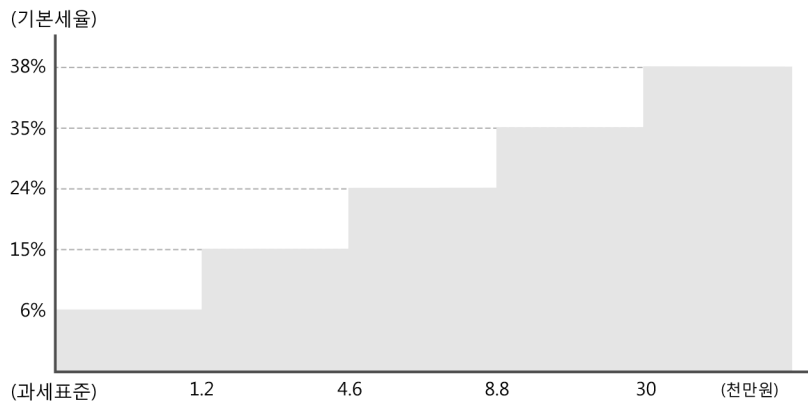
개인의 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세수의 변화는 개별적인 공제 요소 등의 변동요인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간단히 소득의 변화에 해당 한계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Delta \text{소득세수} = \Delta \text{소득} \times \text{한계소득세율}$$

[그림 Ⅲ-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소득세 수준을 종합소득 단계서부터 구한다면, 과세표준소득을 알기 위해 해당 개인의 여러 공

제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단지 소득의 변동을 통한 소득세수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한계'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로 어느 정도¹⁴⁾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Ⅲ-2] 과세표준 금액과 기본세율



여기서 어떤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소득세수 변화분에 대한 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당 한계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령별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이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한계 세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표 Ⅲ-7>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1인당 평균과세표준 소득은 864.6만원이고, 30대의 1인당 평균과세표준 소득은 1,686.4만원이다. 2012년 개정된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르면, 이 소득수준에서 한계세율은 2011년 귀속분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6%, 30대는 16%에 해당한다.

14) 물론 소득의 변화가 공제내역 중 소득에 비례하지 않거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공제내역의 큰 변화를 동반한다면 편이(bia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공제나,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단기적인 소득변화에 비례적으로 움직이거나 변동하지 않는 특성으로, 개인의 공제 측면을 고정한다고 가정해도 심각한 편이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Ⅲ. 청년실업의 재정적 부담 99

〈표 Ⅲ-7〉 연령별 과세표준금액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신고건수 (건)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1인당 평균 과세표준 (만원)
2006년	2,736,478	527,546,785	2,335,106	50,179,030	2,148.90
2007년	3,074,419	577,647,024	2,628,754	59,938,058	2,280.09
2008년	3,584,432	649,391,846	2,989,572	64,664,812	2,163.01
2009년	3,570,816	669,595,349	2,847,550	66,666,678	2,341.19
2010년	3,785,248	752,289,450	3,021,184	75,259,440	2,491.06
주소지별	3,785,248	752,289,450	3,021,184	75,259,440	2,491.06
서울	978,056	184,842,188	807,856	29,650,466	3,670.27
인천	225,949	45,894,046	182,872	3,322,535	1,816.86
경기	938,919	185,275,010	752,892	16,503,107	2,191.96
강원	93,528	14,821,290	75,785	1,162,821	1,534.37
대전	108,345	19,057,908	86,919	1,643,503	1,890.84
충북	96,253	17,410,976	75,683	1,312,445	1,734.13
충남	124,804	24,618,245	97,936	1,742,471	1,779.19
광주	109,949	19,289,532	76,824	1,574,651	2,049.69
전북	105,138	19,390,297	78,787	1,343,030	1,704.63
전남	99,597	16,248,002	61,800	1,033,640	1,672.56
대구	176,874	45,580,803	141,330	3,426,778	2,424.66
경북	148,783	30,192,576	118,625	2,104,548	1,774.12
부산	276,177	63,560,235	222,063	5,395,064	2,429.52
울산	77,048	14,783,291	63,644	1,348,759	2,119.22
경남	191,042	44,243,412	150,090	3,158,373	2,104.32
제주	34,786	7,081,639	28,078	537,249	1,913.42
성별	3,785,248	752,289,450	3,021,184	75,259,440	2,491.06
남성	2,228,337	550,022,569	1,778,066	57,454,352	3,231.28
여성	1,531,952	198,512,100	1,220,653	16,721,951	1,369.92
기타	24,959	3,754,781	22,465	1,083,137	4,821.44
연령별	3,785,248	752,289,450	3,021,184	75,259,440	2,491.06
30세 미만	277,273	20,827,641	245,546	2,123,043	864.62
30세 이상	850,908	140,661,535	669,135	11,284,064	1,686.37
40세 이상	1,233,618	294,553,894	942,884	24,436,228	2,591.65
50세 이상	913,974	210,962,844	730,805	21,961,946	3,005.17
60세 이상	357,820	64,178,445	302,131	10,304,401	3,410.57
70세 이상	126,696	17,350,316	108,218	4,066,618	3,757.80
기타	24,959	3,754,775	22,465	1,083,140	4,821.4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표 III-8〉 소득수준별 과세표준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1인당평균 과세표준 (만원)
	인원 (명)	금액 (백억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2006년	2,736,478	65,001,149	2,335,106	50,179,030	2,148.90
2007년	3,074,419	77,124,123	2,628,754	59,938,058	2,280.09
2008년	3,584,432	85,082,505	2,989,572	64,664,812	2,163.01
2009년	3,570,816	90,225,673	2,847,550	66,666,678	2,341.19
2010년	3,785,248	100,266,798	3,021,184	75,259,440	2,491.06
종합소득규모별	3,785,248	100,266,798	3,021,184	75,259,440	2,491.06
0원	179,992	-	-	-	-
1천만원 이하	1,754,105	9,226,264	1,205,553	2,864,937	237.65
2천만원 이하	787,482	11,124,891	753,152	5,912,155	784.99
4천만원 이하	502,932	14,095,621	501,806	9,339,451	1,861.17
6천만원 이하	222,229	10,864,954	222,180	7,875,274	3,544.55
8천만원 이하	115,378	7,956,251	115,372	6,194,500	5,369.15
1억원 이하	65,258	5,815,498	65,253	4,781,849	7,328.17
2억원 이하	107,066	14,540,642	107,063	12,781,901	11,938.67
3억원 이하	24,986	6,026,970	24,985	5,586,639	22,359.97
5억원 이하	14,417	5,438,745	14,417	5,157,221	35,771.80
10억원 이하	7,633	5,200,653	7,633	5,016,570	65,722.13
10억원 초과	3,770	9,976,309	3,770	9,748,943	258,592.65
과세표준규모별	3,785,248	100,266,798	3,021,184	75,259,440	2,491.06
0원	759,035	2,593,493	-	-	-
1천만원 이하	1,798,201	15,472,951	1,793,172	6,426,663	358.40
1.2천만원이하	138,601	2,474,257	138,601	1,521,453	1,097.72
3천만원 이하	560,598	15,681,583	560,598	10,647,123	1,899.24
4천만원 이하	129,532	6,021,075	129,532	4,488,353	3,465.05
4.6천만원 이하	58,273	3,220,788	58,273	2,500,816	4,291.55
6천만원 이하	93,402	6,116,767	93,402	4,894,507	5,240.26
7천만원 이하	43,675	3,425,141	43,675	2,828,782	6,476.89
8천만원 이하	32,532	2,883,764	32,532	2,433,369	7,479.92
8.8천만원 이하	20,917	2,047,667	20,917	1,754,953	8,390.08
1억원 이하	24,775	2,675,236	24,775	2,322,117	9,372.82
2억원 이하	81,316	12,377,030	81,316	11,132,604	13,690.55
3억원 이하	21,000	5,429,635	21,000	5,075,058	24,166.94
5억원 이하	12,697	5,044,652	12,697	4,805,940	37,850.99
10억원 이하	7,097	5,009,773	7,097	4,843,628	68,248.95
10억원 초과	3,597	9,792,986	3,597	9,584,074	266,446.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두 번째 방법은, 연령별 평균소득이 아닌, 특정 그룹의 평균소득을 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득수준별 평균과세소득을 이용하여 한계세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998년 코호트의 30세 평균 종합소득 규모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국세통계연보상 이 종합소득 규모에 해당하는 1인당 평균 과세표준금액은 1,861만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한계세율은 기본세율표에 따라 15%로 결정된다.

소득세수 다음으로는 소득의 변화가 사회보험관련 기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으로 통칭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가 도입되어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했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련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당해 표준보수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가입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각각 50%씩 분리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실직 혹은 하향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개인의 부담분의 2배에 해당하는 정부의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부과액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액을 사용한다. 이 표준보수월액에 해당 소득구간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는 건강보험료에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6.55%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된다.

〈표 III-9〉 연도별 표준보수월액 및 직장보험료율,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

(단위: 원, %)

연도	연평균 표준보수월액	직장보험료율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
2002	1,936,921	3.63	106.7
2003	2,262,972	3.94	115.8
2004	2,359,857	4.21	123.6
2005	2,457,354	4.31	126.5
2006	2,548,768	4.48	131.4
2007	2,617,608	4.77	139.9
2008	2,723,201	5.08	148.9
2009	2,765,763	5.08	148.9
2010	2,636,037	5.33	156.2
2011	2,992,596 (3분기 현재)	5.64	165.4
2012		5.80	170.0

주: 2002년 보험료율 및 부과 점수당 단가는 3월 인상분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얻은 소득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24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89만원까지의 범위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24만원 이하는 24만원으로, 389만원 이상은 389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한다. 보험료율은 이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액수로,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1년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 보험료로 구분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르다. 우선 실업급여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Ⅲ. 청년실업의 재정적 부담 103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 보험료는 사업장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한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1.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평균 0.55%로, 전체 고용 보험료율을 부담 대상별로 보면 근로자는 0.55%, 사용자는 평균 1.1%를 부담하게 된다.

〈표 Ⅲ-10〉 2012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 %)

구 분		근로자	사용자
실업급여		0.55	0.5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의 경우는 근로자의 부담은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별목업)의 보험료는 당해 사업장의 1년간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별목업 제외)의 경우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합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업종에 따라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고시하고 있다.

〈표 III-11〉 2012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보험률			
	'09	'10	'11	'12
1. 광업				
100 석탄광업	360	360	354	354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236	201	161
102 채석업	208	233	234	246
103 석회석광업	69	68	67	76
104 제염업	33	29		
105 기타 광업	70	72	72	72
10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	22	23	22	22
201 담배제조업	10	9	9	9
202 섬유 (갑)	14	15	14	14
232 섬유 (을)	25	24	25	25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76	84	89
204 목제품 제조업	50	50	51	51
205 펄프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27	26	26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9	10	10
207 인쇄업	17	17	16	16
209 화학제품 제조업	18	18	18	18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10	10	9	9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29	33	27
236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90	84	87	85
212 고무제품 제조업	28	26	26	24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32	31	
214 유리 제조업	23	24	22	20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31	32	32	32
216 시멘트 제조업	27	25	27	26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49	49	47	46
219 금속제련업	12	12	12	12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37	37	37
222 도금업	23	23	23	23

〈표 Ⅲ-11〉의 계속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보험률			
	'09	'10	'11	'12
223 기계기구제조업	26	26	25	24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3	13	13	13
225 전자제품 제조업	8	7	7	7
226 선박 건조 및 수리업	49	42	36	31
227 수송용 (갑)	29	25	22	20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29	25	22	21
234 수송용 (을)	23	22	21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2	11	11	11
229 수제품 제조업	18	18	18	17
230 기타제조업	31	32	33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3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10	10	10
4. 건설업				
400. 건설업	34	37	36	37
5. 운수·창고·통신업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9	9	9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22	22	21	20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67	64	73	73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3	34	33	32
506 항공운수업	8	7	7	7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9	9	9	9
509 창고업	18	18	17	16
510 통신업	11	11	11	12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6. 임업				
600 임업	62	66	65	72
7. 어업				
700 어업	249	286	328	314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1	12	13	15
8. 농업				
800 농업	26	28	28	29

〈표 Ⅲ-11〉의 계속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보험률			
	'09	'10	'11	'12
9. 기타의 산업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29	31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21	20	20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33	31	32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17	18	18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10	10
907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7	6	6	6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7	7
909 교육서비스업	9	8	8	8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10	10	11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10	10	9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	7	7	6	7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	18	18	17	17
- 임금채권부담금	0.4	0.8	0.8	0.8
- 건설업 노무비율(%)				
일반 건설업	28	28	28	28
하도급 건설업	32	32	32	32

자료: 근로복지공단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은 〈표 Ⅲ-12〉로 정리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의 경우, 실업급여보험료인 0.55%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의 사업장 크기에 따른 보험료율의 평균인 0.55%를 합하여 사용자 부담료율을 1.1%로 하였다. 산재보험료의 경우도, 2012년 고시된 70여개 산업의 개별 산재보험료율의 평균인 0.404%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따른 사회보험료 수입 감소는 소득 감소분의 약 17.23%가량 됨을 알 수 있다.

〈표 Ⅲ-12〉 사회보험료율 종합

(단위: %)

	보험료율			비고
	근로자	사용자	합계	
건강보험	2.9	2.9	5.8	
노인장기요양보험	0.19	0.19	0.38	건강보험료의 6.55%
국민연금	4.5	4.5	9.0	24만~389만원 범위
고용보험	0.55	1.1	1.65	사용자의 경우 사업장 크기에 따른 평균
산재보험	-	0.404	0.404	사업종류에 따른 평균
합계	8.14	9.09	17.23	

다음으로는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관련 세수(부가가치세수, 개별소비세수 등)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소비의 소득탄력성이나 한계소비성향 등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표 Ⅲ-11〉은 2011년 통계청의 가구동향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2003년부터 나타낸 것이다.

〈표 Ⅲ-13〉 전체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가구	전체 연령	소비지출/ 소득	64.6	64.5	64.6	64.0	63.0	62.4	62.6	63.0	62.3
	39세 이하 가구	소비지출/ 소득	63.7	63.5	64.4	63.2	61.6	60.8	60.5	63.1	63.2
		가구비율	33.4	31.8	30.2	28.9	27.5	27.0	26.9	25.4	24.3
근로자 가구	전체 연령	소비지출/ 소득	60.8	60.8	60.8	59.9	59.0	59.0	59.9	60.8	60.2
	39세 이하 가구	소비지출/ 소득	60.9	60.8	62.0	60.7	58.8	58.4	58.4	60.9	61.4
		가구비율	41.4	39.5	37.7	36.7	36.1	34.8	34.9	32.6	31.1

자료: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가구동향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39세 이하 가구의 전체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은 전 연령대의 평균에 비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가구의 경우, 비근로소득 가구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39세 이하의 가구 비율이 높아서 2003~2011년 기간에 근로자가구에서의 평균 비율은 36.1%인 데 반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4%로 약 8%p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39세 이하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2%인 데 반해, 전체가구의 경우는 평균 62.7%로 나타나고, 전 연령대에 있어서는 근로자 가구는 60.1%, 전체 가구는 63.4%로 3%p가량 차이가 난다.

청년층의 소득의 변화는 소비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소비지출의 변화에 따라 관련 세수가 변화하게 된다. 이 세수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소비관련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를 위주로 살펴볼 수 있고, 추가로 개별소비세나 소비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포함한 폭넓은 소비관련 세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폭넓은 의미에서 소비관련 세수 변화를 살펴보자. <표 III-14>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주요 소비지출 품목별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합친 세금의 평균유효세율과 가구주의 나이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해당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비의 감소가 모든 소비항목에서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소비세수의 감소를 추산하기 위해, 소비지출의 비중을 이용하여 평균유효세율의 가중평균을 구하면 7.47%로, 전체 평균유효세율인 7.38%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III-14〉 소비관련 지출의 주요 품목별 평균 유효세율

(단위: %)

	평균유효세율	39세 이하 가구주 소비지출비중
식음료품 및 비주류음료	2.8	12.3
주류 및 담배	25.06	1.2
의류 및 신발	9.09	6.8
주거 및 수도광열	9.45	9.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8	4.8
보건	0.0	6.3
교통	13.04	12.8
통신	9.08	5.8
오락·문화	6.33	6.2
교육	5.98	9.3
음식·숙박	9.09	12.9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97	11.8
합 계	7.38	100

주: 소비지출비중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한 2010년 기준
자료: 박형수·홍승현(2011)

두 번째 방법은 소비관련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위주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전체 소비 변화에 공식부가세율과 소위 말하는 c-효율성(consumption efficiency)¹⁵⁾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Delta \text{부가가치세수} = \Delta \text{소비액} \times \text{부가가치세율} \times \text{c-효율성}$$

우리나라의 공식부가세율이 10%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층의 소득의 하락은 평균 60.2%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10%의

15) c-효율성은 부가가치세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지표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민간소비부분의 크기 중 부가가치세로 징수되는 비율과 명목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하는 지표이다(전병목, 2011).

부가세율과 0.78의 c-효율성지수를 고려할 때, 약 4.70% 정도의 부가가치세 하락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표 Ⅲ-15〉 부가가치세의 소비효율성 비교(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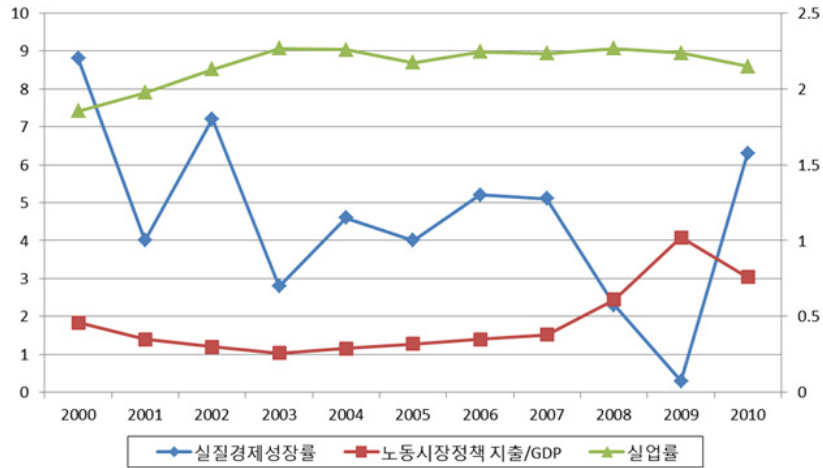
	민간소비	부가세액	부가세율	c-효율성
한국	54.72	4.27	10.0	0.780
독일	56.96	7.10	19.0	0.656
영국	64.20	6.35	17.5	0.565
프랑스	56.88	6.99	19.6	0.627
캐나다	55.54	2.70	5.0	0.971

주: c-효율성은 (부가세액/민간소비)/부가세율로 정의
자료: 전병목(2011)

나. 정부지출 측면

경기변동의 영향에 의한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는 정부의 지출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실업의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의 증가나 정부의 적극적 정책 노력에 따른 직업교육이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출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개인 소득의 감소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하향취업이나 실업을 경험하면서 소득의 감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부(富)의 축적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재정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II-3] 경제성장률, 실업률, 노동시장정책 지출/GDP 추이



자료: OECD, 통계청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추계가 용이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의 지출은 다른 측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가적인 독립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급여의 직접적 비용은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출 수요의 일종의 최소한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개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출의 증가는, 이 개인들이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실업의 위험이 높다는 가정하에서, 실업의 확률의 차이에 평균 수급액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E(\Delta \text{실업급여 지출}) = \Delta \text{실업확률} \times \text{평균지급액} \times \text{해당인구}$$

여기서 해당인구는 실업확률 변화의 대상이 되는 연령그룹을 의미하고, 실업급여의 평균지급액은 <표 III-16>에 나타난 2011년 고용보험 자료의 실적치를 이용한다.

〈표 III-16〉 연령대별 실업급여 수급 실적(2011)

(단위: 명, 일, 원)

연령	표본수	소정급여일수	수급일수	수급총액	일평균수급액
15~19	492	90	74	2,427,314	31,370
20~29	142,314	104	87	2,854,737	32,139
30~39	223,886	143	114	3,929,372	33,894
40~49	173,016	144	114	3,883,113	33,510
50~59	166,076	168	137	4,608,162	32,933
60~64	80,218	164	141	4,537,941	31,751
총계	786,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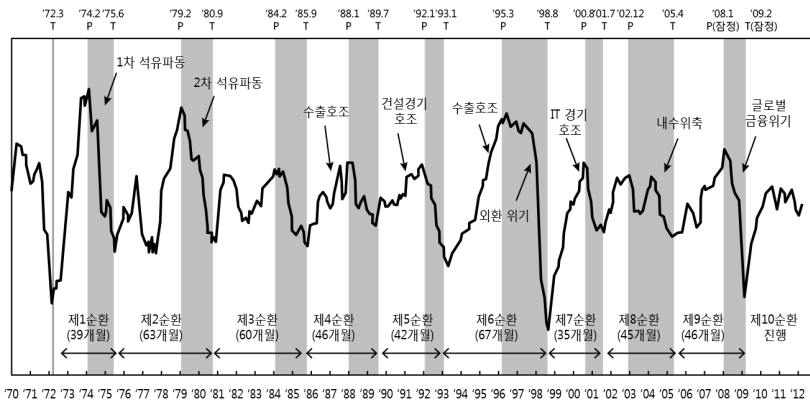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IV. 실증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논의되었던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을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료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체고용 측면에서 (1)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고용관련 지표의 변화를 그리고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를 통해, 전체 취업자들의 소득 측면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3)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미시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험이 향후 노동시장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살펴본다.

[그림 IV-1]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자료: 통계청

우리나라의 과거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기순환이 청년층 초기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결과의 시간에 따른 효과를 보기위해 우선 경기침체에 학교를 졸업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이 두 집단 간의 노동시장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경기순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자료 중 가장 기간이 짧은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로 1998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 2008년 자료인 11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분석을 위한 적절한 기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세 개의 코호트(cohort)를 졸업예상연도를 기준으로 [그림 IV-2]의 경기순환 시기에 따라 선택하였다. 우선 분석의 중심이 되는 1998년 코호트는 경기침체에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층으로,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는 경기확장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층으로 선택하였다.¹⁶⁾ 서로 다른 시기의 두 개의 경기확장기 코호트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노동시장의 추세변화를 고려하여 두 기간의 동일한 경기순환기에 해당하는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또한 분석의 대상은 자료 내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졸 남성으로 한정하였다.

코호트의 구분에 있어 졸업연도의 추정은 기본적으로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동일 학년을 생년월일상에서는 3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로 지정하여 동일 코호트를 구성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는 일부 졸업연도를 제공하기는 하나, 보통 경기변동의 영향을 고려하는 분석에서는 내생성의 문제¹⁷⁾로 실제 분석에서는 생년월일을 이용한 졸업예상연도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대졸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하기에 군복무에 따른 3년¹⁸⁾의 시간을 추가하였다.

16) 이러한 코호트의 구분은 분석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최대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특정 연도를 분석함에 따라 본고의 결과를 1998년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닌 일반적인 경기위축에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 경기불황 등 노동시장의 상황이 안좋은 경우, 개인들은 졸업과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휴학이나 상급학교의 진학을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분석에서 실제 졸업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개인의 전략적 행동의 영향으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해진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는 조사연도에 따라 생년월일 대신 연령을 조사한 경우(1991~2001, 2010)가 있어 이 기간에서는 위의 방식에 따른 코호트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에 사용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특정연도 졸업예상자의 전후로 1년을 추가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였다.

1. 전체 고용관련 지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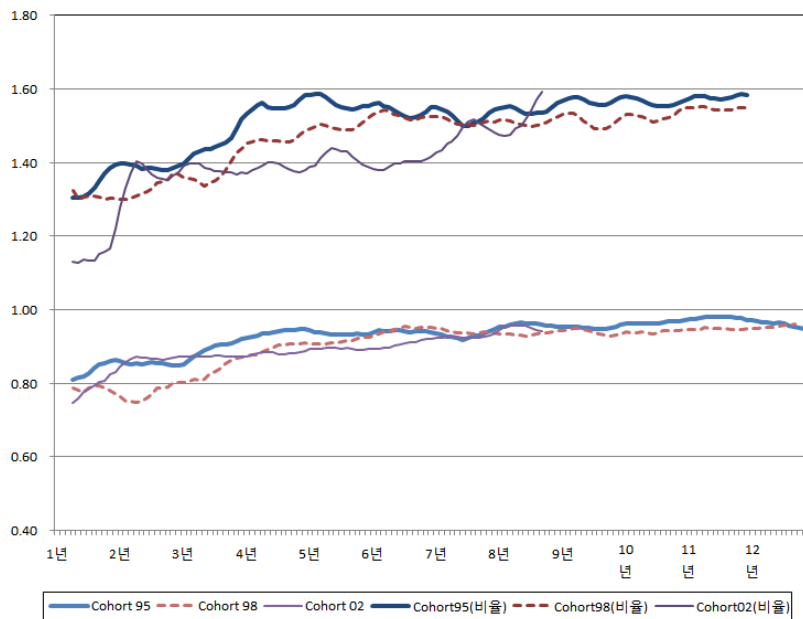
우선 전체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경기침체기와 비(非)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향후 경제활동의 차이를 분석한다. 첫째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전국 3만3천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군인이나 교도소 등의 시설수용자 및 외국인을 제외하고 매월 조사된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 간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다.

코호트는 경기 순환상 3개년을 골라 그 해에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의 대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실질적인 입학 및 졸업연도와 정확한 군복무기간 등의 자료가 조사되지 않고 있기에, 조사대상이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가정하고 대학 4년과 군대의 기간을 합산하여 졸업예상연도를 산출하고, 이 예상연도를 기준으로 1995년도 졸업예상자, 1998년 졸업예상자, 그리고 2002년 졸업예상자의 세 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고용관련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IV-2]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선택한 세 시점은, 경기순환지표상 1995년과 2002년은 경기상승기에 해당하고 1998년은 경기침체기에 해당한다. 1995년과 2002년의 두 번의 경기상승기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남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에

18) 본고에서 고려하는 1995년, 1998년, 2002년 코호트들의 경우, 기본인 육군이 26개월로 2년이 조금 넘으나 해군이나 공군, 부사관 등 이보다 더 긴 기간도 있고, 자료상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3년을 적용하였다.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 왔기에 시간상 변화의 효과를 감안하고자 한 번의 경기침체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경기상승기를 고려하였다.

[그림 IV-2] 코호트별 남성 대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코호트별 경찰률 vs. 전체 경찰률과의 비율)



우선 [그림 IV-2]는 각 코호트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학 졸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졸업한 이후 각 코호트별로 매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해서 $t-3 \sim t+2$ 기간의 6달 이동평균을 나타내었다. 그림은 또한 전체 경기적 상황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개별 코호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해당연도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로 나누어 이 비율도 제시하였다. 앞서 제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15~2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서 살펴보는 세 개의 시점 간에도 청년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

년 53.7%에서 2002년에는 50.5%로 3.2%p 하락하였다.

[그림 IV-2]와 <표 IV-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대학 졸업자들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초기에는 1998년 코호트가, 4~7년의 30대 초반의 기간에는 2002년 코호트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코호트가 초반에 겪는 충격은, 졸업 후 6년 정도가 되어야 1995년 코호트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코호트 간 격차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의 비율을 보았을 때는 이의 대부분은 외부의 거시적 상황이나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II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년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와 2000년대 평균이 약 6%p 정도 차이가 난다. 이 기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에 61.27%와 2000년대에 61.48%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 사이에는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V-2]에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의 비율을 통해 보면 2002년 코호트의 상대적 비율이 1995년 코호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2~3년차에서 2002년 코호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2004~2005년 부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전체적 고용 감소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MF 사태가 한창이던 1998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1995년 호황기 졸업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고 이러한 경향은 6년가량이 지나야 회복되는 모습이나 그 이후로도 소폭 낮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 남성의 실업률은 IMF 사태 이전에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1995년에는 5.1%까지 하락했다가, 1998년에는 14.1%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기는 하지만 IMF 사태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2002년에 8.0%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8~9%에서 유지되는 추세이다.

〈표 IV-1〉 졸업 후 연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의 코호트별 변화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의 비율		
	cohort 1995	cohort 1998	cohort 2002	cohort 1995	cohort 1998	cohort 2002
1년	83.8	78.4	79.2	1.34	1.31	1.15
2년	85.3	77.2	86.5	1.39	1.33	1.36
3년	89.3	83.2	87.3	1.45	1.37	1.38
4년	93.8	89.5	88.1	1.55	1.46	1.39
5년	93.5	91.3	89.4	1.56	1.50	1.41
6년	94.1	94.5	90.6	1.54	1.53	1.40
7년	93.1	93.9	92.6	1.53	1.51	1.48
8년	95.9	93.4	95.0	1.54	1.51	1.5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IV-2〉와 [그림 IV-3]은 세 개 코호트별로 졸업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를 코호트별 실업률($t-3 \sim t+2$ 의 6개월 평균)과, 해당연도의 전체 실업률과의 비율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실업률 자체를 살펴본다면, 1998년 코호트는 IMF 사태로 인해 졸업과 함께 28.02%의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1995년 코호트의 9.39%의 네 배가량 높은 수치이고, IMF 사태 이후 실업률이 높아진 2002년 코호트의 15.3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전체 실업률과의 비율을 따져보면, 1998년 당시 전체적인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기에 1998년 코호트의 실업률은 오히려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¹⁹⁾ 이러한 실업률 수준과 전체실업률과의 비율상에 있어서 코호트간 차이는 2~3년 만에 거의 사라져서 4년차 정도에는 다른 코호트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률 자체에 있어, 제II장에서 살펴본, IMF 사태 이후 2000년

19)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층 남자의 실업률은 IMF 사태 당시 크게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전체 실업률의 상승이 더 높아서, 전체와의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에 전반적인 수준의 상승이 2002년 코호트와 1995년 코호트 간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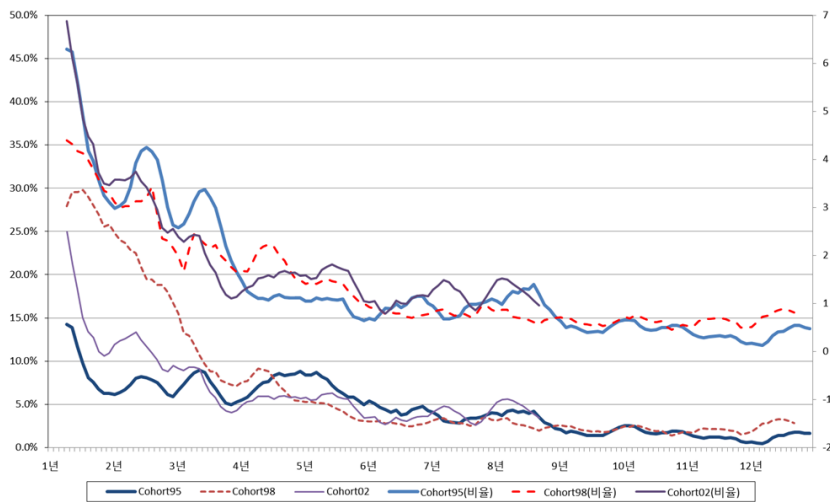
〈표 IV-2〉 졸업 후 연평균 실업률의 코호트별 변화

(단위: %)

	실업률			전체 실업률과의 비율		
	cohort 1995	cohort 1998	cohort 2002	cohort 1995	cohort 1998	cohort 2002
1년	9.39	28.02	15.38	4.57	3.81	4.77
2년	7.10	20.84	11.32	3.52	2.89	3.23
3년	7.01	10.11	6.90	2.71	2.04	1.85
4년	7.59	7.43	5.69	1.16	1.88	1.53
5년	6.99	4.41	5.43	0.97	1.34	1.57
6년	4.46	2.80	3.30	0.94	0.80	1.02
7년	3.42	3.05	3.87	0.88	0.82	1.21
8년	3.68	2.65	4.82	1.12	0.71	1.3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V-3] 코호트별 남성 대졸이상 실업률의 변화
(실업률 vs. 전체실업률과의 비율)



고용관련 지표 중,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를 이용해서 평균 근속기간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IV-3>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대졸 남성은 연령대별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25~29세의 경우 1980년도에는 평균 근속년수가 2년이었으나 1990년에는 2.49년, 1998년까지는 2.81년까지 늘었다가 이후에는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1.5년을 약간 넘는 수준, 그리고 2010년에는 2년으로 1980년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1980년대 이후 늘어나던 청년층의 근속년수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대 후반의 경우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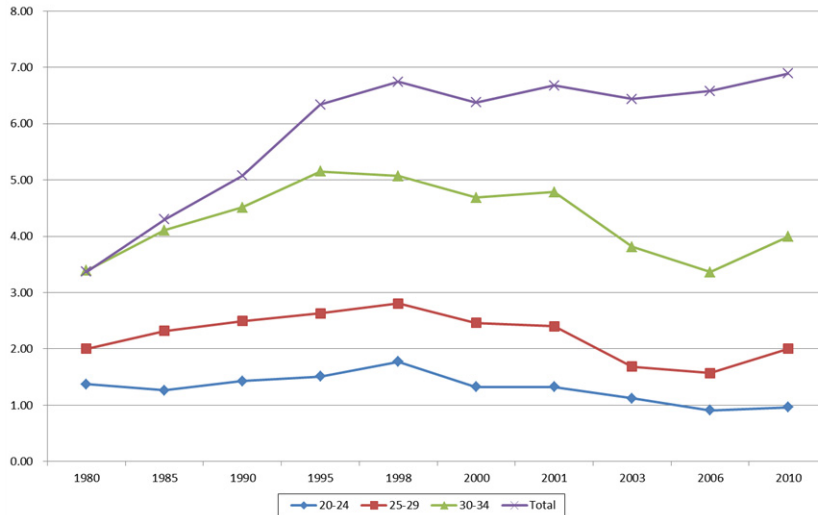
<표 IV-3> 평균 근속년수 추세(대졸 남성)

(단위: %)

연도 연령	1980	1985	1990	1995	1998	2000	2001	2003	2006	2010
15~19세	0.89	0.54	0.77	0.68	0.81	0.59	0.72	0.42	0.49	0.53
20~24세	1.37	1.27	1.43	1.51	1.77	1.33	1.33	1.12	0.91	0.96
25~29세	2.00	2.32	2.49	2.63	2.81	2.46	2.40	1.68	1.57	2.00
30~34세	3.39	4.11	4.51	5.15	5.07	4.69	4.79	3.81	3.37	3.99
35~39세	4.62	5.71	6.47	7.57	7.57	7.18	7.36	6.39	6.09	6.38
40~44세	5.53	6.80	7.85	9.54	9.70	9.15	9.41	8.69	8.58	8.94
45~49세	6.19	7.73	8.76	10.54	11.09	10.54	11.01	10.24	10.49	10.93
50~54세	6.74	8.40	9.06	10.47	11.18	10.61	10.99	10.81	11.43	11.99
55세이상	6.43	7.67	7.62	7.90	7.91	7.30	7.40	7.42	8.17	8.02
Total	3.37	4.30	5.07	6.34	6.74	6.38	6.67	6.44	6.58	6.89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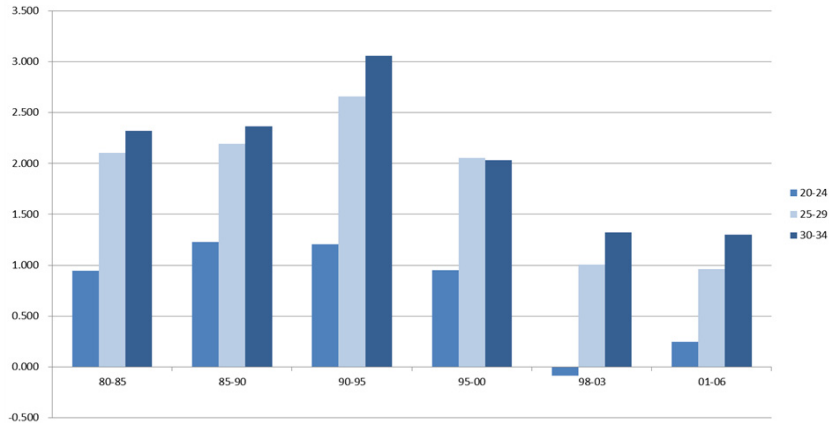
[그림 IV-4] 평균 근속년수의 추이



만일 대졸 청년 전체를 본다면, 이러한 하락 추세는 거의 미미한 정도로, 1980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평균 근속년수는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IMF 사태 이후 잠시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6~7년 사이의 근속년수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대졸 남성의 근속년수 하락추세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체 수준의 평탄한 움직임은 청년층에서 근속년수가 감소하는 동안 나머지 연령층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경기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적절한 직장을 찾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중 하나가 하향취업의 경향인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얻게 되지 못하자, 자신의 기대수준 혹은 평시라면 들어갈 수 있었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불황기 취업자들의 큰 특징은 이후 이직을 자주한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잦은 이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찾아가기에, 전반적으로 근속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IV-5] 청년층의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



[그림 IV-5]는 20~24세, 25~29세, 그리고 30~34세 그룹이 x축의 5년의 기간 사이에 평균 근속년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막대그래프의 높이는 5가 될 것이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나, 그 이후로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5년간은 20대 초반 청년층 남성의 경우 오히려 평균 근속년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앞서 설명한 하향취업의 경향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일 기간에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근속년수 변화도 각각 1년과 1.3년으로, 1995~2000년 기간과 2001~2006년 기간 사이의 전반적인 추세와 비교한다 하여도 뚜렷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4〉 남성 평균 근속년수 변화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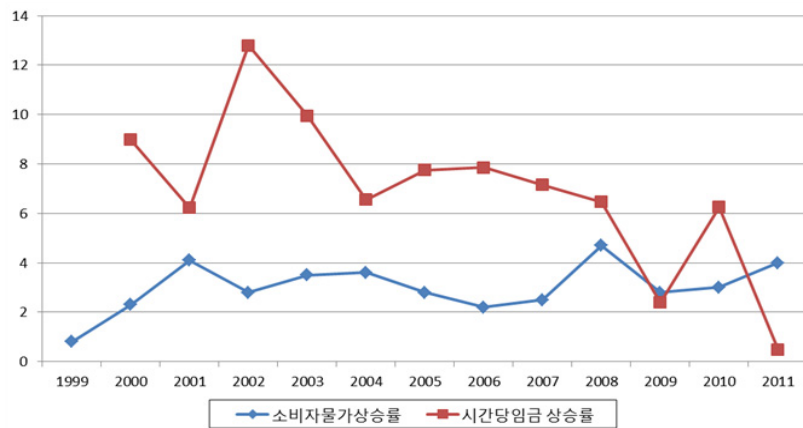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1998~2003	2001~2006
15~19세	0.378	0.887	0.742	0.645	0.313	0.191
20~24세	0.947	1.228	1.205	0.951	-0.086	0.245
25~29세	2.103	2.195	2.659	2.056	1.004	0.963
30~34세	2.319	2.362	3.059	2.032	1.323	1.300
35~39세	2.179	2.140	3.072	1.576	1.120	1.226
40~44세	2.201	1.959	2.686	0.995	0.540	1.085
45~49세	2.212	1.333	1.708	0.068	-0.287	0.417
50~54세	0.929	-0.783	-1.155	-3.168	-3.762	-2.819

2. 전체 임금관련 지표의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인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볼 수 있는 반면 낙 인효과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 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전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IV-6]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시간당임금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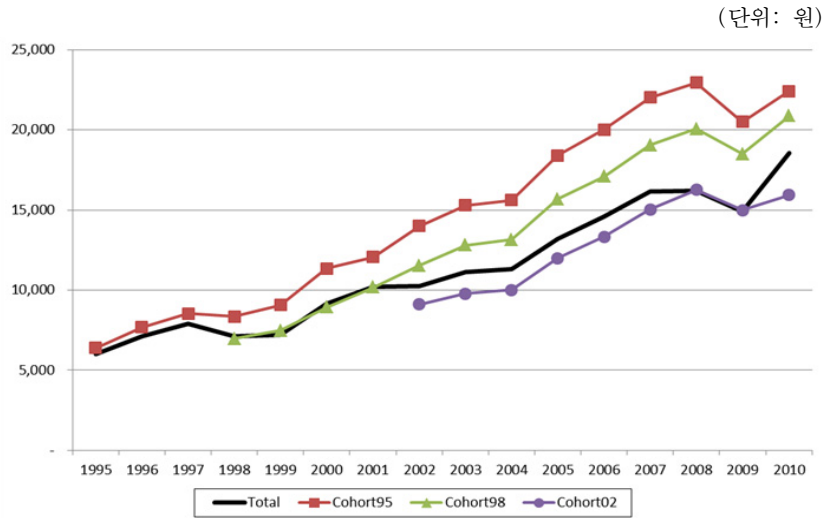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우선 자료에 나타난 임금분포를 살펴보기 전에 임금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V-6]은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본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 추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전까지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평균 3%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살펴보는 코호트 간 임금수준의 비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용한 명목임금의 실질임금으로의 변환은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의 변화를 일부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7]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으로 변환한, 대졸 남성의 세 개 코호트별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의 추세를 해당연도 전체(여성 및 고졸 및 초대졸 포함 전연령층)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의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95년에는 대졸 남성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이 전체의 평균에 비해 소폭 높았으나 1998년에는 소폭 낮아졌고, 2002년에는 1천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앞서 언급한 대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경우, 졸업 후 실질임금의 수준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코호트는 1995년 코호트에 비해 졸업 후 1~2년 사이 평균실질임금이 35%가량 상승한 반면 1998년 코호트는 3% 정도의 상승만을 기록하고 있어 졸업 후 초기의 청년 남성의 임금수준이 1998년 코호트의 경우 2002년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의 둔화이다. 경기 침체기의 임금수준의 하락을 제외하고 본다면, 세 개 코호트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당 실질임금의 연령에 대한 증가추세가 소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7] 코호트별 시간당 실질임금의 추세



다음으로는 임금수준과 연령 사이의 관계에 있어 코호트 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통상 Mincer equation이라고 불리는 임금방정식의 아주 간단한 형태로 다음의 회귀식을 시간당 실질임금에 대해 코호트별로 추정하였다.

$$\ln\left(\frac{w}{h}\right)_{it} = \alpha_0 + \alpha_1 Age_{it} + \alpha_2 Age_{it}^2 + u_{it}$$

<표 IV-5>에는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시간당 실질임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U자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변해가고, 가장 높아지는 시점은 1995년 코호트의 경우는 약 47.8세, 1998년 코호트의 경우는 41.9세로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한 남성의 경우 좀 더 빨리 최고점에 도달하나, 최대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대졸 남성이 졸업하는 26세를 기준으로 볼 때, 1995년 코호트와 1998년 코호트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코호트는 극단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당 실질임금이 최고값을 갖는 연령이 34.1세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자료의 기간상 2002년 코호트의 경우 30대 중반까지의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의 금융위기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추정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8]은 이러한 임금방정식의 추정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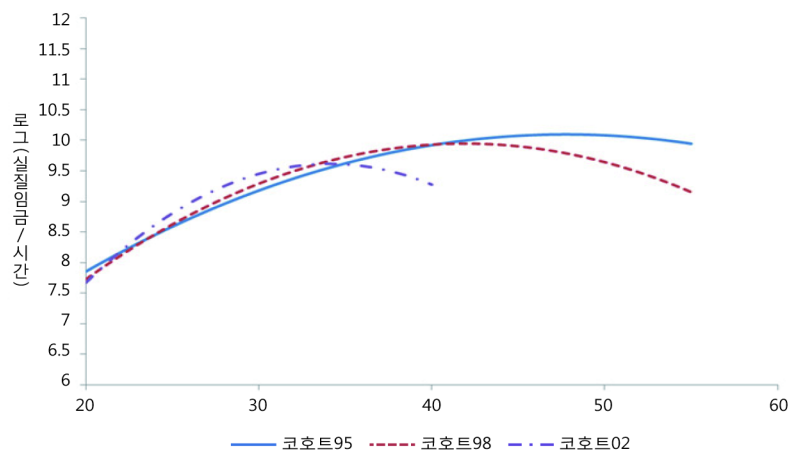
〈표 IV-5〉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VARIABLES	Cohort 1995 lnwph	Cohort 1998 lnwph	Cohort2002 lnwph
age	0.28*** (0.00286)	0.39*** (0.00541)	0.67*** (0.0242)
age2	-0.003*** (4.21e-05)	-0.005*** (8.19e-05)	-0.01*** (0.000403)
Constant	3.46*** (0.0479)	1.82*** (0.0887)	-1.76*** (0.361)
Observations	167,354	119,456	40,187
R-squared	0.463	0.337	0.189
극대값연령	47.77	41.90	34.10
극대값	10.10	9.95	9.62
초기값(26세)	8.72	8.78	8.97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그림 IV-8] 연령에 따른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의 변화



이 간단한 추정의 결과로만 본다면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남성들인 1998년 코호트의 경우, 평균 초임(26세 기준)이 오히려 호황기인 1995년에 비해 소폭 높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시간당 실질임금도 약간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증가세가 일찍 수그러들어, 시간당 임금의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기는 1995년 코호트에 비해 6년가량 빠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998년 코호트의 초임의 비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절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2년 코호트의 초임이 훨씬 더 높은 수준임을 볼 때, 지속적으로 임금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노동 시장에서 불황기에 일자리(job opening)가 줄어들면서 임금수준이 낮은 한계 일자리(marginal job)들이 사라지고 여전히 높은 보수수준을 유지하는 직장들만 고용을 이어간 결과, 임금의 분포를 볼 때 1998년의 경우는 저임금 일자리(lower tail)의 실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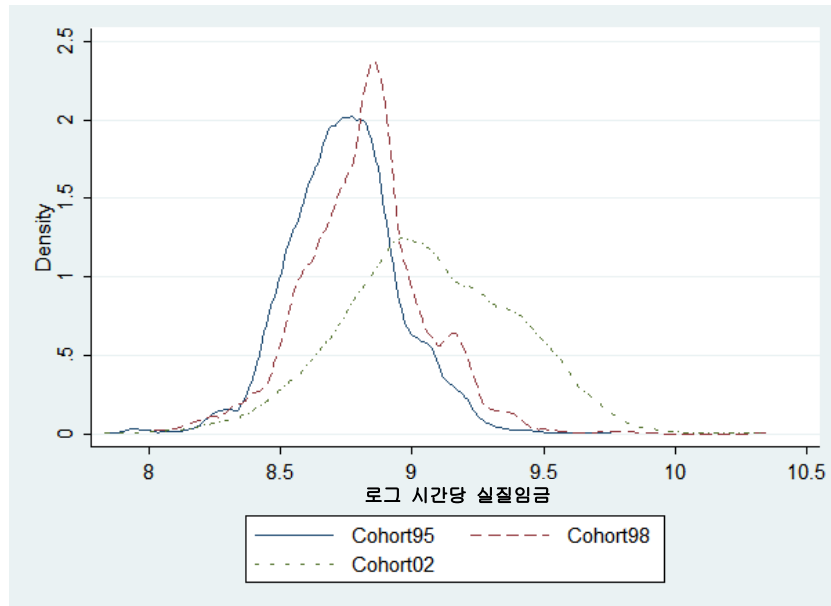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간당 실질임금의 분포와 관련된 것이다. <표 IV-6>은 코호트별 시간당 실질임금의 3차 모멘트(3rd moment)까지와 최소, 최대, 중위값을 졸업 후 1, 2, 5, 그리고 8년차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IV-6〉 대졸 청년 남성의 시간당 실질임금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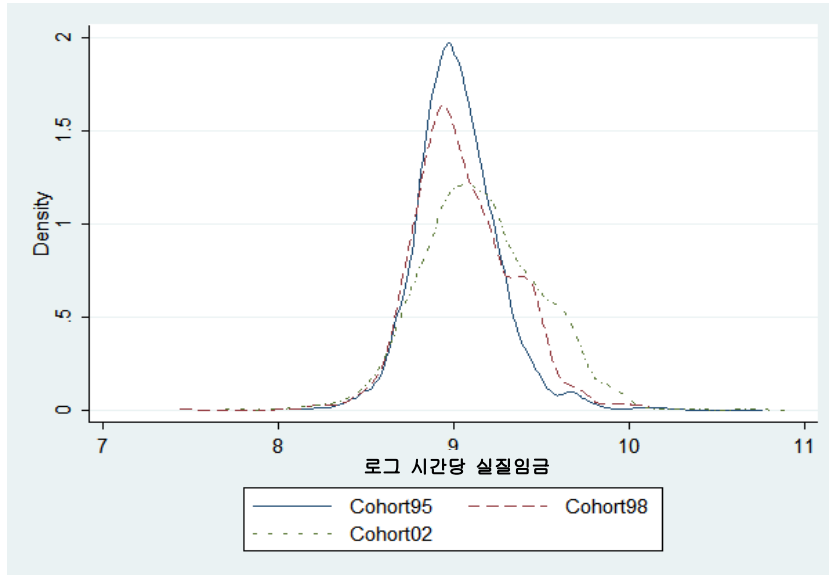
	시간당 실질임금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		
	Cohort 1995	Cohort 1998	Cohort 2002	Cohort 1995	Cohort 1998	Cohort 2002
1년차						
mean	3,852.52	4,937.17	9,115.57	8.23	8.48	9.06
sd	838.31	1,284.99	3,116.30	0.21	0.24	0.33
skewness	1.09	2.53	1.13	0.06	0.28	-0.04
min	1,517	2,160	2,521	7.32	7.68	7.83
median	3,760.00	4,839.06	8,413.97	8.23	8.48	9.04
max	10,415	22,356	30,495	9.25	10.01	10.33
2년차						
mean	4,846.88	5,350.51	9,775.95	8.46	8.54	9.13
sd	1,214.29	1,587.90	3,653.58	0.23	0.30	0.34
skewness	2.75	1.78	2.22	0.18	-2.33	0.21
min	1,329	26	2,430	7.19	3.26	7.80
median	4,654.14	4,994.57	8,907.53	8.45	8.52	9.09
max	26,042	21,346	54,557	10.17	9.97	10.91
5년차						
mean	6,477.83	9,006.37	13,334.37	8.73	9.04	9.44
sd	2,367.61	3,399.99	5,022.98	0.28	0.35	0.33
skewness	6.67	1.69	3.08	0.89	0.18	0.27
min	611	1,948	3,452	6.41	7.57	8.15
median	6,045.34	8,305.65	12,354.89	8.71	9.02	9.42
max	56,517	39,340	94,040	10.94	10.58	11.45
8년차						
mean	10,946.57	13,527.27	17,992.80	9.23	9.44	9.55
sd	4,455.94	5,625.89	6,134.18	0.36	0.37	0.36
skewness	2.12	2.92	2.86	0.27	0.19	0.10
min	2,201	2,860	2,679	7.70	7.96	7.89
median	9,963.86	12,581.92	14,056.66	9.21	9.44	9.55
max	65,104	110,190	109,648	11.08	11.61	11.6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해 살펴본 시간당 실질임금의 분포에서는 경기변동의 효과로 볼 수 있는 코호트에 따른 큰 변화를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가 1995년 코호트에 비하여 1998년 코호트나 2002년 코호트에서 시간당 실질임금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5년차 까지도 지속되다가 8년차 정도에야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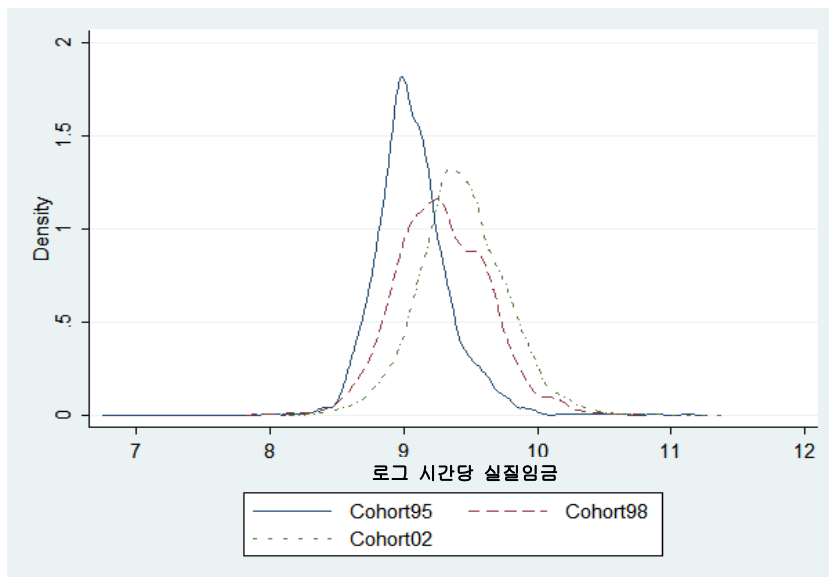
[그림 IV-9] 1년차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의 분포



[그림 IV-10] 2년차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



[그림 IV-11] 5년차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



3. 경기침체의 고용 효과의 추정

경기 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이 겪는 구체적인 낙인효과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낙인효과는 임금과 고용의 양 측면에서 발생한다. 우선 임금 측면의 낙인효과를 살펴보면,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취업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소득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초기 기간의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하향취업이나 장기간 실업에 따른 낙인효과로 인해, 초기 근로소득의 감소가 증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의 낙인효과는, 초기의 부정적 노동시장 경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이직률을 보이게 되는 효과인데,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고용 측면에서의 낙인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양 측면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모두 살펴으로써,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전체적인 임금수준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이는지, 또 향후 고용상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1차년도(1998)부터 11차년도(2008)년도까지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졸 남성으로 한정하였고, 졸업 예상연도를 기준으로 1995년 코호트, 1998년 코호트, 그리고 2002년 코호트를 분리하였다. 이 외에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지역별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의 자료를 추가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소득변수에서 나타나는 이상치 및 생년월일 등이 식별 불가능한 관측치들을 제거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들의 개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7〉 코호트별 관측치 수

(단위: 명)

	Cohort 1995	Cohort 1998	Cohort 2002	전체
개인수	165	198	196	1526
1~11차 관측치	954	990	782	7561

주요 분석 대상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IV-8〉에 전체와 코호트 별로 정리되어 있다.

〈표 IV-8〉 주요변수의 코호트별 기초통계량

(단위: 원, 시간)

변수	95코호트		98코호트		02코호트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질임금	2,571,309	2,188,355	2,049,702	1,939,296	1,700,213	1,286,767	2,485,274	4,634,786
근로시간	192.0	82.2	173.5	96.0	161.3	100.8	166.7	102.3
시간당 실질임금	11,696.0	10,234.4	9,063.2	6,711.9	8,231.3	6,557.8	10,532.4	10,574.5
교육적합도 (1~5)	2.71	0.55	2.77	0.49	2.76	0.52	2.70	0.57
기술적합도 (1~5)	2.75	0.53	2.78	0.49	2.79	0.50	2.72	0.55
경과년수	9.50	3.21	6.60	2.96	4.41	1.93	16.2	12.3
직업훈련여부 (0~1)	0.18	0.38	0.18	0.39	0.16	0.37	0.14	0.35
대학접수 (0~2)	1.07	0.81	1.20	0.84	1.08	0.80	1.33	0.80
수도권직장 (0-1)	0.42	0.49	0.40	0.49	0.40	0.49	0.36	0.48
20대후반 실업 경험여부 (0~1)	0.16	0.37	0.42	0.49	0.48	0.5	0.15	0.36

주: 실질임금, 근로시간, 시간당 실질임금은 월 평균값으로서, 미취업자는 0의 값으로 환산함.
경과년수는 졸업이상연도(만 나이기준)로부터 경과한 햇수를 의미
적합도는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교육/기술수준보다 높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값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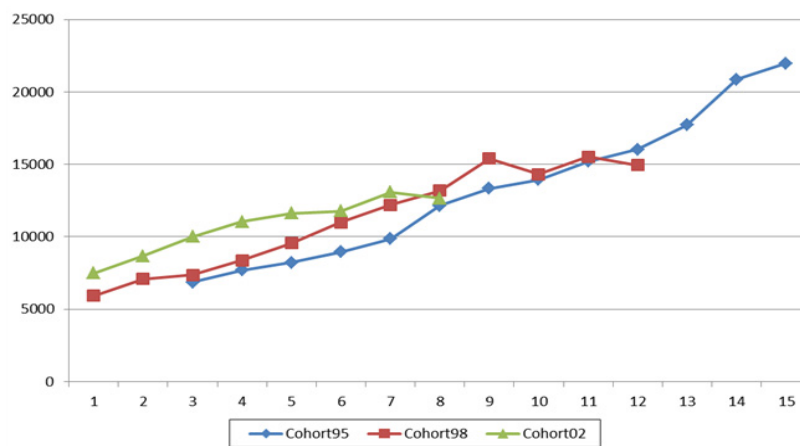
분석에 사용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지만 몇몇 변수들은 본고의 분석을 위해 생성해서 사용하였다. 우선 경과년수(exp)는 코호트를 나누는 기준과도 관련이 되는데, 나이

를 기준으로 졸업예상연도를 설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1년씩 더해나가는 변수이다. 이는 졸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과 고용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수도권 직장 여부(firm_sma)는 더미 변수로, 해당 직장의 소재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20대 후반 실업 경험 여부(scar)도 더미변수로, 25~29세 사이에 실업상태로 보고된 적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이는 노동시장 초기 경험의 영향을 보고자 생성한 변수이다.

시간당 실질임금의 경우는 앞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에 따른 상승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코호트에 비해 2002년 코호트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후반부에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초반부에 있어서는 1998년 코호트에 비해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임금 상승률의 영향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3년차부터 나타나는 1995년 코호트의 시간당 실질임금의 추세를 볼 때, 1998년 코호트의 시간당 실질임금 수준은 대학 졸업 후 4~5년 정도까지는 1995년 코호트 수준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V-12] 코호트별 졸업 후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



가. 임금에의 효과 추정

개인의 임금수준은 실업상태인 경우 관측되지 않으므로, 시간당 실질 임금은 실업자의 경우는 0으로, 취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는 양(+)의 값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실질임금의 분포는 아래쪽이 0에서 잘린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은 모수추정에 편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임금에의 낙인효과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패널 T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begin{aligned} y_{it}^* &= D_i \alpha + X_{it} \beta + u_{it} \\ y_{it} &= 0 \quad \text{if } y_{it}^* = 0 \\ y_{it} &= y_{it}^* \quad \text{if } y_{it}^* > 0 \end{aligned}$$

여기서 y_{it} 는 개인 i 의 t 시점에서의 로그실질임금을 나타내고, y_{it}^* 는 이 로그실질임금의 latent variable로 실업상태에서 실질임금을 0이라고 보고한 개인들이,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상태에 있을 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당 실질임금의 로그값을 의미한다. D_i 는 코호트 더미변수로 1998년 코호트(c98)와 2002년 코호트(c02)를 사용하였다. X_{it} 는 기타 설명변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임금방정식의 가장 큰 요소인 경력/학력 관련 변수는 경과년도(exp)를 변수로서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2차항까지 모형에 포함시켰다. 각 코호트별로 경과변수와 코호트 더미변수와의 교차항(c98exp, c02exp)을 추가하여, 각 코호트에 있어 초기 임금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호트별로 시간당 실질임금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를 함께 고려하였다.

〈표 IV-9〉 패널 Tobit 모형 추정 결과

〈lnpph〉	(1)	(2)	(3)	(4)	(5)	(6)	(7)
exp	0.346** (0.152)	0.319** (0.153)	0.276* (0.155)	0.261* (0.156)	1.096*** (0.153)	1.154*** (0.160)	1.049*** (0.136)
exp2	-0.0164** (0.00810)	-0.0154* (0.00813)	-0.0126 (0.00822)	-0.0123 (0.00826)	-0.0487*** (0.00829)	-0.0516*** (0.00860)	-0.0467*** (0.00757)
c98exp	0.213*** (0.0688)	0.188*** (0.0683)	0.264*** (0.0698)	0.237*** (0.0695)	0.0933 (0.0706)	0.0514 (0.0740)	0.115* (0.0648)
c98	-1.335** (0.615)	-1.102* (0.604)	-2.583*** (0.645)	-2.400*** (0.637)	-0.783 (0.647)	-0.570 (0.673)	-1.070* (0.575)
c02exp	0.334*** (0.109)	0.370*** (0.110)	0.430*** (0.111)	0.468*** (0.112)	-0.0813 (0.166)	0.0660 (0.118)	-0.0629 (0.212)
c02	-1.410* (0.720)	-1.651** (0.720)	-2.964*** (0.748)	-3.257*** (0.751)	0.938 (1.089)	0.0140 (0.781)	
rank					-0.0592 (0.212)		-0.0629 (0.212)
firm_sma	3.526*** (0.205)	3.212*** (0.196)	4.053*** (0.211)	3.665*** (0.204)			
scar	-3.399*** (0.262)	-3.533*** (0.259)					
train	0.374** (0.180)		0.390** (0.183)				
Constant	5.424*** (0.693)	5.867*** (0.693)	4.868*** (0.713)	5.279*** (0.715)	2.603*** (0.751)	2.281*** (0.751)	2.954*** (0.643)
# of Obs.	2,154	2,280	2,154	2,280	1,678	2,280	1,678
# of PID	491	494	491	494	333	494	333

주: 1. rank: 학교순위에 따른 더미변수
 2. firm_sma: 직장이 수도권인가(1)에 대한 더미변수
 3. scar: 졸업 후 5년 이내에 실업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더미변수
 4. train: 직업훈련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패널 Tobit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IV-9〉에 정리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임금방정식의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력변수에 대한 역U자형의 기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낙인효과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20대 후반의 실업 경험에 대한 변수(scar)를 이용한 것과,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자하는 경기변동의 효과에 따른 코호트 구분을 통한 효과의 파악이다. 처음 두 모형에서는 코호트더미와 실업 경험더미가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 초반의 실업 경험이 시간당 실질임금에 강한 음(-)의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코호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코호트 효과의 크기는 실업경험더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의 효과에 따른 코호트 효과는, 1998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 모두에서 진입 초기 시간당 실질임금 수준이 1995년 코호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력변수와의 교차항값이 양(+)의 값이 나온 것을 볼 때, 초기에 있어서의 낮은 임금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02년 코호트의 임금수준이 1998년 코호트의 경우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의 사이클로 보면, 2002년은 닷컴버블의 붕괴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기간 중이었으나, 앞의 제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특성은 1995년과는 뚜렷하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 시기이다. 정확한 이유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기적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가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고용에의 효과 추정

한편 고용 측면에서의 낙인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패널 Probit모형을 추정하였다. 고용에서의 낙인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상태 변수가 취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이므로,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아래와 같이 고용변수의 latent variable을 이용한 이항변수 Pr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begin{aligned}
 U_{it}^* &= D_i\alpha + X_{it}\beta + u_{it} \\
 U_{it} &= 1 \quad \text{if } U_{it}^* > 0 \\
 U_{it} &= 0 \quad \text{otherwise}
 \end{aligned}$$

종속변수 U_{it} 는 개인 i 의 t 시점에서의 실업 여부(1=취업, 0=미취업/실업)를 나타내고, 개인더미변수로 1998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를 비롯하여, 이들 코호트더미와 경력변수와의 교차항, 25~29세 사이의 실업 경험 여부와 경력변수 사이의 교차항을 사용하였다.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로는 개인의 거주지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그 지역의 실업률(ue_r)을 사용하였고, 모친의 학력수준(moedu1)과 부친의 학력수준(faedu2), 그리고 결혼 유무(mar)를 모형에 포함하였다.²⁰⁾ 추가적으로 거시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경제성장률(gg1)을 추가하였다.

패널 Probit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IV-10>에 정리되어 있다. 예상한 대로, 1998년 코호트더미가 유의하게 취업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만 경력이 쌓이면서 이 효과는 줄어드는 것(c98exp의 양(+)의 효과)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 후반의 실업 경험도 나중에 경력이 쌓여도 여전히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2002년 코호트의 경우는, 앞서 시간당 실질임금 분석과 마찬가지로 1998년 코호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변수로, 기혼 여부가 취업에 뚜렷한 양(+)의 효과를 주고 지역의 실업률은 취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모친의 학력수준(moedu1)과 부친의 학력수준(faedu2) 모두 0과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지만 구분이 되는 학력수준이 다르다. 교육수준을 크게 초등교육(초교), 중등교육(중·고교), 고등교육(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눈 후 부친은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을 경우 1로, 모친은 중등교육 이상을 받았을 경우 1로 코딩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코호트의 부모 세대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높았던 측면과 모친 학력수준을 부친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기준으로 놓게 되면 관측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분석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였다.

〈표 IV-10〉 패널 Probit 모형 추정 결과

<emp>	(1)	(2)	(3)	(4)	(5)	(6)	(7)	(8)
c98	-1.032*** (0.297)	-1.149*** (0.303)	-1.066*** (0.302)	-0.941** (0.367)	-1.022*** (0.373)	-1.013*** (0.329)	-1.100*** (0.317)	-1.202*** (0.323)
c02	-1.379*** (0.350)	-1.425*** (0.352)	-1.277*** (0.354)	-0.748 (0.576)	-0.773 (0.576)	-0.791 (0.867)	-0.974* (0.558)	-1.013* (0.560)
c98exp	0.167*** (0.0356)	0.180*** (0.0362)	0.173*** (0.0361)	0.146*** (0.0455)	0.157*** (0.0462)	0.173*** (0.0411)	0.197*** (0.0389)	0.209*** (0.0396)
c02exp	0.261*** (0.0510)	0.268*** (0.0511)	0.254*** (0.0513)	0.107 (0.0893)	0.113 (0.0892)	0.136 (0.144)	0.159* (0.0888)	0.166* (0.0886)
exp	0.150*** (0.0331)	0.146*** (0.0331)	0.128*** (0.0332)	0.152*** (0.0410)	0.150*** (0.0409)	0.108*** (0.0371)	0.130*** (0.0366)	0.128*** (0.0366)
scarexp	-0.174*** (0.0206)	-0.173*** (0.0205)	-0.162*** (0.0207)	-0.136*** (0.0270)	-0.136*** (0.0270)	-0.140*** (0.0247)	-0.157*** (0.0250)	-0.156*** (0.0250)
ue_r	-0.172*** (0.0402)	-0.155*** (0.0409)	-0.140*** (0.0412)	-0.148*** (0.0496)	-0.136*** (0.0504)	-0.159*** (0.0509)	-0.176*** (0.0455)	-0.158*** (0.0465)
gg1		0.0281** (0.0115)	0.0282** (0.0115)		0.0209 (0.0141)	0.0340*** (0.0126)		0.0257** (0.0121)
moedul				-0.473*** (0.179)	-0.477*** (0.179)			
faedu2						-0.113 (0.216)		
rank							-0.121 (0.103)	-0.119 (0.103)
mar			0.322*** (0.123)	0.245 (0.159)	0.250 (0.159)	0.210 (0.162)	0.258* (0.150)	0.261* (0.151)
Constant	1.735*** (0.401)	1.585*** (0.407)	1.080** (0.447)	1.502*** (0.557)	1.375** (0.564)	1.493*** (0.540)	1.624*** (0.500)	1.464*** (0.508)
#of Obs	2,611	2,611	2,611	1,709	1,709	1,639	1,952	1,952
#of PID	516	516	516	277	277	297	347	347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모친의 학력수준이 자식들의 취업확률에 항상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뚜렷한 해석이 어려워 또 다른 연구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4. 중장기적 재정 효과 분석

이제 앞 절의 통계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제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불황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 남성그룹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앞의 통계분석의 단위가 개인이므로 여기에서도 재정효과를 개인단위에서 재정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임금수준에 대한 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1998년 코호트의 개인이 1995년 코호트나 2002년 코호트의 근로자들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파악하여, 임금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한다.

임금수준의 변화에 사용할 추정식은 <표 IV-9>의 결과 중 1번 모형과 4번 모형을 이용하여, 이 두 가지 경우에 재정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해 보자.

$$\begin{aligned} \hat{y}_{it} = & 5.424 + 0.346 \times \exp_{it} - 0.0164 \times \exp_{it}^2 \\ & + 3.526 \times firmsma_{it} + 0.374 \times train_{it} - 3.399 \times scar_i \\ & + (0.213 \times \exp_{it} - 1.335) \times co98_{i+} + (0.334 \times \exp_{it} - 1.41) \times co98_i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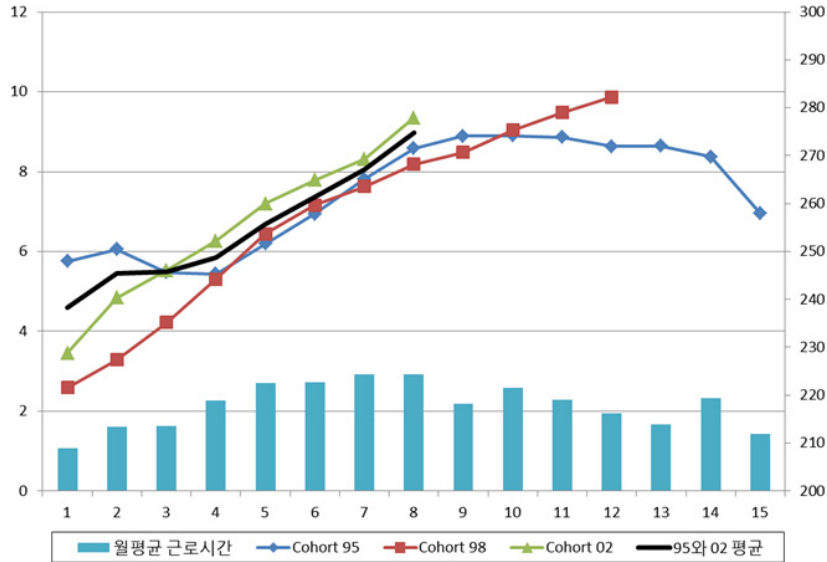
1번 모형의 경우 위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코호트에 대해 졸업 이후의 각 연도의 설명변수 평균치를 사용하여 해당연도 평균 로그 실질임금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V-13]은 이 추정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 간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둘의 평균을 이용하여 1998년 코호트의 경기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코호트의 초기 저임금 경향은 초기 4년까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년 이후 다시 발생하는 평균에서의 괴리는 2002년 그룹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만을 포함하는 데이터이고, 특히 그 후반부에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에 후반부 변화방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해석을 내리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1995년 코호트와 1998년 코호트만을 비교하는 경우, 초기 경기상황의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기는 더욱 커지고, 약 4~6년 뒤 임금수준의 차이는 없어지나 7년차부터 다시 증가하여 9년차까지 지속적으로 1998년 코호트는 시간당 실질임금에 있어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제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의 중간값을 이용하여 1998년 코호트의 처음 5년 동안의 연봉 차이를 살펴보자. <표 IV-11>은 이 계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률의 차이로부터 월평균 근로시간을 곱하여 월평균 임금의 차이를 구하고, 이로부터 연평균 임금차이를 계산하였다.

소득세의 변동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소득세 한계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2년 코호트를 기준으로 졸업 후 연도별 평균연봉을 구하고, 제Ⅲ장 제2절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해당 소득대의 평균과세표준 금액을 구해보면, 졸업 후 처음 3년간은 6%의 세율을 적용받고, 4년차부터는 한계세율이 15%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수 감소분을 구하면 첫해에는 1만원 정도에서, 마지막 해에는 7.4만원까지 증가하여 5년간의 총소득세수 감소분은 12.7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IV-13] 로그 시간당 평균임금의 추정치와 월평균 근로시간(모형 1)



사회보험료는 소득 감소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합하여 총 17.23%를 적용하는 경우 5년간 총 35.5만원 정도의 사회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었다. 소비 관련 세수의 경우는 관련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 소득의 약 60%가량이 소비에 지출되고, 10%의 명목부가가치세율과 c-효율성을 고려하면, 전체 소득 변화의 4.7%가량이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 연평균 임금 차이가 5년간 총 9.7만원의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재정수입 변화를 합치면, 경기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개인의 경우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실업을 겪거나 하향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평균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초기 5년 간 개인당 평균 65.4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1〉 재정수입 감소 추계(모형 1)

(단위: 시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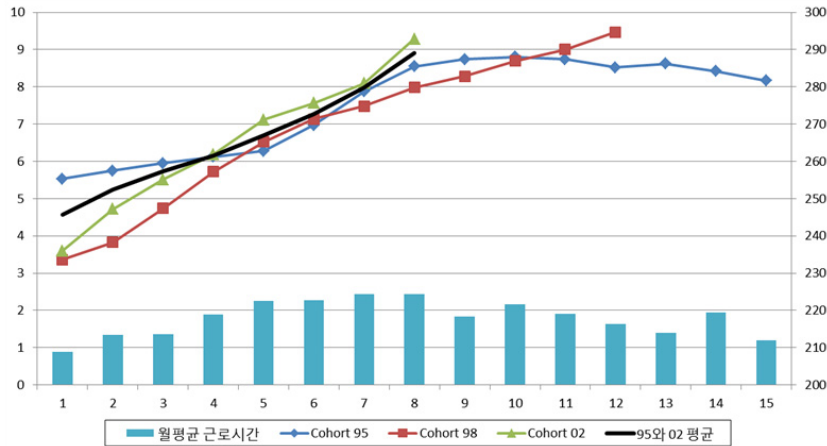
졸업후 기간	월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률 차이	연평균 임금차이	Cohort 2002 평균연봉	소득세수 감소	사회보험료 감소	부가가치세 감소	합계
1	209	87	217,229	1,380	13,033.7	37,428.5	10,209.8	60,672.0
2	213	205	524,354	1,680	31,461.2	90,346.2	24,644.6	146,452.1
3	214	176	452,256	1,800	27,135.4	77,923.7	21,256.0	126,315.1
4	219	144	377,064	2,208	56,559.7	64,968.2	17,722.0	139,249.9
5	223	184	491,286	2,208	73,692.9	84,648.6	23,090.4	181,431.9
합계			2,062,189.4		201,882.9	355,315.2	96,922.9	654,121.0

한편 모형 4를 이용한 추계에서는 다음의 회귀식을 이용한다.

$$\hat{y}_{it} = 5.279 + 0.261 \times \exp_{it} - 0.0123 \times \exp_{it}^2 + 3.665 \times firmsma_{it} \\ + (0.237 \times \exp_{it} - 2.4) \times co98_{i+} + (0.468 \times \exp_{it} - 3.257) \times co98_i$$

모형 1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정하는데, [그림 IV-14]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 4를 이용하는 경우 5년차에서는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에 있어 1998년 코호트가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모형 4의 경우는 졸업 후 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정하기로 한다.

[그림 IV-14] 로그 시간당 평균임금의 추정치와 월평균 근로시간(모형 4)



모형 4를 이용한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한 추계는 <표 IV-12>에 정리되어 있다. 앞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수는 4년간 총 12.7만원, 소득의 감소에 따른 사회보험료 수입은 25.3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었다. 부가가치세수는 4년간 총 6.9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재정수입 변화를 합치면, 개인당 평균 44.9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표 IV-12> 재정수입 감소 추계(모형 4)

(단위: 시간, 원)

졸업후 기간	월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률 차이	연평균 임금차이	Cohort 2002 평균연봉	소득세수 감소	사회보험료 감소	부가가치세 감소	합계
1	209	67	167,485	1,380	10,049	28,858	7,872	46,778.5
2	213	142	364,325	1,680	21,859	62,773	17,123	101,755.9
3	214	194	496,623	1,800	29,797	85,568	23,341	138,706.9
4	219	167	438,262	2,208	65,739	75,512	20,598	161,850.0
합계			1,466,695		127,445.2	252,711	68,935	449,091.4

다음으로는 고용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경기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Probit모형으로 추정한 것을 사용하여, 각 코호트별 시점 간 취업확률을 구할 수 있다. <표 IV-10>의 모형 3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취업확률을 구할 수 있다. 즉, $\Phi(\cdot)$ 를 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라고 하면, 주어진 정보(Ω)하에서 개인 i 가 t 시점에서 취업할 확률은 $\Pr(U_{it} = 1|\Omega) = \Pr(U_{it}^* > 0|\Omega)$ 라고 쓸 수 있고, 이에 대한 추정은 패널 Probit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r(U_{it} = 1|\Omega) = \Phi\left(\frac{\widehat{U}_{it}^*}{\widehat{\sigma}_u}\right)$$

$$\begin{aligned} \widehat{U}_{it}^* = & 1.08 + 0.218 \times \text{exp}_{it} - 0.162 \times \text{scarexp}_{it} + 0.173 \times \text{c98exp}_{it} \\ & + 0.254 \times \text{c02exp}_{it} - 1.066 \times \text{c98}_i - 1.277 \times \text{c02}_i - 0.14 \times \text{uer}_{it} \\ & + 0.0282 \times \text{gg1}_t + 0.322 \times \text{mar}_{it}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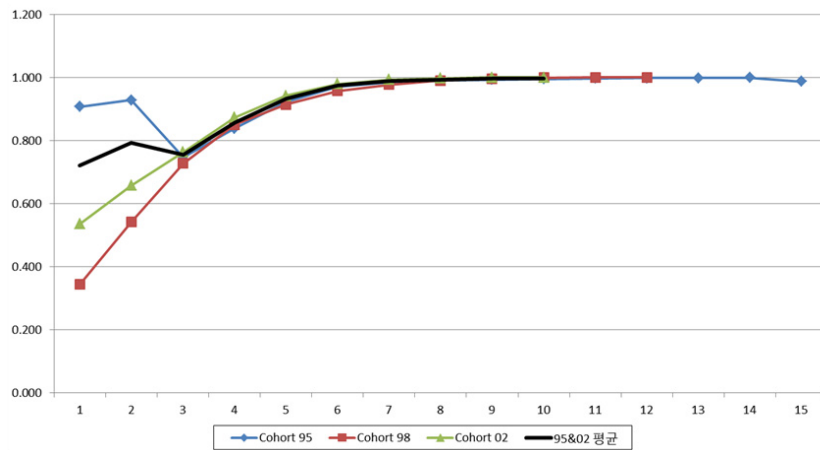
코호트별로 구한 취업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림 IV-15]에 나타나 있다. 임금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의 차이가 커서, 두 코호트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1998년 코호트의 고용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효과를 보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외국 연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은 임금의 부정적 영향에 비해 빨리 사라진다는 점이다. 고용의 경우, 3년이 지나서는 다른 코호트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처음 두 해 동안은 취업 확률의 차이가 각각 37.8%, 25.2%나 벌어지지만, 3년차에 있어서는 2.8%, 4년차에 있어서는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에 있어서 경기변동의 효과는 처음 2년까지만 고려하여 이에 따른 실업급여의 증가액을 추정해보기로 하자. 현재 데이터에서

남성의 대학 졸업연도는 2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Ⅲ장의 연령대별 실업급여 수급실적에 의하면, 평균 수급총액은 285.5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다. 경기침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998년 코호트의 경우, 일반 코호트에 비하여 첫해에는 37.8%, 두 번째 해에는 25.2% 실업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이 확률을 평균수급액에 곱한다면, 첫해에는 107.9만원, 두 번째 해에는 71.8만원의 실업수당 지급 수요가 발생한다.

[그림 IV-15] 코호트별 실업률 추정치의 추이



V. 결론

지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노동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OECD(2010)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청년층의 평균 고용률은 3%p 하락하고, 실업률은 4.5%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상으로는 실업률 증가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청년층이 비경제활동화하는 문제는 다투족의 확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시적인 하락 추세는 청년 노동시장에 단순한 실업률 지표로는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 장기적 추세로 변하게 되는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 및 잠재성장률의 둔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애 압박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크게 노동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그리고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공급 측면에서의 고학력화나 높은 이직률 문제,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등을 들 수 있고,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주요 기업의 일자리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불완전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노동시장이라는 대상에 집중하여 청년실업문

제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본고에서 중점을 두는 방향은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청년층이 겪게 되는 고용 관련 문제점이다. 지난번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침체에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청년층이다. 일자리의 감소에 따라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직장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낙인효과(Scar/Stigma effect)의 존재이다. 이는 실업의 경험이 이후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청년기 실업의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낙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낙인효과의 존재는 경기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는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실업률은 늘어나는 가운데, 취업을 하지 못한 일부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일부는 대기적 실업상태를 지속하며 이후 경기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하향취업의 경우는 이후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 가려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평균근속기간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처음 두 자료는 노동시장의 고용지표와 임금관련 지표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사용하였고, 마지막 자료는 패널분석을 통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효과의 구체적인 크기와 이의 재정에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경기변동의 효과를 보기위해 세 개의 코호트를 구분하였다. 경기 팽창기인 1995년, 극단적인 경기침체기인 1998년, 그리고 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반영하여 이후 경기 팽창기인 2002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고용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1998년 코호트가 겪는 부정적 외부충격이 해

소되기까지는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의 경우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03년의 5년의 기간 동안, 청년층의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는 다른 시기의 기간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기간에 청년층에 이직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임금방정식의 추정 결과 1998년 코호트의 초임은 오히려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더 일찍 감소추세를 경험하면서 약 6년가량 빠른 시기에 극댓값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극댓값 수준도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시간당 임금수준과 취업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코호트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1998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 모두에서 1995년 코호트에 비해 초기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수준의 회복에 있어 걸리는 시간은 약 5년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수에 있어서 감소분은 코호트에 해당하는 개인당 평균 65.4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사라져서, 약 3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기의 취업확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서,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의 평균값과 비교해 봤을 때 1998년 코호트의 취업확률은 첫해에는 37.8%, 둘째 해에는 25.2%까지 낮았다. 이러한 낮은 취업확률 혹은 높은 실업확률은 실업급여 등을 통한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자 개인에게 2년간 약 179.7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자신의 능력 혹은 의지와는 무관한 거시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다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에 비해 고용이나 임금 모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완

전한 회피(hedge)가 불가능한 충격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개인에의 영향을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줌으로써, 전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의지를 발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경기침체에 여러 경기부양책을 펴 왔고, 노동시장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본고의 결과를 통해 특히 강조할 점은, 이러한 노동시장 지원정책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지는 의미이다. 청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청년기의 실직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구직의 어려움이나 하향취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인 기대 소득수준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부 측면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에 있어 기대 세수 감소뿐 아니라 실업의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적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특화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경험 자체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실업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개인 측면의 비용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도 실업의 해결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순희·안준기, 「대졸자의 실업 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0, pp. 201~231
- 국세청, 『2011 국세통계연보』, 2012.
- 금재호,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vol. 9,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 김대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유경준(편) 『한국경제구조변화와 고용창출』 연구보고서 2004-05,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8.
- 남재량,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 _____,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a.
- _____, 「체감 청년 실업률, 몇 %나 될까?」,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b.
- 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 박기현,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NARS현안보고서』 제15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 박성준,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2005년도 정책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5.
- 박재민·김영규·전재식,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박대근·성태윤, 「한국의 개인 연령별 저축률 추정」, 『한국경제연구』 제

- 17권, 2006, pp. 149~167
- 원종학·김종면·김형준,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청년 실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윤석천,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와 직업선택』,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 2004.
-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연구보고서 2003-01,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서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2010.
- 정봉근, 『청년실업을 대비한 교육정책』,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 2004.
- 전병목,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II) - 과세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24-03,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인수·남재량·이승우,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지광수·수홍길·송송이, 『한국의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 리뷰』 제2권 제3호, 2009.
- 채창균, 『기업규모와 청년층 노동이동』,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제1호, 2006, pp. 81~103
- 채창균·장홍근·오은진·이병희·이주호·이만희,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한국개발연구원, 『미취업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 200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2006.
- 황수경·강순희·권혜자·김두순·오계택·유경준,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제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09-23, 2009.

太田聰一, 『若年者就業の経済学』、日本経済新聞社, 2010.

玄田有史, 『ジョブ・クリエイション』、日本経済新聞社, 2004.

Beaudry, P. and J. Dinardo, "The Effect of Implicit Contracts on the Movement of Wages over the Business Cyc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4), 1991, pp. 665~688

Becker, B. E. and S. Hills, "Teenage Unemployment: Some Evidence of the Long-Run Effec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2), 1980, pp. 354~372

Becker, G., *Human Capital and the Personal Distributions of Income*,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7.

Bell, D.N.F., and D.G. Blanchflower, "Youth Unemployment: Deja Vu?" *IZA Discussion Paper No. 4705*, 2010.

Bowlus, A. J., "Matching Workers and Jobs: Cyclical Fluctuations in Match Qua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2), 1995, pp. 335~350

Ellwood, D.,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Chapter 10 in Richard B. Freeman and David A. Wise(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NBER, Chicago, 1982.

Godfrey, C., S. Hutton, J. Bradshaw, B. Coles, G. Craig and J. Johnson, "Estimating the Cost of Being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at Age 16-18," *Research Report No. 346*,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Great Britain, 2002.

Gregg, P. and E. Tominey, "The Wage Scar from Male Unemployment," *Labour Economics* 12, 2005, pp. 487~509

Kahn, L.B.,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mimeo*, Yale University, 2009.

- Kahn, L. B.,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ur Economics* 17(2), 2010, pp. 302~316
- Morse, H., "Scarred Generation" *Finance & Development*, IMF, 2012
- Mroz, T. A. and T. H. Savage, "The Long-Term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41(2), 2006, pp. 259~293
- Neal, D.,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2), 1999, pp. 237~261
- Neumark, D., "Youth Labor Market in the United States: Shopping Around vs. Staying Pu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3), 2002, pp. 462~482
- OECD, *Jobs for Youth*, KOREA, OECD, 2007.
- OECD,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OECD, 2010.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OECD, 2012a.
- OECD, "No: 6 What are the returns on higher education for individuals and countries," *Education Indicators in Focus*, OECD, 2012b.
- Oreopoulos, P., T. von Wachter and A. Heisz, "The Short-and Long-Term Care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Hysteresis and Heterogeneity in the Market for College Graduates," *NBER Working Paper* No. 12159, 2006.
- Petrongolo, B. and C. A. Pissarides, "Looking into the Black Box: A Survey of the Matching Func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2), 2001, pp. 390~421
- Ryan, P.,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2001, pp.34~92
- Topel, R.H. and M.P. Ward,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1992, pp. 441~479
- von Wachter, T., J. Song, and J. Manchester, "Long-Term Earnings

Losses due to Mass Layoffs During the 1982 Recession: An Analysis Using U.S. Administrative Data from 1974 to 2004,” mimeo, 2009.

〈부록 1〉 주요국의 실업 관련 지표

A1. 미국

- 미국 노동통계청(BLS)은 Current Population Survey(CPS)를 토대로 6개의 공식적 실업률(U1~U6)을 발표
 -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 6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 기초적인 노동력 데이터는 매달 조사하여 수집하며, 특별한 주제의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분기별로 추가 조사함
 - 조사 결과를 토대로 seasonally adjusted data와 not seasonally adjusted data로 구분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monthly data를 구축
 - 성별, 연령별, 인종별, 학력별 실업자 수와 고용상태별, 사유별, 실업기간별로 분류된 실업자 수를 제공
 - 실업률 계산식
 - 대외 공식적 실업률로 OECD/ILO 등 국제기구에 보고되는 U3은 “총실업자(total unemployment)/노동력 인구(labor force)”로 정의
 - 분모인 “노동력 인구”는 군인을 제외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
 - 분자인 “완전실업자”는 노동력 인구 중 조사 주에 일이 없고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과거 4주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실시한 사람으로 정의
 - 공식적 실업률 지표(U1~U6)

- 대외 공식적 실업률 U3을 기준으로 U1, U2는 더 좁은 범위의 실업률, 노동력 불완전 활용지표(underutilization)인 U4~U6은 더 넓은 범위의 실업률을 의미
 - U1~U3은 실업자로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정의함
 - U3에 실망실업자, 한계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시켜 U4~U6을 도출
- U1~U6 지표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음
 - U1 : labor force 대비 15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의 비율
 - U2 : labor force 대비 비자발적 실직자 및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의 비율
 - U3 : labor force 대비 (구직을 원하는) 4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비율
 - U4 : labor force+실망실업자²¹⁾ 대비 U3의 실업자+실망실업자 비율
 - U5 : labor force+한계실업자²²⁾ 대비 U4의 실업자+한계실업자 비율
 - U6 : labor force+한계실업자 대비 U5의 실업자+파트타임 취업자(35시간 미만 취업자) 중 완전 고용을 원하는 자

21) 한계실업자 중 일자리 찾는 노력이 성공할 것 같지 않아 일자리 탐색을 포기한 자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22) 지난 1년간 일자리를 얻거나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

〈부표 13〉 실업률 지표에 따른 실업자 인정 범위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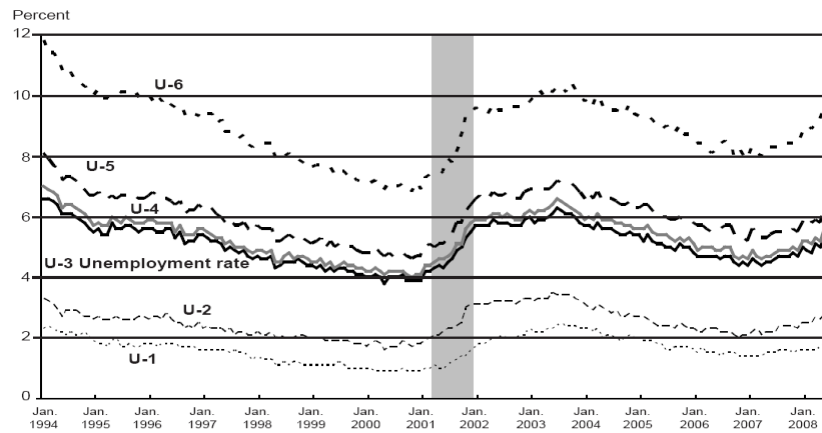
	U1	U2	U3	U4	U5	U6
(구직 희망) 15주 이상 실업 상태의 장기 실업자	○	-	○	○	○	○
(구직 희망) 비자발적 실업자, 완전 임시직 종료	X	○	○	○	○	○
(구직 희망) 4주~15주 이상 자발 실업자(OECD)	X	X	○	○	○	○
실망 실업자(한계실업자의 subset)	X	X	X	○	○	○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한계실업자)	X	X	X	X	○	○
추가적으로 일하고픈 주당 34시간 이하 취업자	X	X	X	X	X	○
주당 35시간 이상 취업자	X	X	X	X	X	X

□ 미국의 실업률 현황

○ 최근 U1~U6 현황(Moving Average Method, From 2010 4/4 to 2011 3/4)

State	Measure					
	U-1	U-2	U-3	U-4	U-5	U-6
United States	5.4	5.5	9.2	9.8	10.7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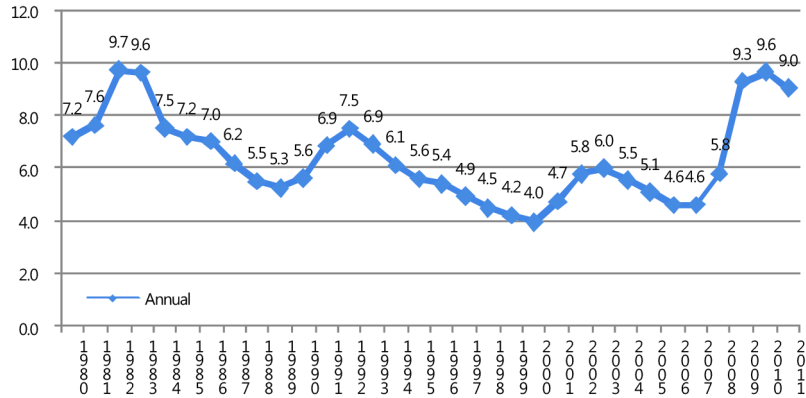
○ 연평균 U1~U6 추이(1994~2008, 각 연도 1월 기준)



주: 음영부분은 경기 침체기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Summary 08-06/June 2008, Issues in Labor Statistics

○ 연평균 실업률 추이(1980~2011)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홈페이지(<http://data.bls.gov>)

□ 실업보험통계를 이용한 실업률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통계적 실업률 외에도 실업보험통계를 이용한 실업률(insured unemployment rate, registered unemployment rate)을 발표

-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등록자 수(insured unemployed)를 실업보험통계에 나타난 피용자수로 나누어 계산
- 실업급여를 받는지 여부는 실업자를 분류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음
 - 정의상 실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미달되거나,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아예 신청하지 않는 실업자가 존재
 - 따라서 실업과 관련한 완전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청 실업률의 보조적 실업률지표로서 가치가 있음

A2. 일본

- 일본 통계국(統計局, MIC)은 노동력 조사(LFS)를 토대로 공식적 실업률을 발표함
 -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 1947년부터 매달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에 거주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 매달 2,900개 조사구에서 15가구 정도씩 약 4만가구(인구기준 약 10만명)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동 관련 지표들을 생성
 - 조사주기는 매달 마지막 날이 속한 주에 행해짐(단, 12월은 20일~26일)
 - 2002년부터는 분기마다 행하던 Labour Force Special Survey를 LFS에 통합하여 고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통계를 제공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월별 데이터 및 분기별 데이터를 원수치와 계절조정치로 나누어 구축
 - 월별 데이터는 2007년 이후 데이터부터 available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실업자수와 고용상태별, 실업기간별로 분류된 실업자수를 제공
 - 공식적 실업률 지표
 - 일본의 실업률은 “실업자/노동력 인구 \times 100(%)”로 정의됨
 - 분모인 “노동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학생과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Not in labour force)를 제외한 취업자+실업자로 정의됨
 - 분자인 “실업자”는 노동력 인구 중 조사 주에 일이 없고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과거 1주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실시한 사람²³⁾으로 정의

23) 과거 구직활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

□ 일본의 실업률 현황

○ 최근 일본의 완전 실업률 현황(2011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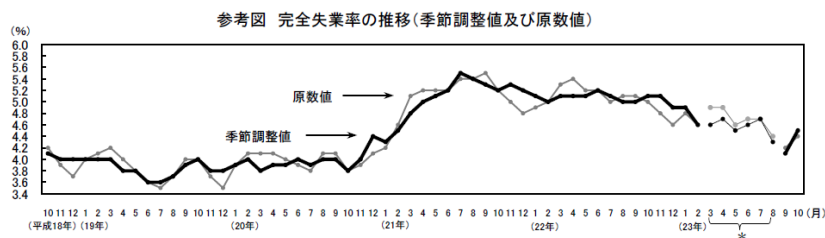
(단위: 만명, %)

	전체	남자	여자
- 원수치 -			
[인구]			
15세 이상 인구	11,039	5,331	5,708
[취업상태]			
노동력인구	6,552	3,782	2,770
취업자	6,264	3,603	2,661
완전실업자	288	179	109
비노동력인구	4,486	1,548	2,938
[완전실업률]			
전체	4.4	4.7	3.9
15~24세	7.8	9.3	6.3
25~34세	5.4	6.1	4.5
35~44세	3.9	3.6	4.3
45~54세	3.5	3.6	3.3
55~64세	4.4	5.0	3.7
65세 이상	2.4	3.1	1.3
-계절조정치-			
[취업상태]			
취업자	6,246	3,591	2,655
고용자	5,461	3,113	2,348
완전실업자	292	181	110
[완전실업률]			
전체	4.5	4.8	4.0

자료: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http://www.stat.go.jp/data/roudou/sokuhou/tsuki/index.htm#01>)

○ 월별 실업률 추이(계절조정치 및 원수치)



주: 平成23년(2011년) 3~8월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전국

A3. 영국

-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LFS)를 통해 영국 거주자의 고용상황을 조사
 -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가구조사로서 고용 및 실업에 대한 공식통계를 제공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은 영국 통계청(ONS)이 약 4만 1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북아일랜드 지역은 Northern Ireland Statistics and Research Agency(NISRA)가 약 1,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LFS를 이용하여 실업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며 추정치는 3개월 단위의 평균값을 발표함
 - 공식적 실업률 지표
 - 영국의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노동력 인구) × 100(%)”로 정의됨
 - 분모인 “노동력 인구”는 16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취업자+실업자로 정의됨(국제기준과 동일)
 - 분자인 “실업자”는 노동력 인구 중 조사 주에 일이 없고 향후 2주일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며 과거 4주일 이내에 구직 활동을 실시한 사람²⁴⁾으로 정의
 - 위 실업자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구직수당 또는 기타 급여의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자로 분류됨
- 영국의 실업률 현황
 - 최근 영국 실업률 현황(201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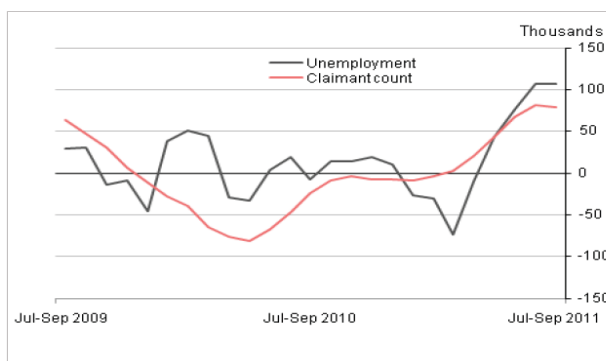
24) 취업이 되어 향후 2주일 이내에 일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을 포함함

- 실업률은 1996년 이후 그리고 실업자 수는 1994년 이후 최고치
 - 실업률은 8.3%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전년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
 - 실업자 수는 262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12만 9천명, 전년동기 대비 17만 2천명 증가
- 청년(16~24세) 실업의 규모는 직접 비교가능한 기록이 산출된 1992년 이후 최고치
 - 실업률은 해당연령 경제활동인구의 21.9%로 전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
 -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전일제 학생 포함) 실업자 수는 102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6만 7천명 증가

□ 구직수당 청구자 수(Jobseeker's Allowance, JSA)

- 구직수당 청구자 중 일부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주당 1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구직수당 청구 가능
 - 2011년 10월 현재 160만명
 - 국제적으로 합의된 실업자 정의에 부합되는 사람을 측정하는 실업자수와 상이

Quarterly changes in unemployment and the claimant count for those aged from 18 to 64 (seasonally adjusted)



Source: Work and Pensi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4. 프랑스

- 프랑스 통계청(INSEE)은 Labor Force Survey(LFS)를 토대로 공식적 실업률을 발표함
 -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가계를 대상으로 survey를 수행함
 - 1950년 시작되어, 1982년부터 정기적인 연례 조사로 수행됨
 - 이후 2002년까지는 연단위로 수행하다 2003년부터 분기단위 조사로 변경
 - sampling rate가 정확하게 1/300이 되도록 대략 6만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함
 - 공식적 실업률 지표
 - 프랑스의 실업률은 “실업자/노동력 인구×100(%)”로 정의됨
 - 분모인 “노동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학생과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Not in labour force)를 제외한 취업자+실업자로 정의됨
 - 분자인 “실업자”는 노동력 인구 중 조사 주에 일이 없고 2주일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며 과거 4주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실시한 사람 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로 정의

- 프랑스의 실업률 현황
 - 최근 프랑스 실업률 현황(2011. 3/4, 계절조정)

	ILO-unemployment rate(%)		Variation in point		Thousands
	2011 Q2	2011Q 3(P)*	over quarter	over year	2011Q 3(P)*
Total	9,1	9,3	0,2	-0,1	2 631
15~24 years	21,7	21,6	-0,1	-2,1	613
25~49 years	8,3	8,4	0,1	0,1	1 534
50 years and more	6,3	6,6	0,3	0,3	484
Men	8,7	8,8	0,1	-0,2	1 306
15~24 years	21,1	20,6	-0,5	-2,4	320
25~49 years	7,7	7,9	0,2	0,1	747
50 years and more	6,1	6,3	0,2	0,2	240
Women	9,6	9,8	0,2	0,1	1 325
15~24 years	22,5	22,8	0,3	-1,8	294
25~49 years	8,9	9,1	0,2	0,4	787
50 years and more	6,5	6,8	0,3	0,2	244

*(P) = provisional results

Covers the population of people living in households in metropolitan france, people aged 15 years or more

자료: INSEE, Labor Force Survey

○ 연평균 실업률 추이(2003~2011, 계절조정)



자료: INSEE, Labor Force Survey

A5. 그리스

- 그리스 통계청(Hellenic Statistical Authority, HSA)은 Labor Force Survey(LFS)를 토대로 실업률을 발표
 - Labor Force Survey(LFS)
 - 1981년부터 연단위로 LFS를 수행하여, 1998년부터 정기적인 조사로서 분기별로 그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월별 실업률도 공표
 - 월별 실업률은 매달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므로 sampling error가 큰 편임 (오차범위 15% 정도)
 - 분기별 실업률은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더 정확하게 추정
 - 공식적 실업률 지표
 - 그리스의 실업률은 “실업자/노동력 인구×100(%)”로 정의됨
 - 노동력 인구는 15세 이상 74세 미만의 사람으로 취업자+실업자로 정의되며, 비경제활동인구(inactive)는 제외됨
 - 실업자는 노동력 인구 중 ① 조사 주에 일이 없고, ②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하거나, ③ 조사 주를 기준으로 3주 내에 일을 시작하는 자로 정의됨
 - 그리스는 조사 주에 한 시간이라도 보수나 이익을 위해 일을 했거나, 가족기업에서 일한 자, 구직을 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임시적인 공식에 대체근로자로서 보수를 받고 일한 자도 취업자로 포함시킴

〈부표 15〉 그리스의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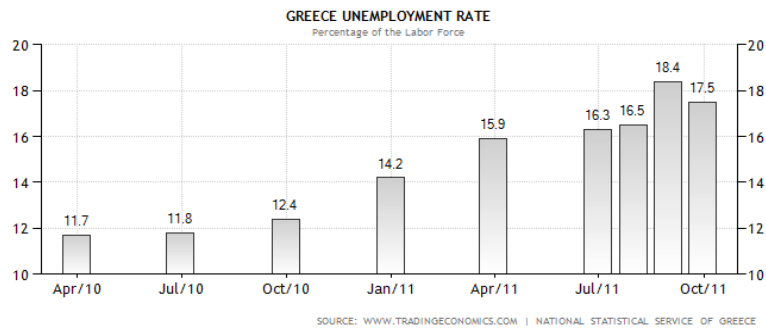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mployed	4,500,606	4,503,793	4,550,911	4,577,844	4,366,495	4,051,109
Unemployed	401,743	410,324	363,869	456,803	627,715	857,656
Inactive	4,267,002	4,298,786	4,325,644	4,240,986	4,319,930	4,440,050
Unemployment rate	8.2	8.3	7.4	9.1	12.6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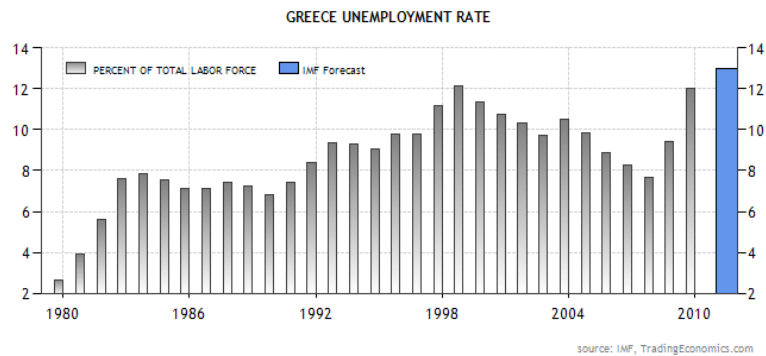
주: 각 연도 수치는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함
 자료: Hellenic Statistical Authority(HSA)

□ 그리스의 실업률 현황

○ 최근 그리스 실업률 현황(From 2010 2/4 to 2011 3/4)



○ 연평균 실업률 추이(1980~2011, projection up to 2015)



A6. 스페인

- 스페인 통계청(INE)은 경제활동인구조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EAPS)를 토대로 공식적 실업률을 발표함
-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 스페인 통계청은 1964년부터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함
 - 분기마다 3,822개 조사구에서 평균 18가구(일부 주는 22가구)씩 약 6만 5천가구(인구기준 약 18만명)를 대상으로 survey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동 관련 지표들을 생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취업자 및 실업자 수 통계 제공
 - 외국인 경제활동율과 실업율도 별도로 조사
- 공식적 실업률 지표
 - 스페인의 실업률은 “실업자/활동 인구(=노동력인구)×100(%)”로 정의됨
 - 분모인 “활동 인구(Active persons)”는 16세 이상 인구 중 비활동인구(Inactive population)를 제외한 취업자+실업자로 정의됨
 - 분자인 “실업자”는 노동력 인구 중 조사주간에 일이 없고,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조사주간(1주)동안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²⁵⁾으로 정의
 - 스페인은 적어도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full-time 노동자나, 3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part-time 노동자, 대체근로자도 취업자로 인정

25) 과거 구직활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

□ 스페인의 실업률 현황

○ 최근 스페인 실업률 현황(2011 3/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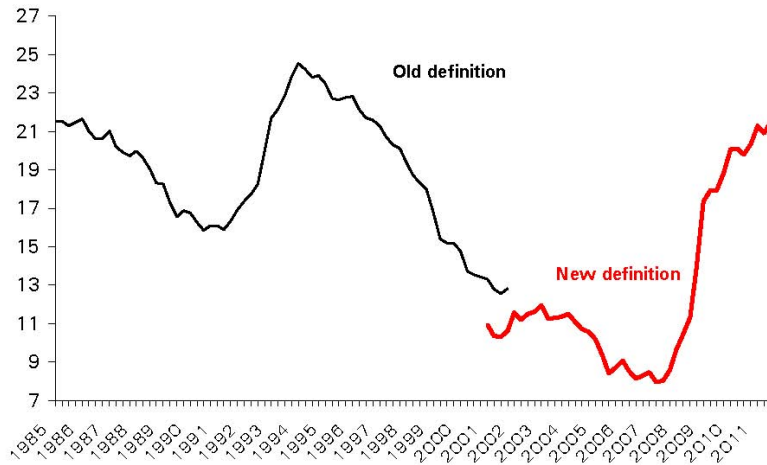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11 3/4	전분기(2011 2/4)		전년동기(2010 3/4)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16세 이상 인구	38,487.8	6.6	0.02	2.3	0.01
활동 인구	23,134.6	-2.1	-0.01	13.1	0.06
Employed	18,156.3	-146.8	-0.8	-390.5	-2.11
Unemployed	4,978.3	144.7	2.99	403.6	8.82
비활동 인구	15,353.2	8.7	0.06	-10.8	-0.07
활동율	60.11	-0.02		0.03	
실업률	21.52	0.63		1.73	

자료: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INE)

○ 연평균 실업률 추이(1985~2011)

Unemployment rate



자료: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INE)

〈부표 16〉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실업자 정의 및 실업률 산출 방법

국가	Survey		실업자 정의 조건			계산식
	명칭	frequency	연령 조건	상태조건	기타추가대상	
미국	CPS	monthly	16세 이상	① 조사 주에 일없음 ② 곧바로 취업가능상태(일시적 질병 제외) ③ 과거 4주일 내 구직활동	해고된 노동자로 전직(前職)복귀 위해 대기 중인 자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일본	LFS	monthly quarterly	15세 이상	① 조사 주에 일없음 ② 곧바로 취업가능상태 ③ 과거 1주일 내 구직활동	과거 구직활동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영국	LFS	monthly	16세 이상	① 조사 주에 일없음 ② 2주일이내 취업가능상태 ③ 과거 4주일 내 구직활동	2주일 이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프랑스	LFS	quarterly	15세 이상	① 조사 주에 일없음 ② 2주일이내 취업가능상태 ③ 과거 4주일 내 구직활동	3개월 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그리스	LFS	monthly quarterly	15세 이상 74세 미만	① 조사 주에 일없음 ③ 과거 4주일 내 구직활동	조사 주를 기준으로 3주 내에 일을 시작하는 자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스페인	EA PS	quarterly	16세 이상	① 조사 주에 일없음 ② 곧바로 취업가능상태 ③ 과거 1주일 내 구직활동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ILO	-	-	15세 이상	① 조사 기간에 일없음 ② 조사 기간에 취업가능 ③ 특정기간에 구직활동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EU	EU 노동력조사	-	15세 이상 74세 미만	① 조사 주에 일없음 ② 2주일이내 취업가능상태 ③ 과거 4주일 내 구직활동		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주: 1. 미국과 영국의 노동력 인구는 군인이 제외된 수치임
 2. EU는 구주통계국에 의한 정의

〈부록 2〉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평가

1. 고용노동부, 20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1.3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 임무

- 고용정책의 총괄,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근로생활의 질 제고, 안전일터 조성 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비전

- 일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공정사회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13	20	64	132

I.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한다.

1. 근무형태 다양화로 일자리를 늘린다.
2. 청년고용을 촉진한다.
3. 한국형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4. 일자리 정책 운용 체계를 확립한다.

II.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한다.

1. 근로 유인형 복지를 정립한다.
2. 빈곤탈출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III.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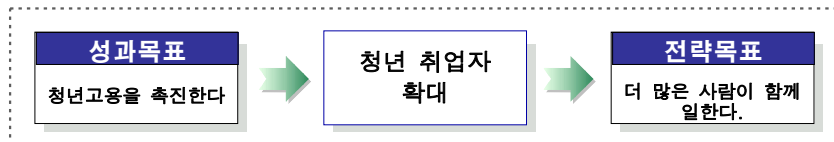
1. 산재 걱정없이 일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2. 기본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한다.
 3. 근로생활의 질을 높인다.
- IV. 노사 한마음 일터를 가꾼다.
1.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안착시킨다.
 2.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를 확립한다.
 3.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인력을 개발한다.
 4.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 청년고용 촉진 관련 세부 추진계획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I-2. 청년고용을 촉진한다.	2	6	13

○ 주요 내용

- 청년이 하고 싶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7만 1천개 이상 창출
- 학교에서 바로 일터로: 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 청년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 연수 및 알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편
- 일자리 관련 통합정보 및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고용서비스망 확충



-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청년고용률(%)	41.6	40.5	40.3	40.9	최근 3년치의 평균값(40.8)보다 높게 설정	청년취업자수/청년 생산가능인구 월 평균 취업애로 청년층수*	통계청 경황조사
취업애로청년수 (천명)	419	486	491	464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465)보다 적극적인 목표치로 464천명 설정	*Σ(실업자, 비경황인구중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노동시장적 사유로 주36시간 미만 근로자)	통계청 경황조사

○ 관리과제별 예산사업 내역 및 성과지표

①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단위: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비 계		308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1051)		313	일반회계	단위사업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300)		(308)		세부사업

주: 창조캠퍼스('11년 20억원): 청년취업아카데미 내역사업

성과지표	실적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목표치 '11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수료율(%)	<신규>	60	아카데미 참여기간(최소 2월~최대 1년)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11.3월 사업개시 예정)	(수료자수/참여자 수)*100	산업인력공단 제출자료(통계 확인)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만족도(%)	<신규>	70	신규 사업으로 유사사업 이전 목표치를 참조하여 설정	('약간만족' 이상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 * 100	7점 척도 방식의 참여자 전수조사 방식의 만족도 조사
창조캠퍼스 참여자 만족도(%)	<신규>	70	신규 사업으로 유사사업 이전 목표치를 참조하여 설정	('약간만족' 이상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 * 100	7점 척도 방식의 참여자 전수조사 방식의 만족도 조사

②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단위: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비 계	1,764	1,93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43)	1,065	1,456	일반회계	단위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301)	(1,065)	(1,456)		세부사업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1050)	699	478	고용보험기금	단위사업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350)	(699)	(478)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정규직) 취업률 (%)	-	79.9	85.5	83	최근 2년간 실적을 감안하여 실적 평균(82.7%)보다 상향하여 목표 설정	(정규직 취업자수/인턴 수료자수) * 100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참여자 만족도 (%)	-	81.0	78.3	80	'10년 실적 등을 감안하여 2개년 평균(79.7%)보다 상향하여 목표 설정	('약간만족' 이상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 * 100	· 외부 설문조사 기관 의뢰 · 인턴 참여자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조사 · 7점 척도
고용유지율 (%)	〈신규〉			55	정규전환 후 6개월 이후 고용유지율	(정규직전환 후 6개월 이후 고용유지자/정부지원 종료 시점의 참여자 수)*100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③ 청년취업진로지원

(단위: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사업비 계	150	85		
학교와 노동시장연계 지원(1055)	150	85	고용보험기금	단위사업
·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350)	(150)	(85)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수혜비율(%)	-	-	23.4	25.0	재학생의 1/4이상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목표치로 설정	프로그램 참여자수/재학생수 *100	사업결과보고
취업지원관 채용인원(명)	-	-	154	200	전년대비 30% 상향조정	연간 목표대비 달성률	채용실적 보고서
취업지원관 지원학교 취업률 비교	<신규>			2.0	취업지원관 채용학교의 취업률 제고효과	취업지원관 채용학교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	교과부 취업률 발표자료

④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단위: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사업비 계	251	28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1035)	251	285	일반회계	단위사업
▪ 글로벌 취업지원(304)	(251)	(285)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연수취업률 (%)	26.1	23.4	34.8	37.2	'10년 목표치 37.2% 유지 ('10년 실적 대비 2.4% 상향조정)	(취업인원/연수목표 인원)*100%	통계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알선취업자 수	313	369	570	500	글로벌 청년리더 정부지원 협의회('09.10.28)의 『해외알선취업 연도별 계획』의 '11년 목표로 설정	알선취업자수	통계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

(단위: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				
사업비 계		15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1131)	- (838)	15 (730)	일반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306)	-	15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08	'09 '10				
훈련생 중도탈락률	〈신규〉		35	안양소년원 직업훈련생 중도탈락률 반영(훈련성격상 가장 유사)	순중도탈락자수 (조기취업미포함)/ 전체참여자수*100	직업훈련 전산망

⑥ 차세대 고용서비스망 구축

(단위: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차세대 고용서비스망 확충				
사업비 계	4	71		
고용안정전산망관리(1052)	4 (152)	71 (232)	고용보험 기금	단위사업
▪ 고용안정전산망관리(350)	4 (152)	71 (232)		
- 고용정보시스템기능강화	4	4		내역사업
- 차세대종합고용서비스 관련	-	67		내역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08	'09	'10				
워크넷 일평균 접속자수 (만명)	24.1	27.2	30.7	32.2	워크넷(잡영)기능 강화를 통해 워크넷 방문자수가 전년대비 5%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워크넷 월 방문자수 / 월 평일수	웹로그분석툴 활용(웹로그 수치가 비정상적이거나 공휴일, 토요일 등 비근무일은 제외)

2. 고용노동부, '10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2011.2

청년고용과 관련이 있는 관리과제별 자체평가결과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평가등급)
청년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 공동과제)	보통
대학취업지원기능 강화	보통
창직·창업 인턴제	다소 미흡
산학연계형 맞춤형훈련 실시	보통
사회적 기업 육성	다소 우수
국가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보통
민간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보통
국제사회 등 노동이슈 대응	다소 우수

청년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

○ 주요 성과

-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구축한 우수 중소기업 DB를 대졸자 전용 취업알선 사이트인 잡영(job young)과 연계시켜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준비생에 대한 정보 미스매치 문제 해소에 기여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달성	○ 당초 설정한 목표치 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th> <th>목표치</th> <th>실적치</th> <th>목표달성도 (%)</th> </tr> </thead> <tbody> <tr> <td>청년층 전용 홈페이지(잡영) 방문자수 <대상기간 : '10.7~12월></td> <td>11,000 (1일평균)</td> <td>11,771</td> <td>107%</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청년층 전용 홈페이지(잡영) 방문자수 <대상기간 : '10.7~12월>	11,000 (1일평균)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청년층 전용 홈페이지(잡영) 방문자수 <대상기간 : '10.7~12월>	11,000 (1일평균)	11,771	107%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잡영 방문자수'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대표성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음						
3. 집행과정의 적절성	다소 우수	○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시의 적절하게 설정됨						
4.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잡영방문자수 성과지표상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대학 행사,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잡영사이트 활용방안 등 강의 및 홍보 리플렛 요청 등 호응						

□ 대학취업지원기능 강화

○ 주요 성과

- 취업관련 전문 인력의 학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마련
- 학교-정부 간 청년고용사업 연계 역할 수행
- 대학취업지원역량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부분달성	○ '대학취업지원 역량평가지표 개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취업지원관 채용인원' 지표는 목표치에 미달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th> <th>목표치</th> <th>실적치</th> <th>목표달성도 (%)</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취업지원 역량평가지표 개발</td> <td>지표개발</td> <td>지표개발</td> <td>100</td> </tr> <tr> <td>취업지원관 채용인원</td> <td>150명</td> <td>138명</td> <td>92</td> </tr> <tr> <td>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td> <td>20%</td> <td>23.4%</td> <td>117</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대학취업지원 역량평가지표 개발	지표개발	지표개발	100	취업지원관 채용인원	150명	138명	92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	20%	23.4%	117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대학취업지원 역량평가지표 개발	지표개발	지표개발	100													
취업지원관 채용인원	150명	138명	92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	20%	23.4%	117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대학의 취업지원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로 적절하게 구성됨
3. 집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추진되었으며, 취업지원관계가 '10년 도입됨에 따라 초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음
4.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대학 내 취업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학사일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에 기여 ○ 일부 취업지원관의 경우 교수·직원 대상 취업관련 교육 실시, 취업교과목 강의 담당으로 학내 취업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창직·창업 인턴제

○ 주요 성과

- 412개 기업에서 666명(목표인원 500명 대비 133.2%)을 인턴으로 채용(기업당 1.6명), 인턴 구인 1,265명(697개 기업), 구직자 886명
- 인턴제 만족도가 5.25점(7점 기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턴과 기업 모두 만족하고 있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달성	○ 당초 설정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인턴 참여자 만족도	70	75	107.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 미흡	○ 만족도는 인턴의 입장에서 능력개발 및 경력 형성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과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나 궁극적으로는 인턴 참여인원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집행과정의 적절성	다소 미흡	○ 집행계획의 일정이 비교적 적절하게 설정되어 정상 추진되었으나 당초 추진계획 수립 시 사업 개시를 4월로 한 것은 사업초기 참여 부족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음			
4. 정책의 효과성	다소 미흡	○ 목표 인원 500명을 초과하는 인턴이 채용되어 창직·창업에 요구되는 지식·능력을 현장형으로 습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인턴을 마친 후의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남궁인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12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년고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부표 17〉 2003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현황

(단위: 억원, 명, 개)

대책명	일자	예산	지원인원	사업수	부처수
청년실업 종합대책	2003.9	5,390	126,453	31	11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5.1	7,885	252,716	53	13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8.8	-	-	-	-
청년고용 추가대책	2009.3	13,240	397,198	38	13

주: 1. 2004년 예산 기준, 2005년 예산기준, 2009년 예산(추경 포함) 기준

2. 2008년은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음

3. 청년고용 추가대책(2009.3)의 사업수(38개)는 미래산업 청년리더육성 프로젝트(9개 부처, 44개 세부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처리한 수치임

4. 학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실업 보완대책(2007.4)은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음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재정리

- 2010년에는 2009년 3월의 「청년고용 추가대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전체 예산 9,397억원, 지원인원 26만 1,737명의 규모로 관련 사업을 추진
 - 관광분야 청년인턴제, 고용서비스 인턴제, 권역별 직업능력 중심대학 운영 등 6개 사업 추가
 - 사회서비스 벤처창업지원 제외
 - 학습보조교사, 미취업 대졸생 학교 내 채용지원의 유형을 단기

일자리제공에서 청년인턴지원으로 변경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대상 36개 사업 중 취업실적 파악이 불가능한 3개 사업²⁶⁾을 제외한 33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 1억원당 취업인원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2.17명, 2008년 20.89명, 2009년 18.22명으로 나타났음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투입예산 대비 취업인원의 성과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부표 18〉 청년고용대책 평가대상 36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유형	순번	사업명	2009 실적		2010	소관
			예산	지원인원	예산	
총계		36개 사업	792,275	236,635	711,738	
고용인센티브	1	취업장려수당	1,195	935	3,880	고용노동부
	2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2,099	8,512	31,585	고용노동부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26,264	32,727	176,481	고용노동부
	4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	960	253	2,280	문화체육관광부
직업훈련	5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39,617	15,498	33,700	고용노동부
	6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79,663	28,149	80,700	고용노동부
	7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32,454	3,396	29,246	고용노동부
	8	기술기능인력양성	36,926	18,534	32,831	고용노동부
	9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	39,653	8,764	35,541	고용노동부
	10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14,000	1,661	15,400	교육과학기술부

26)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과 한미대학생 취업연수 사업(WEST)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며 대상자가 대학 재학생 위주여서 취업성과 파악이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또한 대학 재학생의 직장 체험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므로 취업성과와 직접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아 제외하였음

(단위: 백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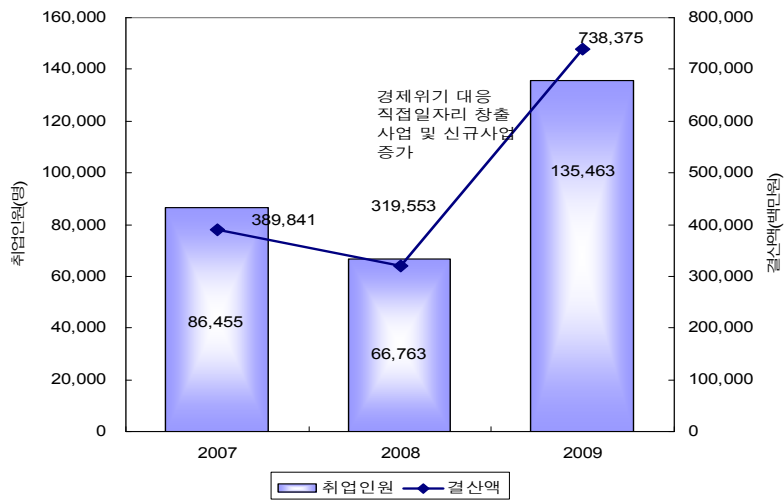
유형	순번	사업명	2009 실적		2010 계획	소관
			예산	지원인원	예산	
	11	기업공고(전문대)인력양성	10,375	2,210	9,500	중소기업청
	12	인력채용패키지사업	8,890	3,230	5,200	중소기업청
체험·연수 ·인턴	1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1,340	25,088	16,071	고용노동부
	14	*글로벌현장학습	1,200	300	1,200	교육과학기술부
	15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1,536	339	4,669	교육과학기술부
	16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5,106	912	5,000	교육과학기술부
	17	*해외취업연수	18,444	4,643	22,230	고용노동부
	18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317	30	320	여성가족부
	19	*해외농업인턴	110	19	189	농림수산식품부
	20	*글로벌무역전문기양성	6,387	947	5,748	지식경제부
	21	*플랜트 해외인턴	2,138	404	1,926	지식경제부
	22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1,345	300	1,212	지식경제부
	23	*해외농업연구인턴	280	20	280	농촌진흥청
	24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	630	45	691	농촌진흥청
	25	*해외건설인력양성	2,300	1,145	2,300	국토해양부
	26	농산업인턴제	935	97	1,260	농림수산식품부
직접일자리 창출	27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37,431	4,846	35,989	보건복지부
	28	정부 출연기관 인턴제	29,918	2,138	14,105	교육과학기술부
	29	고용서비스 인턴제	16,008	1,370	12,097	고용노동부
	30	학습보조교사	77,200	16,181	76,950	교육과학기술부
	31	대학 내 채용지원	23,934	2,545	7,920	교육과학기술부
	32	자치단체 청년인턴제	37,373	13,890	17,878	행정안전부
	33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 채용	50,368	6,806	15,283	행정안전부
	34	공공기관 청년인턴	-	14,101	-	기획재정부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35	*해외취업알선	1,965	-	2,891	고용노동부
	36	청년층뉴스타트프로그램	13,914	16,600	9,185	고용노동부

주: *표시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해외취업과 해외인턴 부문에 해당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재정리.

○ 연도별 투입예산 및 취업인원

- 2007년 3,898억 4,100만원 투입 → 8만 6,455명 취업
- 2008년 3,195억 5,300만원 투입 → 6만 6,763명 취업
- 2009년 7,383억 7,500만원 투입 → 13만 5,463명 취업

[부도 17] 청년고용대책 연도별 재정투입액 및 취업실적 현황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정책수단 유형별로 구분하면, 2007년과 2008년에는 고용인센티브 유형, 2009년에는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유형에 속하는 사업의 투입예산 대비 취업인원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 제시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출연기관 인턴 등 효과가 제한적인 단기처방 사업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청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고졸 이하의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강화
- 청년층 취업 준비생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이동을 활성화시

킬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인턴십 제도 활성화

- 제한된 예산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상담, 직업훈련, 정보제공 및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한 포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4. 금재호, 「청년들이 나아갈 취업의 방향과 정부의 과제」, 『2011년 청년, 우리는 일하고 싶다: 청년실업의 오늘과 그들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100여개 세부 정책과제들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대두(금재호 외, 2007)
 - 사업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되나, 이들 사업의 절반 정도는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정책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정책효과가 발현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 상당수의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중복
 - 사업추진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사후관리시스템 미비

- 이러한 평가에 따른 청년고용대책의 개선방향
 - 청년고용대책의 세부 과제수를 가능한 줄이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청년고용대책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에 분산된 대책을 통합
 - 청년고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필요
 - 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확대 정책 중요
 - 고용보호법제의 (한시적) 완화, 기업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단위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국문요약>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홍승현 · 원종학

지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노동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상으로는 실업률 증가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시적인 하락 추세는 청년 노동시장에 단순한 실업률 지표로는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 장기적 추세로 변하게 되는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 및 잠재성장률의 둔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압박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청년층이 겪게 되는 고용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번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침체에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청년층이다. 일자리의 감소에 따라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히 청년기 실업이 가지는 낙인효과(Scar/Stigma effect)의 존재이다. 이러한 낙인효과의 존재는 경기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는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1998년 코호트가 겪는 부정적 외부충격이 해

소되기까지는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의 경우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03년의 5년의 기간 동안, 청년층의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는 다른 시기의 기간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기간에 청년층의 이직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임금방정식의 추정 결과 1998년 코호트의 초임은 오히려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더 일찍 감소추세를 경험 하면서 약 6년가량 빠른 시기에 극댓값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극댓값 수준도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시간당 임금수준과 취업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코호트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1998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 모두에서 1995년 코호트에 비해 초기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수준의 회복에 있어 걸리는 시간은 약 5년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수에 있어서 감소분은 코호트에 해당하는 개인당 평균 65.4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사라져서, 약 3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기의 취업확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서,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의 평균값과 비교해 봤을 때 1998년 코호트의 취업확률은 첫해에는 37.8%, 둘째 해에는 25.2%까지 낮았다. 이러한 낮은 취업확률 혹은 높은 실업확률은 실업급여 등을 통한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자 개인에게 2년간 약 179.7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자신의 능력 혹은 의지와는 무관한 거시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다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에 비해 고용이나 임금 모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완

전한 회피(hedge)가 불가능한 충격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개인에의 영향을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줌으로써, 전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의지를 발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경기 침체에 여러 경기부양책을 펴 왔고, 노동시장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본고의 결과를 통해 특히 강조할 점은, 이러한 노동시장 지원정책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지는 의미이다. 청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청년기의 실직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구직의 어려움이나 하향취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인 기대 소득수준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부 측면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에 있어 기대세수 감소뿐 아니라 실업의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경험 자체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실업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개인 측면의 비용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Graduating during the Recession and Its Medium-term Implications on Public Finance

Seung Hyun HONG, Jonghak WEON

The recent global crisi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bor markets, especially the youth labor markets. OECD(2012a) points out that disproportionately large numbers of young people suffered job losses during the crisis, leading to a 3%p drop in the average employment rate and a 4.5%p increase in the averag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th labor markets in OECD member countries between 2007 and 2009. Although Korea fared relatively well in terms of major indices, youth labor market issues have long been at the center of government labor market policy targets. As the employment rate and the unemployment rate among youth show steady downward trend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over possible productivity, potential growth slowdown and associated society-wide cost increases.

This study examines Korean youth labor market problems from a macroeconomic point of view, whi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youth labor market studies, and assesses the possible medium-term fiscal implications of the recession stricken youth labor market. Economic downturns usually reduce job openings and increase unemployment rates. Finding a new job or keeping the existing position is difficult for everyone but it can be particularly hard for

young workers, who face less job opportunities with higher levels of competition during recessions. In addition, there is a scarring/stigma effect for young workers. The temporary negative labor market situation can have a long-term negative impact on one's labor market experience.

The scarring effects pose additional negative risks for young workers who graduated during the recession. To reduce possible negative scarring effects, one who faces higher competition and less opportunities upon graduation may choose to be under-employed or to continue on to higher education, waiting for economic upturn. With reduced economic activities, the automatic stabilizer begins to work and the government revenues tend to reduce with smaller personal income tax, consumption tax,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tc. At the same time, government spending needs tend to increase with more unemployment benefit requests and more labor market policies. Again, the problem of the youth labor market is that the temporary negative shock can have a negative fiscal impact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Focusing on male college graduates during the recession(1998) and the booms(1995, 2002), this study finds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and wage rates among different cohort groups and their fiscal implications. Those who graduated during the recession tend to have a shorter tenure in the early years of work experience, to suffer negative wage shock in the beginning which takes about 5 years to catch up, and to experience significantly negative employment shock which takes about 3 years to disappear. With negative wage shock, the expected revenue decrease from an individual graduating during the recession is approximately USD 60.

This study finds that those who graduate during a recession suffer

from uncontrollable external shock and the risks of scarring effects tend to extend their negative impact for a longer-period of time.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using many labor market policy measures, special attention is needed to reduce the sustained negative impact of the early labor market experience.

홍승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장광남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研究報告書 12-09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2012년 12월 24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홍승현·원종학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07-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